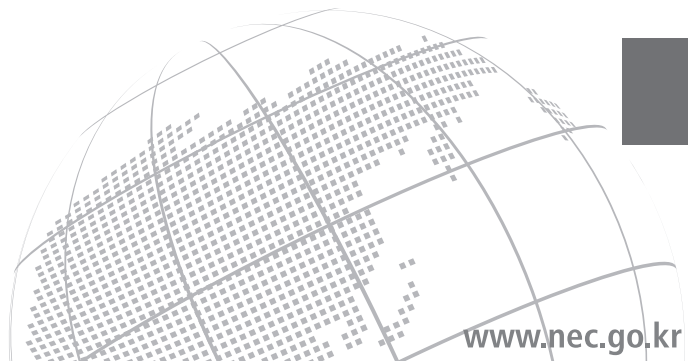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당학회(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의뢰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

Contents

- PART 1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 / 3
한국정당학회
- PART 2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 65
여의도연구소(새누리당)
- PART 3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 163
민주정책연구원(민주통합당, 現 민주당)
- PART 4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 275
진보정의연구소(진보정의당, 現 정의당)
- PART 5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 281
진보정책연구원(통합진보당)

PART 1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

- I. 정책연구소 평가 추진배경 및 평가 근거
 - II. 정책연구소와 대의민주주의 : 이론과 쟁점
 - III. 정책연구소 활동 평가
 - 1. 정책연구소 기본현황 분석
 - 2. 정책연구소 운영성과 분석
 - 1) 정책연구소 활동 형태
 - 2) 정책연구소 연구와 정책개발 활동
 - 3) 정책연구소 자료 발간과 홍보 활동
 - 4) 정책연구소 교육과 연수 활동
 - IV. 정책연구소 운영과 평가의 제도적 개선방안
 - 1. 정책연구소 운영의 제도적 개선방안
 - 2. 정책연구소 평가의 제도적 개선방안
 - 1) 현행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의 문제점
 - 2)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보고 개선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

I. 정책연구소 평가 추진 배경 및 평가 근거

과거 한국은 정당들의 조직적 동원 경쟁이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금권선거와 부정부패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고비용의 정치구조가 구축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와 네거티브 선거운동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책에 기반한 건전한 선거 경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선거 이후에도 정책 추진과 실현에 있어서 혼동과 논란이 가중되어 책임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저효율의 정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의도연구소와 국가전략연구소와 같은 초기 행태의 정당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가 출현하여 제한적 수준에서 특정 이념, 가치, 정책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물적 토대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책연구소들이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17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계기로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7대 총선에서 전국적 수준의 정책 정당화를 기치로 내건 열린우리당이 승리를 하였고, 1인 2표 병립제의 도입에 따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정치 선진화 구현이라는 기치 하에 정책연구소의 설립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¹⁾ 뿐만 아니라 이후 2004년 3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토대가 안정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1) 2000년대 접어들어 한국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치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과 같은 새로운 국내외 현안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연구소가 활성화된 측면도 존재한다(황윤원 2008, 387).

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진행하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었다.²⁾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물적 토대가 마련된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이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소가 인력과 예산에 걸맞지 않게 활동이 부진하였다는 점, 계획성이 없이 정치 상황과 일정에 따라 운영되었다는 점, 대부분의 연구과제들이 1개월 이하의 초단기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어 중장기적인 차원의 정책 개발에 소홀하였다는 점, 수행 연구과제 대부분이 내부 연구진에 의하여 진행되어 전문성이 부족하였다는 점, 특정 분야에 연구가 편중되어 있다는 점, 연구와 정책 개발의 성과에 대한 자료집 발간이나 홍보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6; 김형준·김도중 2011; 신두철 20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황윤원 2008).

이처럼 정책연구소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개혁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연구소의 반응은 적극적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를 거치면서 정책연구소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들이 전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2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는 “정당 싱크탱크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후 당 최고위원회에서 여의도연구소 혁신방안을 확정하는 행보를 보였다. 또한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2013년 3월 14일 정책연구소 개혁을 위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행보는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과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정책연구소 관련 개혁 요구들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권이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느꼈던 정책의 중요성, 다시 말해 “정책이 표가

2) 정책연구소의 제반 활동에 대한 평가의 법률적 근거는 「정당법」 제35조 3항과 4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법」 제35조 3항에서는 “정책연구소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법」 제35조 4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된다”는 점을 비로소 진지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방증해준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동안 정당의 선거용 부속기관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정책연구소가 어떻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연구소가 대의민주주의의 정책선거 및 책임정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연구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자원과 성과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책연구소 개혁안들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정책연구소 운영 및 평가방법의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정책연구소의 현황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책연구소의 자원과 성과를 구분하여 자원의 경우 정당 내에서의 정책연구소의 위상과 조직 구성, 그리고 재정 구조 등으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연구소의 위상과 조직 구성의 경우에는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그리고 정책연구소의 재정 구조의 경우에는 재정 안정성, 연구비 중심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보고서로는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얻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12년도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서를 활용한 분석전략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 민주통합당의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의당의 진보정의연구소, 통합진보당의 진보정책연구원 등 총 네 개 정당을 중심으로 2012년 이들의 연구 자원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연구 자원을 재정과 연구 인력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재정면에서는 전체 수입, 평균 인건비, 정책개발비 비중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연구 인력면에서는 박사 및 석사급 연구원의 비중과 직원의 비중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성과면에서는 연구 논문, 정책 자료집, 교육 자료집 발간 등의 자료 발간 실적과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이용한 홍보에 초점을 두어 홍보활동 실적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최근의 활동실적, 즉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기에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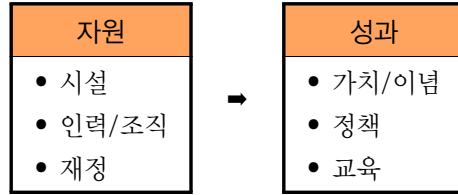
II. 정책연구소와 대의민주주의: 이론과 쟁점

정책연구소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의 문제는 정책선거와 책임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책선거와 책임정치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정책들을 제시하여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약한 정책들을 임기 중에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차기 선거에서 이에 대한 공과(功過)를 유권자들로부터 엄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책선거와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치적 순환구조이다(Downs 1957; Key 1966; Robertson 1976; 김희민·리처드 포딩 2007; 조진만 2008; 최준영 2008).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한국의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 내지는 공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차분히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정당 중심의 경쟁적 정책선거와 책임정치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원칙적이고 정략적인 정당정치의 병폐들과 이로 인하여 심화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들이 정책적 차이를 중심으로 건전하게 선거경쟁을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선거 이후 정당의 정책 이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평가를 토대로 책임정치가 실현되는 모습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정당이 유권자의 정책적 선호와 요구들을 파악하여 구체화된 정책으로 제시하고 홍보하는 역할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의 싱크탱크(think tank)인 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Dickson 1972; 강원택 2006; 박명준 2012; 정서환 1997; 황윤원 외 2003). 왜냐하면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연구소는 독립적인 시설과 전문적인 연구 인력,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기반으로 정당의 가치/이념, 정책, 교육과 관련한 업무들을 관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책연구소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들을 기반으로 정당의 가치, 이념, 정책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당원 및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 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다만 이와 같은 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하여 세 가지 핵심적인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자원적 차원에서 정책연구소의 재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정책연구소의 다른 자원인 시설이나 인력/조직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정책연구소의 재정 조달 방식은 이 문제를 포함하여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의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정책연구소가 재원을 개인이나 기업(단체) 등으로부터의 기부를 통하여 마련하는가 아니면 국가가 보조금의 형태로 직접 또는 간접 지원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나 활동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둘째, 만약 정책연구소의 주요 재원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형태라면 국고보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거대정당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이 배분되는 경우와 군소정당들의 대표성과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 때 문제는 한정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주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정치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정당들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한정된 국고보조금을 거대정당과 군소정당이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결과적으로 거대정당은 기존에 자신이 받았던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군소정당에게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정당과 적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군소정당의 국고보조금이 이에 상응하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또한 대표성의 관점에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군소정당에 너무 적은 국고보조금을 배분한다면 그 활동이 재정적

문제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정치권이 합의하여 거대정당과 중소정당의 대표성을 균형적으로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 절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셋째, 성과적 차원에서 정책연구소의 기능과 활동을 어느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정책연구소의 경우 특정 정당 소속 또는 특정 정당과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성과적 차원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소는 특정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 때 문제는 이와 같은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정책연구소의 경우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는 것을 자신의 주된 임무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좀 더 폭 넓은 차원에서 정책연구소는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이념들을 홍보하고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그 기능과 활동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다음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는 정책연구소의 경우 미국의 싱크탱크 유형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Smith 1991). 그리고 정책 개발보다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강조하는 정책연구소는 독일의 정당재단 유형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되는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싱크탱크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후원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주로 특정 정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³⁾ 반면 독일의 정당재단들은 전적으로 국고의 지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의 정당재단들은 특정 정당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 개발이나 활동보다는 포괄적이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국제협력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3) 예를 들어 헤리티지재단의 경우 예산의 70% 이상을 민간 기부금으로부터 조달하는데 개인 기부자의 수는 20만 명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싱크탱크들도 예산의 60% 이상을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채도하는 조건 없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임재주 2012, 593).

〈표 1〉 미국의 싱크탱크와 독일의 정당재단 비교

국가	미국		독일	
명칭	브루킹스	헤리티지	콘라드 아데나워	프리드리히 에버트
설립 연도	1916년	1973년	1964년	1925년
주요 활동	정책 연구	정책 연구	민주시민교육과 국제협력	민주시민교육과 국제협력
정치성향	중도 (민주당 성향)	보수 (공화당 성향)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능적 성격	민간 정책연구소	민간 정책연구소	정당 공익재단	정당 공익재단
재원 조달	개인·기업 후원	개인·기업 후원	국고 지원	국고 지원
예산	132,000,000달러 (2012년)	81,000,000달러 (2011년)	169,000,000달러 (2012년)	174,000,000달러 (2012년)
직원	377명 (2012년)	334명 (2011년)	563명 (2012년)	620명 (2010년)

※ 출처: 임재주 2012; 중앙일보(2013/04/01).

한국의 경우 정책연구소는 거의 전적으로 국고의 지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정책연구소는 특정 정당의 선거용 부속기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그 활동은 정파적인 색채가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행 「정당법」 제38조 1항에 의하면 한국의 정책연구소는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우 정책연구소가 당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당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⁴⁾ 그러므로 한국의 정책연구소는 기본적으로 국고의 지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미국의 싱크탱크와 독일의 정당재단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정책연구소의 재원 조달 방식과 이와 연계된 역할과 활동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한국의 정책연구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4)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정책 연구소가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정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위상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성과도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책연구소는 향후 그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고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한국의 정책연구소는 미국의 싱크탱크와 독일의 정당재단을 합친 혼합적 형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같은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책연구소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후원을 허용할 경우 여당 소속 정책연구소에 후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농후하다.⁵⁾ 그러므로 한국의 정책연구소는 기본적으로 국고 지원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일정 수준 자구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국고의 지원 비중이 큰 상황 속에서는 정책연구소가 본연의 업무인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부는 비대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책연구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관료와 정치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료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icci 1993).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소가 관료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 분석과 개발, 그리고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들을 일반 유권자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경우 정책선거와 책임정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민감한 정책 사안들에 대하여 정책연구소들 사이의 다각적인 논의가 사전적으로 진행된다면 정치권에서의 정책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적 정책 도출의

5)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경우 1975년부터 여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자금 조달이 불리한 야당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쇼트머니(하원)와 크랜본머니(상원)라는 의정활동비를 여당을 제외한 야당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일반보조금은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지급되지만 사무보조금과 의정지원비는 야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배분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한국정당학회 2013, 55).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오늘날 국내외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정책 역시 복잡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정책연구소와 같이 일반 시민들의 정책 선호와 요구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화하려는 기관들의 필요성과 역할도 동시에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정책연구소가 다수 존재하고 그 규모도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영역에서 공공정책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은 당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관료와 정치인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정책연구소 활동 평가

1. 정책연구소 기본 현황 분석

정책연구소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정책연구소의 인적·재정적 자원을 파악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정책연구소의 운영 성과는 얼마만큼의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여 어떠한 성과들을 이끌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2>은 2012년 기준으로 정책연구소의 재정⁶⁾과 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정책연구소 재정과 관련하여 수입의 80%~90% 정도가 국고의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 속에서 여의도연구소 98억원, 민주정책연구원 58억원, 진보정의연구소 1억 7천만원, 진보정책연구원 9억원 정도의 금액이 전체 수입으로 잡혀 있다. 여의도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은 56억원과 4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2> 정책연구소 재정과 인력 현황: 2012년

연구소	내역	전체 수입	인건비	연구원(단위: 명)				직원(단위: 명)		
				박사	석사	기타	합계	자체 고용	외부 파견	합계
여의도연구소		9,826	5,696 (58.0%)	20	19	57	96	1	-	1
민주정책연구원		5,827	3,044 (52.2%)	5	6	6	17	17	2 (국회직)	19
진보정의연구소		172	26 (15.1%)	1	3	2	6	1	-	1
진보정책연구원		932	462 (49.8%)	4	4	4	12	12	-	12
계		16,757	9,228 (55.1%)	30	32	69	131	31	2	33

- ※ 1. 전체 수입은 정당 지원금, 기타 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금액.
 2. 전체 수입과 인건비 단위는 백만원(이하 모든 표의 금액 수치는 백만원으로 통일).
 3. 인건비 괄호안의 수치는 전체 수입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6) 정책연구소의 구체적인 재산, 수입, 지출과 관련한 현황은 <부록 1>와 <부록 2>를 참조.

하지만 경상보조금 외 중앙당 지원금의 경우 여의도연구소 30억원과 민주정책연구원 11억원으로 차이를 보여 전체 수입액상의 차이를 이끌었다.⁷⁾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연구소들간 전체 수입의 차이는 필연적일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정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원의 전체 수입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특히 민주정책연구원이 경상보조금 외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여의도연구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당의 재원 차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책연구소에 대한 인식과 기능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⁸⁾

이러한 점은 정책연구소의 인력 구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의도연구소의 경우 연구원과 직원 포함 97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 36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책연구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전문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박사급 연구원의 수도 여의도연구소는 20명인 반면 민주정책연구원은 5명에 불과하다.

더욱 중요한 점은 아래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여의도연구소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여 2012년에 석·박사급 연구원을 대폭 채용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민주정책연구원은 오히려 석·박사급 연구원의 채용이 대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2012년에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기능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소 연구원과 직원의 직급에 따라 연봉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평균 인건비를 상정해보면 여의도연구소 5,872만원, 민주정책연구원 8,455만원, 진보정의연구소 371만원, 진보정책연구원 1,925만원으로 나타난다. 현재 정책연구소에서 제출하는 자료들을 통해서도 각 직급에 따른 연봉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7) 진보정의연구소와 진보정책연구원의 경우 경상보조금 외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없었다.

8) 2012년 정당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1,569억원이었고, 민주통합당의 경우 1,143억원이었다.

〈표 3〉 정책연구소 연구진 현황 변화: 2009년~2012년

내용 연구소	연구원 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박사	석사	기타	박사	석사	기타	박사	석사	기타	박사	석사	기타
여의도연구소	10	16	32	9	8	9	7	4	8	20	19	57
민주정책연구원	17	12	24	15	14	23	7	13	33	5	6	6
진보정의연구소	-	-	-	-	-	-	-	-	-	1	3	2
진보정책연구원	-	-	-	-	-	-	-	-	-	4	4	4

하지만 전체 인력, 그리고 특히 박사급 연구원도 적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는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 그 운영과 관련하여 비판이 제기될 소지는 크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소의 연간 실적 보고에서 단순한 인적 현황만을 보고하기보다는 정책연구소 편제 하에서 어떻게 인적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직급별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⁹⁾

〈표 4〉 정책연구소 정책개발비 비중: 2008년~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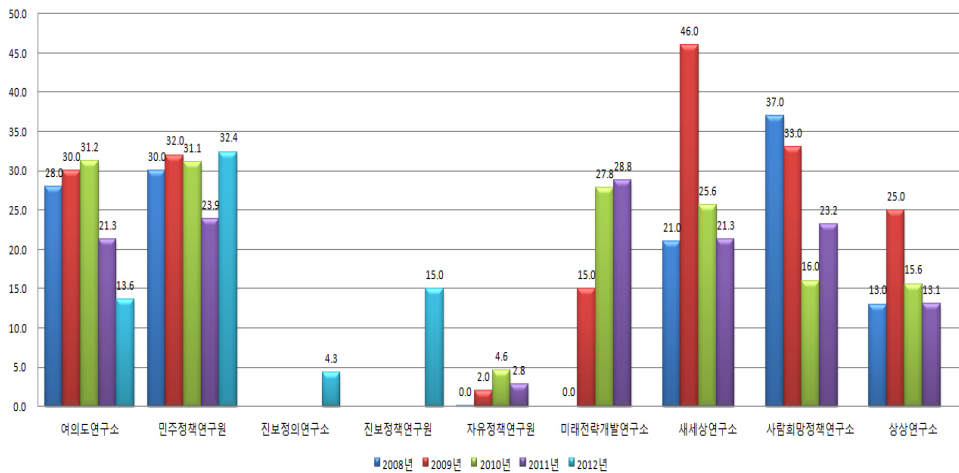
연구소명	정책개발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여의도연구소	1,070 (28.0%)	2,111 (30.0%)	2,502 (31.2%)	1,569 (21.3%)	1,259 (13.6%)
민주정책연구원	403 (30.0%)	1,336 (32.0%)	1,273 (31.1%)	940 (23.9%)	1,654 (32.4%)
진보정의연구소	-	-	-	-	4 (4.3%)
진보정책연구원	-	-	-	-	106 (15.0%)

※ 괄호안의 수치는 정책연구소 전체 지출액에서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9) 여의도연구소의 경우 직원은 단 한 명, 그리고 기타 연구원은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연구소라는 특성상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연구원의 직함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력 보고와 관련해서도 정책연구소들간의 통일된 인식이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좀 더 세분화된 인력 보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위의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연구소 정책개발비 비중을 통해서도 제기된다. 이 표를 보면 2012년 기준 정책연구소의 전체 지출액 중 정책개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정책연구소는 민주정책연구원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정책연구소의 전체 수입, 인력 현황, 인건비 비중을 고려할 때 여의도연구소가 많은 재정과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책개발비는 적게 사용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전문 연구인력의 인건비도 정책 개발을 위한 인적 투자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현재 정책연구소가 공개하고 있는 연간 활동실적 보고의 내용만으로는 정책개발비가 정확하게 어떠한 항목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파악할 길이 없다.

<그림 2> 정책연구소별 정책개발비 비중: 2008년~2012년



특히 앞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연구소 정책개발비 비중이 일률적이지 않은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 활동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선거가 실시되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에 있어 정책개발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률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동일 정책연구소 내 정책개발비의 비중이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 활동이 비연속성을 갖고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정책개발비도 어떠한 항목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사용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연구소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전문 연구인력의 인건비와 정책개발비의 합계가 전체 정책연구소 지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와 적실성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가 실시된 2012년에 여의도연구소의 정책개발비 비중이 크게 떨어진 이유 등을 제대로 설명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책개발비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정책연구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이상의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2.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1) 정책연구소 활동 형태

정책연구소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정책연구소의 활동이 어떠한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5>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2년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형태별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5> 정책연구소 활동 형태별 분류: 2012년

연구소 활동 형태	여의도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정책 개발	80	91	-	67
토론회 등 개최	42	61	1	49
교육·연수 활동	13	1	-	27
정책 홍보	36	12	-	98
간행물 등 자료 발간	4	35	-	7
기타 활동	9	45	-	49
계	184	245	1	297

※ 기타 활동에는 당 대표 선출 지원, 지방 정당 조직 실사, TV토론회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형태별로 분류해본 결과, 외형적으로 정책연구소는 연구와 정책 개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홍보에 비중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연구소 활동의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인력과 재원의 차이를 고려할 때 가장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여의도연구소가 민주정책연구원이나 진보정책연구원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성과가 적었다는 점, 그리고 군소정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성과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¹⁰⁾

2) 정책연구소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어떠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연구소의 정책적 반응성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책적 선호를 얼마나 잘 반영하여 승리하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6〉 정책연구소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 분야

연구소 분야	18대 대선 매니페스토 어젠다	여의도 연구소	민주정책 연구원	진보정책 연구원
경제/민생	13 (20.0%)	29 (36.3%)	28 (30.8%)	22 (32.8%)
외교/안보	9 (13.8%)	10 (12.5%)	8 (8.8%)	20 (29.9%)
사회/복지	18 (27.7%)	10 (12.5%)	10 (11.0%)	12 (17.9%)
정치/행정	13 (20.0%)	24 (30.0%)	38 (41.8%)	9 (13.4%)
교육/문화	12 (18.5%)	7 (8.8%)	1 (1.1%)	4 (6.0%)
기타/종합	-	-	6 (6.6%)	-
계	65 (100.0%)	80 (100.0%)	91 (100.0%)	67 (100.0%)

※ 진보정의연구소의 경우 연구·정책 개발의 실적이 없어서 표에서 제외(이하 동일).

10) 진보정의연구소의 경우 진보정의당이 2012년 10월 21일 통합진보당과 결별하여 창당되었기 때문에 12월 11일에 법인 설립 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진보정의연구소의 경우 2억이 안 되는 재원이 투입되었지만 인력의 충원, 연구, 기획, 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 결과 진보정의연구소는 2012년 활동실적의 성과도 18대 대선 평가와 2013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토론회를 단 한 차례 개최한 것 외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2년의 잔여 예산은 2013년 재정으로 이월되게 되었다. 이처럼 진보정의연구소처럼 정책연구소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당 년도의 국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이 국고지원금을 차기 년도로 이월해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제도적 보완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위의 <표 6>은 2012년도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이 어떠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여 정리한 것이다. 일단 이 표에서 맨 왼쪽에 있는 18대 대선 매니페스토 어젠다는 한국정당학회(2012)가 3차례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18대 대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총 65개의 매니페스토 어젠다를 분야별로 분류한 것이다. 한국정당학회의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사회/복지와 경제/민생의 분야에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책적 무게 중심이 개인의 삶과 관련한 분야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이번 18대 대선에서 국가적 차원의 정치/행정이나 외교/안보 분야 등과 관련한 쟁점들보다 개인의 삶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제/민생이나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한 쟁점들이 크게 부각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쟁점들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12년도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의 분야별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민생과 정치/행정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을 많이 진행하는 특징을 보였다는 점을 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교육/문화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물론 경제/민생과 사회/복지 분야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책연구소가 정치/행정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교육/문화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은 다소 소홀하였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은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의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연구소가 전문가와 유권자의 정책적 조언과 수요 조사를 통하여 보다 균형 있고 반응도가 높은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을 좀 더 세부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점들을 목격할 수 있다. 먼저 아래의 <표 7>은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을 추진기간별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경우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 사업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당의 가치와 이념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 많은 고민이 필요한 과제들과 정책적 시의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대응해야 하는 사업들이 혼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 정책연구소 연구·정책 개발의 추진기간별 분류: 2012년

연구소 추진기간	여의도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계
1개월 이하	74 (92.5%)	65 (71.4%)	13 (19.4%)	152 (63.9%)
2개월 이하	3 (3.8%)	12 (13.2%)	3 (4.5%)	18 (7.6%)
3개월 이하	3 (3.8%)	6 (6.6%)	-	9 (3.8%)
4개월 이하	-	5 (5.5%)	-	5 (2.1%)
5개월 이하	-	3 (3.3%)	51 (76.1%)	54 (22.7%)
6개월 이하	-	-	-	-
계	80 (100.0%)	91 (100.0%)	67 (100.0%)	238 (100.0%)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진보정책연구원(76.1%)의 경우 5개월 이하의 연구과제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여의도연구소(92.5%)와 민주정책연구원(71.4%)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초단기 과제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모든 정책연구소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연구과제들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12년에 19대 총선과 18대 총선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책연구소가 지나치게 단기적이고 시의적인 사안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내용적 충실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아래의 〈표 8〉은 정책연구소가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로 보고한 내용을 그 분량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 표에서 여의도연구소의 경우 민주정책연구원과 비교하여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10매 이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의 비율이 여의도연구소의 경우 72.5%를, 그리고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 46.2%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정책연구소 연구·정책 개발의 분량별 분류: 2012년

연구소 분량	여의도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	계
5매 이내	32 (40.0%)	25 (27.5%)	57 (33.3%)
10매 이내	26 (32.5%)	17 (18.7%)	43 (25.1%)
20매 이내	15 (18.8%)	11 (12.1%)	26 (15.2%)
50매 이내	4 (5.0%)	16 (17.6%)	20 (11.7%)
100매 이내	1 (1.3%)	5 (5.5%)	6 (3.5%)
100매 이상	2 (2.5%)	17 (18.7%)	19 (11.1%)
계	80 (100.0%)	91 (100.0%)	171 (100.0%)

※ 진보정책연구원의 경우 분량 단위가 원고지 매수 등 차이를 보여 제외.

실제로 여의도연구소의 경우 전체 80건의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들 중 단 2일 만에 1매 분량으로 작성된 “서민가계의 부동산발 가계부채 문제”라는 성과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2매 분량으로 작성된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도 5건이나 존재한다. 정책연구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의 분량이 모두 많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나치게 적은 분량의 성과는 부실한 실적 위주의 보고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도록 하여 현재보다 좀 더 철저한 관리와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책연구소 활동실적 보고는 모든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에 대하여 한 장의 요약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10매 이내의 정책연구소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모두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의 주체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소의 전문 연구인력이 충분치 않은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음의 <표 9>는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를 주체별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 다른 정책연구소와 비교하여 자체 연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책연구소들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와 정책 개발의 성과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9> 정책연구소 연구·정책 개발의 주체별 분류: 2012년

주체 \ 연구소	여의도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계
자체	71 (88.8%)	59 (64.8%)	67 (100%)	197 (82.8%)
외부 전문가	4 (5.0%)	17 (18.7%)	-	21 (8.8%)
공동	5 (6.3%)	15 (16.5%)	-	20 (8.4%)
계	80 (100.0%)	91 (100.0%)	67 (100.0%)	238 (100.0%)

정책연구소의 전문 연구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복잡 다양한 쟁점 현안들을 적실성 있게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정책연구소들이 자원을 독점하고 적실성이 떨어지는 정책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책연구소는 독립적 연구기관이 아닌 정당 조직의 일부로서 정파적 색채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존재한다(임재주 2012, 615). 이러한 이유에서도 정책연구소가 재정적·조직적·운영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실적과 관련하여 여론조사의 문제는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아래의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여의도연구소의 경우 2012년 한 해 동안 총 813회의, 그리고 진보정책연구원의 경우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반면 민주정책연구원과 진보정의연구소의 경우 단 한 차례의 여론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정책연구소가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여론조사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책적 인식과 선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정책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아닌 상황 속에서 여의도연구소처럼 1년 365일 기준 하루 평균 두 건 이상(2.2건)의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 단 한 차례의 여론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모두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표 10〉 정책연구소 여론조사 횟수 비교: 2012년

연구소 분류	여의도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진보정책연구원
여론조사	813	-	-	10

특히 현행 정책연구소 활동실적 보고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 그리고 여론조사 데이터의 활용 방식 명시와 공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보완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소가 자신의 이념, 가치, 정책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조사 연구를 자체적 또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설계하여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데이터를 공개하여 관련 연구성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정책연구소 자료 발간과 홍보활동

아래의 〈표 11〉은 정책연구소 자료 발간 실적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 35건으로 가장 많은 자료 발간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정책연구소의 자료 발간 실적은 매우 부진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정책연구소가 제출한 활동실적 보고만을 놓고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다만 이와 같은 특징은 다음과 같은 점들로 인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정책연구소가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교육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초적인 자료들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측면들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정책연구소가 활동실적 보고를 충실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표 11〉 정책연구소 자료 발간 실적: 2012년

연도별 분류	여의도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계
연구 논문	-	15 (42.9%)	-	15 (32.6%)
연구 분석	-	-	1 (14.3%)	1 (2.2.%)
토론회 자료	3 (75%)	3 (8.6%)	-	6 (13%)
세미나 자료	-	3 (8.6%)	-	3 (6.5%)
간담회 자료	-	1 (2.9%)	-	1 (2.2.%)
교육연수 자료	-	-	-	-
강의 자료	-	-	-	-
정책자료집	-	5 (14.3%)	-	5 (10.9%)
교육자료집	-	3 (8.6%)	-	3 (6.5%)
자료집	-	-	6 (85.7%)	6 (13%)
동영상	-	-	-	-
간행물	-	-	-	-
단행본	-	-	-	-
백서	1 (25%)	-	-	1 (2.2.%)
계간지	-	2 (5.7%)	-	2 (4.3%)
번역 도서	-	3 (8.6%)	-	3 (6.5%)
계	4 (100.0%)	35 (100.0%)	7 (100.0%)	46 (100.0%)

둘째,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의 내용이 전문적인 자료집을 발간할 만큼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들을 마련하여 자신들의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를 발표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¹¹⁾ 특히 2012년의 경우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실시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공식 정책자료집이 선거에 임박하여 발표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책연구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하였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정책연구소 명의로 나온 학술 단행본을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이다.

11) 예를 들어 미국의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경우 국제정치 및 경제 전문 잡지인 Foreign Policy를 격월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외교협회도 자신들의 정책 연구 성과들을 기관지인 Foreign Affairs에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임재주 2012, 599-605).

이것은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이 시의성과 선거적 목적만을 고려하여 내용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정책선거와 책임정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책에 대한 홍보와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정책연구소가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향후 정책연구소가 활동실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증빙하도록 하고, 중요한 자료들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소가 정기적으로 자신의 연구와 정책 활동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엮어 단행본의 형태로 출간하도록 하고, 각종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들을 고려하여 국고 지원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표 12〉 정책연구소 홍보방법 비교: 2012년

홍보방법 \ 연구소	여의도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계
사이트 게시	16 (44.4%)	4 (3.3%)	-	20 (13.7%)
e-뉴스레터	11 (30.6%)	5 (41.7%)	-	16 (11%)
사이트 게시+보도자료	6 (16.7%)	-	98 (100%)	104 (71.2%)
보도자료	1 (2.8%)	1 (8.3%)	-	2 (1.4%)
방송	-	1 (8.3%)	-	1 (8.3%)
책자 배포	-	1 (8.3%)	-	1 (8.3%)
기타	2 (5.6%)	-	-	2 (1.4%)
계	36 (100.0%)	12 (100.0%)	98 (100.0%)	146 (100.0%)

정책연구소의 부진한 활동실적은 홍보의 문제와도 연계가 된다. 위의 〈표 12〉는 정책연구소 홍보방법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군소정당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전반적으로 볼 때 정책연구소의 홍보 실적은 매우 부진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의 실적이 적어 홍보할 내용이 부족하였고, 내용적으로도 부실하여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정책연구소가 자신의 연구와 정책 개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의 부족도 존재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가 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의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당원들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에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여 공론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지 않고, 언론이 그 활동을 주목하지 않는 것(김형준·김도중 2011, 11-12)에 대하여 정책연구소는 스스로 반문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

4) 정책연구소 교육과 연수 활동

현행 「정당법」 제38조 1항에 의하면 한국의 정책연구소는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책연구소는 다양한 차원의 교육과 연수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의 <표 13>은 2012년 정책연구소의 교육과 연수 활동 현황을 대상별로 분류하여 파악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정책연구소의 교육과 연수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각 정책연구소별로 일정한 특징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3> 교육과 연수 활동 대상별 분석: 2012년

연구소 분류	여의도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진보정책연구원
최고 지도자	-	-	-	-
국회의원	-	-	-	-
정당 실무자	-	1	-	14
당원	-	-	-	3
대학생	13	-	-	-
시민	-	-	-	-
기타	-	-	-	10
계	13	1	-	27

※ 진보정책연구원의 10차례 월례 강좌는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기타로 분류함.

구체적으로 모든 정책연구소들이 정당의 최고 지도자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연수 활동을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보정책연구소의 경우 정당 실무자 교육과 당원 교육, 그리고 월례 강좌를 통한 기타 교육 등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여의도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소의 경우 특정 대상에 한정하여 교육을 진행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즉 여의도연구소의 경우 총 13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모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들로부터의 지지가 부족한 새누리당의 특성을 고려한 여의도연구소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가 존재하였던 2012년에 여타 대상에 대한 교육이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민주정책연구소의 경우 정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단 한 차례 교육을 진행한 것이 이 분야 성과의 전부인데 이 역시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보여진다.

오늘날 정책연구소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연구소의 현실과 성과는 정책연구소가 실질적으로 교육과 연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정책연구소가 향후 교육과 연수와 관련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교육과 연수 활동 대상별 비교 분석: 2010년~2012년

분류 년도	최고 지도자	의원	정당 실무자	당원	대학생	시민	기타	합계
2010년	1 (1.2%)	9 (10.7%)	35 (41.7%)	14 (16.7%)	23 (27.4%)	2 (2.3%)	-	84 (100.0%)
2011년	-	2 (2.3%)	17 (19.8%)	17 (19.8%)	27 (31.4%)	21 (24.4%)	2 (2.3%)	86 (100.0%)
2012년	-	-	15 (36.6%)	3 (7.3%)	13 (31.7%)	-	10 (24.4%)	41 (100.0%)

위의 〈표 13〉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책연구소의 교육과 연수 활동 현황을 대상별로 비교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2012년에 들어와서

정책연구소의 교육과 연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2012년에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실시되어 정책연구소가 교육과 연수 활동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을 방증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정책연구소의 교육과 연수 활동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대상에 맞추어 교육과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책연구소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IV. 정책연구소 운영과 평가의 제도적 개선 방안

1. 정책연구소 운영의 제도적 개선 방안

2004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책연구소 설립과 활동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이후 해마다 진행된 정책연구소 평가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앞서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도 정책연구소의 문제점들은 시정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정책연구소의 개혁과 선진화를 위한 논의와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책연구소 문제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 동안 학자들과 언론매체들이 지적한 정책연구소 개혁 요구들을 외면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근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책연구소에 대한 개혁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은 정당들이 현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라는 점은 이 이상의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즉 최근 정당의 이와 같은 변화는 정책선거와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의 활성화, 무상급식 쟁점과 각종 민생 현안 등 오늘날 선거에서 새로운 정책 어젠다 개발과 선점의 중요성 대두, 선거공학적 야권 연대나 지역 연대의 영향력 감소, 회고적 정권 심판론과 더불어 전망적 정책 비전 제시의 중요성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최근 선거에서 정당은 정책선거와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여론을 명분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도 정책이 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¹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여의도연구소가 개최한 심포지엄 자료집과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에는 그 동안 정책연구소와

12) 실제로 지난 2013년 2월 27일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와 한국선거학회가 공동 주최한 “민주통합당의 18대 대선 패배, 100년 정당의 길을 모색한다”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 대선 패배 원인들 중 하나로 민주정책연구원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민주정책연구원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향후 선거를 대비하는 전략과 공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개혁 요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정치권이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연구소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인사와 재정 독립성을 확보하여 연구와 정책 개발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정책연구소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들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6; 김형준·김도중 2011; 신두철 2007; 여의도연구소 2013; 조진만 20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황윤원 2008).

먼저 정책연구소의 인력 및 조직 구성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경우 정책연구소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책연구소의 인력 및 조직 구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된 쟁점들로는 정책연구소장의 자율성 보장, 정책연구소의 위상 제고와 조직 구성 개선,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경쟁성 강화, 전문 연구인력의 확충과 안정성 보장 등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그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연구소장은 현역의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고,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책연구소장은 당 대표의 의사에 따라 주로 현역의원이 수시로 임명되었다. 이처럼 당 대표의 의사에 따라 현역의원이 정책연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정책연구소장직을 충실하게 수행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정책연구소장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개혁조치들은 필요하다. 하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정책연구소장을 외부 전문가로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큰 의미를 갖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정책연구소의 여타 개혁조치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살펴보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당의 조직도상에서 볼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정책연구소가 당 정책위원회의 부속기관처럼 되어 있는 현재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당이 정부로부터 받는 경상보조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정책연구소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도상에서나 실질적으로도 정책연구소의 위상은 모호하고 취약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정책연구소와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일정 수준 차별성을 두고, 상호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방법은 정책연구소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인정하고, 정당의 관여와 개입을 최소화하는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연구소 내에 정책위원회와 소통하여 정책적 입장들을 조율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연구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과 권한 보장 등이 전적으로 요구된다. 다시 말해 현역의원들의 이사회 참여를 제한하여 정책연구소의 소장과 이사회가 업무와 인사 등과 관련한 정치권의 다양한 압력들로부터 상당 수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책연구소의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경쟁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때 이와 같은 인력의 전문성은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경쟁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인사 충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책연구소는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사회와 인사위원회가 소속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중앙당 인사의 충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를 보면 인사과정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충원된 인력들의 기본적인 배경(경력)과 역할(업무성과) 등도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향후 무기명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연구소 인사 충원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충원된 인력들의 배경과 역할 등과 관련한 보고를 추가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 연구인력의 확충과 안정성 보장이 요구된다.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전문 연구인력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재 정책연구소의 전문 연구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정책연구소 충원과정의 불투명성과 중앙당의 인사 청탁과 압력 등으로

인하여 전문 연구인력 구성의 적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전문 연구인력의 부족 문제는 정책연구소의 효율적 운영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양산하는데 있어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인력의 계약이 주로 1년 단위의 단기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연봉 및 처우 등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전문 연구인력에 대한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처우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책연구소 역시 지속적으로 좋은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평균적으로 볼 때 정책연구소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향후 무기명이라도 직급과 경력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고 지급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와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연구소가 재정상의 이유로 전문 연구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책연구소의 재정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와 독일의 정당재단이 잘 운영되고 기능하는 이유는 조직이나 운영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싱크탱크와 독일의 정당재단이 이처럼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실질적인 요인은 재정적 독립의 문제에 있다(임재주 2012, 592).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책연구소의 재정은 정당이 정부로부터 경상보조금을 받아 그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충당되고 있고, 이 외의 별다른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금까지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핵심 방안들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중 정책연구소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100분의 30의 금액을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고, 현재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제출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번에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부결되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이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만약 정책연구소가 정당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직접 경상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면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상당 수준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정책연구소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서 논의한 정책연구소 경상보조금 직접 지급의 문제와 달리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이다. 왜냐하면 정책연구소가 자생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 동시에 여당의 정책연구소에 후원금이 집중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심도 깊은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다만 단계적인 차원에서 정책연구소가 자생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이후 경상보조금 직접 지급과 후원금 허용을 대비한 사후적인 방안들을 충분히 마련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이 긴요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정책연구소가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에게 각종 정책 정보 제공과 연구결과물 발송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특정 금액의 연회비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소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매칭펀드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한국의 정책연구소처럼 국고 지원을 받는 독일 정당재단들의 경우 다양한 차원의 회계 감사를 받는다(박명준 2012)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연구소의 회계 보고와 실사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¹³⁾

앞서 살펴본 정책연구소의 인력, 조직, 재정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정책연구소는 연구와 정책 개발과 관련한 역할과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잘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책연구소가 연구와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매니페스토와 정책공약집 작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책연구소 내에 가칭 매니페스토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당의 가치와 이념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정책들을 중앙당 정책위원회

13)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소가 회계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김형준·김도중 2011).

와 함께 협의하여 조율한 후 전당대회를 통하여 승인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매니페스토와 정책공약집의 작성 주체와 제출 시기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논란들이 상당 수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정책선거와 책임정치를 이끄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진만 2008). 특히 정책연구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정책연구비의 비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연구소가 매니페스토위원회의 운영과 그 결정사항들에 대한 홍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를 통해서 특정 연구와 정책 개발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부 연구와 정책 개발이 누구에 의해서 수행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밝히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좀더 적실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책연구소에 지원되는 경상보조금의 액수를 고려할 때 활동실적 보고의 내용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출연 정책연구소나 한국연구재단 지원 정책중점연구소 등의 활동실적 보고의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기준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연구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연구소와 차별성을 갖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실제로 얼마나 입법화되었는지, 그리고 정부 예산의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효과 분석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연구소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정책연구소 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적실성 있게 마련된 기준들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처럼 정책연구소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와 연동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할 경우 정책연구소의 활동과 성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소정당

정책연구소의 경우에도 그 활동실적에 따라 보다 많은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소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현행 「정당법」상 정책연구소는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책연구소가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정책연구소가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이 이번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의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영되어 있다. 정책연구소가 거의 전적으로 국고 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정당재단과 같은 민주시민교육 기능의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향후 정책연구소가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예산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경상보조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연구소 평가의 제도적 개선 방안

그동안 한국의 정책연구소는 정책 중심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한 제도적 기제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의 정책연구소들은 이와 같은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정책연구소의 독립적 위상에 대한 정당 내부의 합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소의 활동이 대체로 중장기적 정책 생산보다는 단기적으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데 머물러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책연구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연구소들이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의 적실성

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¹⁴⁾ 왜냐하면 현재의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를 이용하여 정책연구소들의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대안을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정책연구소가 제출하고 있는 현재의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대안적인 보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연구소의 연간활동 보고가 갖는 중요성은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의 중앙당이 정책연구소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들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적 반응성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매개로 기능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의 입장에서 보면 보고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번거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연구소의 현황에 대한 엄밀한 진단을 통하여 스스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책연구소들이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하고, 자신의 위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현행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의 문제점

정책연구소는 전문적인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정당의 가치, 이념, 정책을 생산한다. 그리고 당원 및 일반 국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보고는 이러한 기능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각 정책연구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재정적, 조직적 자원 또한 이들의 연간 활동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의 <표 14>는 2013년 각 정책연구소들이 제출한 “2012년도 연간 활동실적 보고(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에 포함된 항목들을 요약한 것이다.

14) 「정당법」 제35조 3항에 따르면 정책연구소는 “연간 활동실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부록 3>과 <부록 4> 참조).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보고양식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일반 현황과 활동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이 안에는 크게 1) 사무소, 인력, 활동 경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 현황과 2) 연구 개발 실적, 토론회 등의 개최, 교육 및 연수 활동, 정책 홍보, 간행물 등 발간자료 등을 포함하는 주요 활동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표 14>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정책연구소가 보고해야 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보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정책연구소의 현황 및 활동실적을 이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책연구소들이 보고하고 있는 일반 현황 가운데 활동경비는 수입(정당지원금, 기타 수입, 전년도 이월금)/지출/잔액 등의 총액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적에 따른 회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력의 경우에도 전체 구성원수와 이들의 학력 및 자체 고용 여부 등 매우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하고 있다. 활동실적의 경우에도 연구/개발 실적의 특성에 관한 보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토론회 및 교육/연수 활동의 참여자 수 등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14> 현행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 내용

주제	주요 내용	세부 사항
일반 현황	사무소	• 소재지, 설치 형태(연구소 소유, 정당 소유, 임차, 기타), 비고
	인력	• 연구원 수(박사, 석사, 기타, 합계), 직원 수(자체 고용, 외부 파견, 합계), 비고
주요 활동실적	활동 경비	• 수입(정당지원금, 기타 수입, 전년도 이월금, 계), 지출, 잔액, 비고
	연구/개발 실적	•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토론회 등 개최	• 개최명, 일시, 장소, 주제, 주요 내용, 비고
	교육/연수 활동	• 교육/연수명, 일시, 장소, 주요 내용, 비고
	정책 홍보	• 일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 내용, 비고
	간행물 등 발간자료	• 발간일자, 종류, 제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그 밖의 주요 활동	• 일자, 장소, 활동명, 주요 내용, 비고
	별첨	• 주제, 연구기간, 연구분야, 연구방법, 연구/개발내용: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성과

※ 출처: 2012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 양식

둘째, 보고의 수준이 연구소 단위에 한정되어 있으며, 개인 혹은 연구원 특성(전임, 공동, 보조 등) 단위의 보고 항목이 없다. 일반 현황의 경우 연구원 수 이외에 연구소장과 개별 연구원의 정책 생산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연구업적, 충원 방식(공채 유무), 그리고 연구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연봉 규모 등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셋째, 연구/개발 실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보고 내용에는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제, 연구방법, 분량 등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자료만을 놓고 볼 때 연구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교육과 토론회 또한 주제와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항목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육과 토론회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넷째, 주요 활동실적의 보고서에는 평가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책연구소의 보고가 단순히 법적인 요구사항이다. 그러므로 정책연구소가 형식적으로 이를 수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는 정책연구소가 직면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교 및 평가의 기준을 정책연구소에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보고 개선 방안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는 정책연구소의 성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속 정당은 물론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을 구성하는 주요 차원들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미 앞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정책연구소의 주요 자원들이 이들의 활동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1) 주요 자원요소들을 포괄하는 일반 현황 보고와 2) 활동실적 보고를 모두 포함하는 연례보고서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15>는 정책연구소의 일반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

요 항목들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단순히 정책연구소의 소재지나 설치 형태, 연구원 및 직원 수와 같은 단순 인력 상황, 수입과 지출 총액과 같이 기존 보고서에 포함된 단순 지수들 대신에 정책연구소의 위상과 재정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1) 일반 현황 보고

(가) 조직 위상 및 구성: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조직 위상 및 구성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소가 1) 중앙당에 대한 조직적·재정적 독립성, 2)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3) 연구원의 출신 지역 혹은 연구분야의 다양성 혹은 포괄성 등을 확보하는 것은 이들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¹⁵⁾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을 중심으로 개별 정책연구소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보고 항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연구소가 단순히 각 정당의 홍보 부서로 기능하지 않도록 당헌을 통하여 정당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 받고 있는지,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당 조직의 운영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재정적인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력 있는 연구소장은 물론 연구원의 충원을 위하여 공채시스템을 갖추는 등 인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책연구소가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고 항목에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보조)연구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장과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능력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소지 여부, 연구기관 재직 경력, 최근의 연구업적 등이 비록 무기명일지라도 개인별로 보고되어야 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능력과 경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소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책연구소가 포괄하는 전문영역의 다양성 확보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소가 얼마나 다양한 정책 분야의 연구자들로 충원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5)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서 규정한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부록 7> 참조.

정치 및 경제 분야와 같은 특정한 정책 분야에 한정된 연구원들만으로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정책연구소가 생산할 수 있는 정책 영역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의 출신 지역과 대학이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대학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분야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련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표 15〉 정책연구소의 일반 현황: 위상, 조직 구성, 재정 구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점수배정(%)	개선안
조직의 위상과 구성 (100%)	독립성 (20%)	조직	당헌 내에 규정 유무	10	독립성 강화
		재정	국고지원비 전용 수준 (0~5)	5	홍보비/조직운영비와 혼용 방지
		인사	원장=2 연구원=3	5	소장 및 연구원 공채
	전문성 (70%)	연구소장의 전문성	박사학위=2 연구경력=8	10	전문연구경험자로 공채
		전문 연구인 비중	박사급 비중	20	박사급 연구원 비중 제고
		연구원 연구력	개인 연구업적 (등재지)	30	개인별 연구업적 공개
		보조연구원 연구력	개인 연구업적 (등재지)	10	개인별 연구업적 공개
	다양성 (포괄성) (10%)	연구원 지역/대학 편중성 방지	출신지역/대학 다양성	5	다양화
		연구원 전공 편중성 방지	연구분야 다양성	5	다양화
	재정구조 (100%)	재정 안정성 (20%)	정당의 재정 지원	연구비 출연 비중	20
연구 지원 중심성 (80%)		안정적 인건비 지출	정규직 비중	25	정규직 확대
		채직 기간	연구원 평균 재직기간	5	계약 기간 확대
		연봉 수준	연구원 평균 연봉	35	기본임금 상향 조정
		성과급 비중	성과급 비중	10	인센티브제도 도입
		기타 연구 지원	자료 사용, 번역/출간 지원 유무	5	지원 확대

(나) 재정 구조: 안정성과 연구 지원 중심성

재정 구조와 관련해서도 정책연구소의 1) 재정 안정성, 2) 연구 지원 중심의 지출구조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보고 항목을 구성해야 한다. 첫째, 재정적인 안정화의 측면에서 법적으로 정책연구소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한 국고보조금의 30% 이외에 정당이 얼마나 재정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보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지원 중심의 지출구조 측면에서 연구 지원과 관련한 지출이 정책연구소의 총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도록 정규직 연구자들의 비중, 평균 재직 기간, 연구원들의 연봉 수준 등이 보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원들의 연구 의욕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와 함께 성과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수집과 번역, 논문 투고 및 저서 출간 등 연구원들의 연구과정 및 성과 발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2) 주요 활동실적 보고

현행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에는 앞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연구/개발 실적, 교육/연수, 정책 홍보, 발간자료, 토론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빈도 이 외에 연구성과의 가치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보고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책연구소가 과연 얼마나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고서는 정책과 교육 관련한 보고 항목을 세분화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 가치와 이념, 그리고 정책 생산: 연구 성과, 토론회 개최, 활용성

연구 성과와 관련한 보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연구자별로 저서 및 연구논문(연구재단 등재/후보/기타), 보고서(장기/중기/단기), 토론회 발표문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부당한 공저 표기와 일부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 업무 편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연구원들의 비중을 제한하고, 단기연구 위주 연구활동의 편중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단기연구 편중비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표 16〉 주요 활동 실적: 가치/이념 및 정책 생산과 교육

평가항목	세부항목	성과내용	평가지표	점수배정(%)	개선안	
가치/ 이념/ 정책 생산 (80%)	연구성과 발표 (60%)	저서 및 연구논문	저서 및 연구논문 수	25	개인별 연구업적 공개	
		(편중성 방지)	기준 단독연구 미달자 비중	-5	인센티브제도 도입	
		연구보고서 (장/중/단기)	연구보고서 수	35	연구보고서 파일 공개	
		(단기 보고서 편중성 방지)	단기보고서 편중비	-10	단기 과제 편중성 탈피	
		토론회 발표문	발표문 공개	15	발표문 파일 공개	
	토론회 개최 실적 (10%)	소규모/ 국내	50명 미만 횟수	5	대규모/소규모 토론회 활성화	
		대규모/ 국제	50명 이상 횟수	5		
	활용성 (10%)	연구성과 활용	연구성과 공개 비중	10	활용성 강화	
	교육 (20%)	당원 교육 실적 (10%)	소규모	50명 미만	5	교육 활성화
			대규모	50명 이상	5	
일반인 교육 실적 (10%)		소규모	50명 미만	5	교육 활성화	
		대규모	50명 이상	5		

둘째, 토론회 개최 실적의 경우에도 참여 인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규모 토론회(혹은 국내·국제 토론회)를 구분하여 보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에 활용된 자료(여론조사자료 등)와 연구 성과를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¹⁶⁾

16) 정책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소 홈페이지는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혹은 '한국연구재단'을 통한 연구성과의 공개, 그리고 공직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알리미와 같이 활동실적을 정당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교육: 당원 및 일반인 교육

정책연구소가 연구기관임과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 수행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원 및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참가자의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 평가지표

각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는 일반 현황 및 주요 활동실적에 관한 보고사항을 담고 있는 <표 15>와 <표 16>에 포함된 평가지표와 점수 배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일반 현황들 가운데 조직 위상과 재정구조, 그리고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의 비중은 필요에 따라 상이한 가중치를 두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정책연구소의 조직적 위상이 여전히 불분명하고, 조직 운영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각각의 항목에 동일한 비중을 두어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정책연구소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진다면 실적 위주의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일반 현황과 활동실적의 세부 요소들에 대한 점수 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적인 정책 생산과 교육기관으로서 정책연구소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의 중요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조직 위상과 관련하여 전문성(70%), 독립성(20%), 다양성(10%)의 순으로 점수를 배정하였다.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박사급 연구원의 비중(20%)과 함께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의 연구 업적(30%+10%)과 연구소장의 전문성(10%)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조직/재정/인사 측면의 독립성(20%)과 다양성(10%)이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도록 배정하였다.¹⁷⁾

재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지출 총액 가운데 정당의 연구비 출연(20%)보다는 연구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80%)을 중심으로 점수를 배정하였다. 이 가운데에는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고용 조건에 해당하는 연봉 수준(35%)과 정규직 비중(2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과급의 비중(10%)과 기타 연구 지원(5%)이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한다.

17) 여기서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의 연구업적은 활동실적이 아닌 연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활동실적의 경우에도 교육(20%)보다는 가치/이념/정책 생산(80%)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후자를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에는 정책연구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보고서의 비중(35%)을 저서 및 연구논문(25%)과 토론회 발표문(15%)의 비중보다 높게 설정하였다. 아울러 단기보고서 편중성(-10%)과 단독 저술이 부재한 연구자의 비중으로 측정하는 연구 편중성(-5%)을 고려한 감점 조항을 부가하였다. 교육 실적의 경우에는 당원과 일반인에 대한 교육비중(각 10%)을 동등하게 두어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못한 정책연구소의 시민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점수를 배정하였다.

(3)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사업과의 비교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은 현안 및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내 싱크탱크로서 대학 부설 연구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한국연구재단 2003, 1).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이 대학의 연구소라는 점을 제외하면 정책연구소의 위상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지원할 연구소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하여 주요 원칙들을 세우고, 이에 기초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왔다는 점에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보고와 평가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5>와 <부록 6> 참조).

한국연구재단은 정책중점연구소를 선정하면서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원 대상인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와 독립된 전용공간의 제공과 지원은 물론 전임 연구인력의 확보와 이들의 신분 안정과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임기제로 선임된 연구소장과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일반/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 요건과 구성 기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조건들 또한 포함된다. 이 조건들은 대학의 연구소가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경쟁력 있는 연구원의 구성과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연구소의 일반현황 보고에서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의 지원은 3단계로 9년(3+3+3)간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별 평가를 통하여 지원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신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은 1) 연구 기반과 2) 연구 및 인력 양성에 각각 50퍼센트의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다.

먼저 연구 기반의 경우는 연구소 운영 실적, 연구 인력, 발전계획, 대학의 육성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운영 실적에 5퍼센트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에 각각 15퍼센트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양성 부문에는 연구과제 수행 계획과 인력 양성 계획에 각각 30퍼센트와 20퍼센트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의 인력 구성(15%)과 함께 자생력 확보와 재정 투자 및 시설 확충 계획 등 대학의 발전 및 육성 계획(30%)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과 연구의 연계성과 함께 전임 연구인력 양성을 포함하는 인력 양성 계획(20%)이 연구과제 수행 계획(30%)과 거의 대등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장기적으로 정책중점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연구업적뿐만 아니라 연구인력의 양성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셋째, 연구성과의 유형을 국제 및 전국 규모 학술지 게재 논문 수와 국제 및 학술대회발표 논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연구인력의 유형을 전임 연구인력과 비전임 연구인력으로 구분하는 등 세분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국고지원금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자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단기적인 연구업적에만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평가지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세분화한 정책연구소 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의 내용을 토대로 자원과 성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연구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운영방식과 평가방법의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제안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2012년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을 분석한 주요 특징적인 결과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연구소들이 수입의 대부분(80%~90%)을 국고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여의도연구소가 민주정책연구원과 비교하여 중앙당의 지원금을 3배 가까이 더 받았다. 아울러 여의도연구소는 박사급 연구원 수도 대폭 증원하여 민주정책연구원보다 4배나 많았다. 둘째, 정책연구소별 평균 인건비의 차이는 매우 컸다. 구체적으로 민주정책연구원(8,455만원)이 여의도연구소(5,872만원)보다 더 많았으며, 진보정의연구소(371만원)와는 무려 20여배나 차이가 났다. 정책개발비의 비중 또한 민주정책연구원(32.4%)이 가장 높았으며, 진보정의연구소(4.3%)가 가장 낮았다. 여의도연구소(13.6%)의 정책개발비 비중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 및 정책 개발, 토론회 개최, 간행물 등 자료 발간면에서 민주정책연구원이 여의도연구소와 비교하여 많은 성과물들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정책연구소들이 장기과제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성과물의 분량 또한 매우 적은 특징을 보였다. 넷째, 모든 정책연구소들, 특히 여의도연구소의 경우 자체 연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소의 경우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를 진행한 반면 민주정책연구원은 단 한 차례의 여론조사도 시행하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물적 토대가 마련된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그 동안 정책연구소의 운영과 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최근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자립과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행보는 다소 뒤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는 점, 정책선거와 책임정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 그동안 정책연구소에 대한 개혁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 더 이상 정책연구소의 변화를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정책연구소의 인력, 조직 구성, 재정을 포함한 운영 방식과 평가방법의 개선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첫째, 외부 전문가의 정책연구소장 영입과 임기 보장,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과 권한 보장을 통한 중앙당 정책위원회로부터의 독립성 강화,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경쟁성 강화, 전문적인 연구 인력의 확충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정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경상보조금의 정책연구소 직접 수령, 여당에게 편중되지 않는 후원금 수급제도 마련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적인 연구 및 교육기관인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연구소의 일반 현황과 함께 활동실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항을 세분화하고, 개별 연구원의 자질과 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원 단위의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입법화 및 예산 조정 효과 등 연구 성과의 보고 영역을 확대하고, 평가의 기준과 비중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과에 따른 경상보조금의 차등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한 정책연구소의 제도적 개선 방안들이 채택될 경우 정당정치, 정책선거, 책임정치와 관련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에 실시된 한국의 선거들에서 정책이 선거의 승리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각 정당이 어떻게 정책연구소를 개혁하는가의 문제는 향후 실시될 선거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정책연구소가 제 위상을 정립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조직적·운영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연구소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방안의 모색만큼 정책연구소 스스로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자리 매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정책연구소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그 성과의 부족을 단순히 독립성과 자율성 결여의 문제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들도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정책연구소 스스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좋은 성과들을 이끌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정책연구소의 모든 활동들을 엄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규제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책연구소에 적지 않은 금액이 국고로부터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연구소가 이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목을 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법 제정을 성사시켰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전후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마셜플랜의 설계에도 참여하였다(임재주 2012, 597). 그리고 헤리티지재단이 1981년 발간한 [리더십을 위한 지침(Mandate for Leadership)]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던 레이건 정부의 정책 교과서로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정당재단들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전범국가로서의 명예를 떨쳐내기 위하여 다양한 민주시민교육과 국제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적실성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들이 이제는 나와야 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6.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6. “5대 정당 정책연구소 예산 운영과 연구실적 분석 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2013. 2013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정책중점 연구소지원사업」신청 요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김형준·김도중. 2011.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현대정치연구』 제4권 1호: 5-36.
- 김희민·리처드 포딩 지음/조진만·김홍철 옮김. 2007. 『매니페스토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서구 25개국의 매니페스토 연구』 서울: 오름.
-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 2013.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민주통합당 혁신 방안.” 2013년 3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신관) 제2세미나실.
- 박명준. 2012. 『독일의 싱크탱크 산책: 대안의 정책을 만드는 생각 공장을 가다』 서울: 이매진.
- 신두철. 2007.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와 독일 정당 재단의 역할과 특징: 2005년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성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5권 1호: 157-176.
- 여의도연구소. 2013. 『정당 싱크탱크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 임재주. 2012.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 의회』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정서환. 1997.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싱크탱크』 서울: 모색.
- 조진만. 2008. “한국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2호: 111-13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2005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_____. 2007. 『2006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_____. 2008. 『2007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_____. 2009. 『200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_____. 2010. 『2009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_____. 2011. 『201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_____. 2012. 『201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한국정당학회. 2013.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최준영. 2008.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치개혁은 가능한가?” 『국가전략』 제14권 3호: 169-195.
- 한국정당학회. 2012. 『제18대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아젠다 개발』 201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역보고서.
- 황윤원. 2008. “우리나라 정당 싱크탱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5권 3호: 383-413.
- 황윤원 외. 2003. 『싱크탱크와 국가 경쟁력』 서울: 나남.

- Dickson, Paul. 1972. *Think Tanks*. New York: Atheneum Pres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 Key, V. O. 1966. *The Responsive Electora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icci, David M. 1993.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The New Washington and the Rise of Think Tank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obertson, David. 1976. *A Theory of Party Competition*. London: Wiley.
- Smith, James A. 1991. *The Idea Brokers: Think Tanks and the Rise of the New Policy Elite*. New York: Free Press.

〈부록 1〉 2012년 정책연구소 수입과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 연구소	수 입				지 출				잔액
	정당 자원금	기타 수입	전년도 이월금	합계	인건비	정책 개발비	기타	합계	
여의도연구소	8,697 (88.5%)	471 (4.7%)	657 (6.6%)	9,826	5,696 (61.8%)	1,259 (13.6%)	301 (3.3%)	9,207	618
민주정책연구원	5,427 (93.1%)	15 (0.3%)	384 (6.5%)	5,827	3,044 (59.6%)	1,654 (32.4%)	-	5,106	721
진보정의연구소	149 (86.7%)	22 (12.8%)	-	172	26 (28.2%)	4 (4.3%)	0	93	79
진보정책연구원	768 (82.4%)	0	163 (17.5%)	932	462 (64.8%)	106 (15.0%)	-	712	219
합계	15,043 (89.7%)	510 (3.0%)	1,205 (7.1%)	16,759	9,229 (61.4%)	3,025 (20.0%)	301 (1.9%)	15,120	1,638

※ 1.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고려하지 않았음.

2. 지출에서 합계는 표에서 제외된 사무소 설치, 운영비, 조직활동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

〈부록 2〉 2012년 정책연구소 재산과 수입·지출 세부 내역

(단위: 원)

구분	연구소		총계	여의도 연구소	민주정책 연구원	진보정의 연구소	진보정책 연구원	
재 산	토지		-	-	-	-	-	
	건물		-	-	-	-	-	
	주식 또는 유가증권		-	-	-	-	-	
	비 품		600,301,310	498,864,780	67,550,560	-	33,885,970	
	현금 및 예금		1,638,832,322	618,561,559	721,612,590	79,007,959	219,650,214	
	그 밖의 재산		2,917,375,723	2,694,707,583	-	-	222,668,140	
	합계		5,156,509,355	3,812,133,922	789,163,150	79,007,959	476,204,324	
수 입	전년도 이월		1,205,521,787	657,658,002	384,349,384	-	163,514,401	
	당비		-	-	-	-	-	
	기탁금 (중앙당에 한함)		-	-	-	-	-	
	보조금 (중앙당에 한함)		-	-	-	-	-	
	후원기부금		-	-	-	-	-	
	차입금		-	-	-	-	-	
	기관지 발행 사업 수입		-	-	-	-	-	
	지 원 금	보 조 금	상급당부	10,810,379,706	5,614,113,200	4,277,665,446	149,613,060	768,988,000
			하급당부	-	-	-	-	-
			계	10,810,379,706	5,614,113,200	4,277,665,446	149,613,060	768,988,000
		보 조 금 외	상급당부	4,233,336,980	3,083,336,980	1,150,000,000	-	-
			하급당부	-	-	-	-	-
			계	4,233,336,980	3,083,336,980	1,150,000,000	-	-
	소계		15,043,716,686	8,697,450,180	5,427,665,446	149,613,060	768,988,000	
그 밖의 수입		510,127,785	471,302,012	15,814,728	22,950,683	60,362		
합계		16,759,366,258	9,826,410,194	5,827,829,558	172,563,743	932,562,763		

〈부록 3〉 정책연구소 관련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 제한)

-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 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개정 2010.1.25〉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 사무직원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 제25조 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의 연간 평균 인건비에 초과한 유급 사무직원 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에서 "유급 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봉급·수당·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 노무를 제공한 일용 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 마다 1명을 유급 사무직원 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5〉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 사무직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1.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제35조(정기보고)

-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 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 추진 내용과 그 추진 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 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정당법」에는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관련된 조항으로 제39조(정책토론회)가 있다.

※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발췌 및 수정.

〈부록 4〉 정책연구소 관련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 제한 등)

- ①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 설치·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관계비용
-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 추천 보조금은 여성 후보자의, 장애인 추천 보조금은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직원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10.1.25〉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 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 보고를 허위·누락한 경우에는 허위·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8조(보조금의 용도 제한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4. 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 추천 보조금 또는 장애인 추천 보조금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30조(보조금의 반환)

-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 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④ 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이외에도 「정치자금법」에는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관련된 조항으로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38조(정당의 회계 처리), 제40조(회계 보고) 등이 있다.

※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발췌 및 수정

〈부록 5〉 정책중점연구소 지정 기준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사업목적〉

- 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 및 정책 과제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Think-tank로서 대학 내에 전문적이며 특성화된 연구거점 구축
-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학술적으로 중점 연구하는 대학 부설연구소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정책의 품질 제고 및 학술연구의 실용화 도모

〈지원방향〉

- 대학 부설연구소의 연구 인프라 및 거점을 구축하고, 특성화·전문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소를 선정
 - 독립된 전용공간 및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전임 연구인력 확보와 이들의 지위 향상 및 신분 안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등 대학의 연구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연구소 선정
 - 해당 대학의 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하도록 유도

II. 지원 내용

- 지원기간: 3단계 9년(3+3+3)
- 지원대상: 대학 부설연구소

III.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 연구소 요건

- 대학의 총(학)장 추천을 받은 인문사회 및 정책주제 관련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인문사회 분야의 대학 부설연구소란, 연구소 명칭이나 연구자의 전공 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향후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대학 부설연구소를 의미함
 - 연구소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소 정관에 상기 내용을 연구소 목적(목표)로 반영하여야 함
- 대학 당국의 연구소 육성 의지가 확고하고 구체적인 연구소 육성·지원 계획이 수립된 연구소

- 대학측에서 독립된 전용공간과 연구공간을 지원(예정 포함)하고 있으며 전임 연구인력을 확보(예정 포함)하고, 지위 향상 및 신분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대학의 연구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연구소
- 연구소장 책임 하에 타 연구소와 차별화되는 전문화·특성화 발전이 가능한 연구소로서, 전문화·특성화하고자 하는 분야가 해당 대학의 특성화 발전에 부합하여야 함
- 기존 연구소 기반을 토대로 연구 인프라(인력·시설 등) 확장, 학제적 연구, 학술적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소

나. 연구과제·연구진 구성 요건

- 연구소장(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 연구소장은 소속 연구원 및 보조원을 지도·감독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연구소 기반 조성 및 특성화 발전, 인력 양성 및 과제 진행을 관리
 - 단계 내 연구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사망, 질병, 퇴직(정년퇴직 제외)] 없이 변경 불가
- 연구진 자격 요건 및 구성 기준

구분	자격	비고	
총괄 운영 책임자	연구소장	과제별 책임자 겸임 가능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연구업적 제한 없음	과제별 1명	
공동 연구원	일반	연구업적 제한 없음	1명 이상
	전임 연구인력	연구소에 상근하는 박사급 연구원 또는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석사급 연구원	1명 이상
연구보조원	학사·석사·박사 과정생	3명 내외	

- 일반공동연구원: 연구소 소속의 대학 교원(기금, 석좌, 객원교수 포함) 또는 박사급연구원
- 전임 연구인력
 - 연구소에 상근하며,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연구자에 한 함(반드시 대학 총장의 채용 발령)
 - 연구소 전임 연구인력 중 타 대학 박사학위 출신자가 25% 이상이어야 함
 - 전임 연구인력은 신청 대학 이외에 다른 대학에 출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이 허락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
- 연구보조원
 - 연구소장의 책임 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협약 당시 자격을 연구 종료 시까지 인정(연구기간 중 신분 변동 시에도 보조원 인정)

다. 연구소 공간, 전임 인력 인건비, 대응투자 요건 등

구분	기준
시설(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전용공간 49.5m² 이상 확보 ■ 전임 연구인력 전용공간 1인당 4.95m² 이상 확보
전임 연구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700만원 이상 지급
대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자금 확보 의무 없음

라. 연구소 운영 요건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중점연구소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구성: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협력관 등으로 연구소장이 구성
 - 기능: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선정 후 연구소 실행예산 편성, 연구계획 등)
- 연구소장은 임기제로 선임하며(연임 가능), 연구기간 중에는 책임과 권한이 확실하도록 함
- 연구계획서는..... 매년 1회 이상 지원 분야별 관계기관 담당자(공무원, 연구원, 교수 등)에게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연구방향을 협의하여야 함

※ 한국연구재단(2013)에서 부분 발췌 및 수정

〈부록 6〉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중점연구소 지정 기준(신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연구소 기반 (50)	연구소 운영 실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특성화·전문화 추진 실적 ■ 연구비 수주 실적 ■ 연구소 시설 및 연구장비·문헌 보유 현황 등
	연구 인력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의 행정적·학문적 능력 ■ 참여 연구원들의 연구 능력 및 연구 실적 등
	연구소 발전 계획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화·특성화 발전 계획(해당 대학의 특성화 발전 방향과 부합도 포함) ■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연구비 수주 계획 ■ 외부 기관과의 협력 계획(학·연·산 협력 포함) ■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학술지·총서 발간 계획 등
	대학의 육성 계획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중장기적 육성 계획 ■ 대학의 인력 확충·지원 계획 (전임 연구인력 채용, 행정 인력 등) ■ 대학의 재정 투자 및 시설 확충 계획 등
연구 및 인력 양성 (50)	연구과제 수행계획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제안서와의 부합 여부 ■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주제의 창의성·구체성 ■ 연구내용, 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 학제적·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 성과목표(논문·특허·저서)의 적정성 ■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 R&D 기여도 등 파급효과
	인력 양성 계획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연구의 연계 계획(강좌·협동과정 운영 등) ■ 전임 연구인력(교수) 양성 계획
기타	예산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 한국연구재단(2013, 25)에서 발췌

〈부록 7〉 주요 정당들의 정책연구소 관련 규정(당헌 및 강령)

정당	당헌	당규
새누리당	<p>제28절 정책연구소 및 특별기구 제68조(기타 특별기구)</p> <p>①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p> <p>③ 대표최고위원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당내 여성정치발전기금을 구성·운영한다.</p> <p>④ 대표최고위원은 여성·청년 등의 신진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내 정치교육과정을 두며, 여성이 50%이상 참여하도록 한다.</p> <p>⑤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p> <p>⑥ 위 제3항 내지 제4항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 16개 조항), 파견(제19조), 연구소의 사업(제3조), 이사회의 구성(제5조), 정책조정위원회 기능(제7조), 임용자격 및 임면(제12조)</p>
민주통합당	<p>제7장 정책연구소 제76조(정책연구소)</p> <p>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정책 개발, 중장기전략 수립, 당원의 교육과 연수 등을 위해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본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선임하되 당무위원회의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p> <p>③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p> <p>④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p> <p>기타 조항: 전국대의원대회(제14조), 중앙위원회(제18조), 당무위원회(제21조),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회(제40조)</p>	<p>- 당규 제4호: 목적(제1조), 중앙당 구성(제2조), 전략기획위원회(제61조, 전략부소장), 국제국-교류협력(제77조), 사무직 당직자 구분 등(제80조)</p> <p>- 당규 제6호 사무직 당직자인사 및 복무 규정: 사무직 당직자의 범위(제2조), 사무직 당직자의 직제 등(제3조), 직무 계열(제4조), 포상(제25조)</p>

정당	당헌	당규
통합진보당	제9장 정책연구소 제36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규 제7호 정책연구소 (총 22개 조항)
진보정의당	제9장 정책연구소 제40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규 제11호 정책연구소(총 22개 조항) - 통합인사위원회(제3조), 교육·연수위원회(제6조)

※ 출처: 각 정당의 당헌 및 강령에서 발췌

PART 2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

여 의 도 연 구 소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기계회관 신관 3층			√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박사급 : 20	자체고용 : 1	
석사급 : 19		
기 타 : 57	외부파견 :	
합 계 : 96	합 계 : 1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8,271,550,180	314,747	657,580,729	8,929,445,656	8,465,086,805	464,358,851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80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1-2.8	환경노동	명예퇴직 규제 및 정년연장 추진 방안	자체	4p	
1.10-1.31	교육과학기술	총선용 교육공약 개발	자체	7p	
1.21-2.23	지식경제	대기업집단(재벌) 관련 쟁점 검토	자체	8p	
2.1-2.23	국토해양	농어촌마을길 가꾸기 사업 추진 방안	자체	9p	
2.1-2.23	지식경제	농어촌 상상전력 공급촉진 방안	자체	6p	
2.6-2.26	기획재정	주거안정 및 가계부채 대책	자체	16p	
2.20-3.5	국토해양	대학생 주거비 완화 방안	자체	8p	
2.20-3.16	기획재정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자체	4p	
3.2-4.4	기획재정	유류세 공방의 핵심 쟁점 검토	자체	5p	
3.7-3.16	보건복지	장애인 자립수당지원 방안 분석 및 평가	자체	5p	
3.11-3.20	보건복지	무상의료 이슈 분석	자체	10p	
3.12-3.16	외교통상통일	이어도 문제, 진단과 해법	자체	3p	
3.16-3.19	외교통상통일	北 미사일 발사의 의도 및 대책	자체	3p	
3.21-3.29	교육과학기술	고리원전(1호기) 사고원인 분석과 대책	자체	13p	
3.30-4.15	농림수산식품	삼겹살 할당관세 연장: 현황과 과제	자체	2p	

4.1-4.24	정무	대부업 피해의 현황과 대책	자체	9p	
4.2-4.30	보건복지	무상의료 재원조달방안 검토	자체	13p	
4.9-4.29	기획재정	유류세 인하: 쟁점과 대책	자체	10p	
4.27-5.16	행정안전	총선(4.11) 재외선거 결과 분석 및 대선 대책	자체	18p	
5.1-5.13	행정안전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의 문제점	자체	2p	
5.1-5.11	행정안전	오픈프라이머리의 올바른 이해	자체	17p	
5.1-5.17	행정안전	개방형 대통령 후보 경선제도 분석	자체	15p	
5.17-5.29	행정안전	예비선거제도의 이해	자체	89p	
6.15-7.2	행정안전	개방형 국민경선 발의 법안 비교	자체	6p	
6.20-6.30	정무	자본주의체제의 변천과정	자체	4p	
7.1-7.2	기획재정	서민가계의 부동산발 가계부채 문제	자체	1p	
7.2-7.10	보건복지	0-2세 무상보육 지방재정부담 대책 (여연이슈분석)	자체	10p	
7.3-7.24	보건복지	0-5세 양육수당 도입에 따른 보육예산 추계	자체	11p	
7.15-7.30	기획재정	국내외 경제전망 및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자체	7p	
7.20-7.26	외교통상통일	대북식량차관 원리금 상환 관련 대책	자체	3p	
7.22-8.8	보건복지	무상보육 보완 방안	자체	4p	
7.22-8.8	지식경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 협동조합	자체	8p	
8.1-8.20	기획재정	주택담보대출 관련 DTI 규제완화 검토	자체	6p	

8.2-8.20	국방	외교안보국방 분야 포지션페이퍼: 사병월급 인상	자체	3p	
8.2-8.20	국방	외교안보국방 분야 포지션페이퍼: 제주해군기지	자체	2p	
8.2-8.20	국방	외교안보국방 분야 포지션페이퍼: 전시작전통제권	자체	3p	
8.2-8.20	외교통상통일	외교안보국방 분야 포지션페이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	3p	
8.3-8.27	외교통상통일	대북·통일 분야 현안정리(포지션페이퍼)	자체	30p	
8.4-8.18	기획재정 지식경제	거시·재정·국제경제 분야 현안 정리(포지션페이퍼)	자체	20p	
8.5-8.27	법제사법	정치행정 분야 포지션페이퍼: 헌법개정	자체	6p	
8.5-8.27	정무	정치행정 분야 포지션페이퍼: 책임총리제	자체	5p	
8.5-8.27	행정안전	정치행정 분야 포지션페이퍼: 선거제도 개편	자체	5p	
8.5-8.27	국회운영	정치행정 분야 포지션페이퍼: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 강화	자체	4p	
8.5-8.27	행정안전	정치행정 분야 포지션페이퍼: 정부조직개편	자체	7p	
8.5-8.27	행정안전	정치행정 분야 포지션페이퍼: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체	9p	
8.5-8.27	행정안전	정치행정 분야 포지션페이퍼: 공직인사	자체	8p	
8.5-8.27	법제사법	정치행정 분야 포지션페이퍼: 상설특검	자체	14p	
8.6-8.26	교육과학기술	교육 정책 포지션페이퍼	외부 공동	18p	
8.12-8.22	보건복지	복지포플리즘	자체	4p	
8.13-10.11	지식경제	일자리 창출 방안	자체	5p	

8.14-8.28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문화 정책 포지션페이퍼	외부 공동	6p	
8.14-8.28	여성가족	여성 정책 포지션페이퍼	외부 공동	13p	
8.14-8.28	여성가족	청소년 정책 포지션페이퍼	외부 공동	6p	
8.14-9.5	정무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TV 토론 분석	자체	20p	5회
8.15-8.27	국토해양	전월세 상한제: 법제화 대안 검토	자체	25p	
8.15-9.10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오바마 뉴미디어 활용방안 연구	자체	17p	
8.19-8.27	환경노동	비정규직 공약 비교	자체	4p	
8.19-8.27	환경노동	비정규직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방안	자체	4p	
8.27-9.21	지식경제	현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	12p	
8.28-9.5	국토해양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제공	자체	3p	
9.1-9.10	교육과학기술	원전 논란에 대한 대응	자체	4p	
9.1!9.24	정무	부산지역 민심 동향 및 정책니즈 파악	외부 공동	33P	
9.3-10.8	지식경제	60-70년대 주요경제지표 검토	자체	8p	
9.4-9.7	외교통상통일	한미 특허권 분쟁: ISD 제기 가능성 검토	자체	3p	
9.7-9.13	보건복지	의료사각지대 해소방안	자체	6p	
9.8-9.15	지식경제	중소/중견 기업 육성 방안	자체	4p	
9.8-9.16	정무	대출금리 차별논란 검토: 기업규모 및 학력 기준	자체	2p	
9.10-9.17	환경노동	최저임금	자체	4p	

9.13-9.19	환경노동	퇴직인력 활용방안	자체	4p	
9.16-9.21	환경노동	학력타파 취업시스템	자체	5p	
9.24-10.25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국민행복 문화 정책	외부 전문가	37p	
10.1-10.15	정무	대통령후보 이미지 비교	자체	6p	
10.2-10.19	외교통상통일	민족화합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	자체	7p	
10.3-10.7	국토해양	유수지 내 임대주택 건축 검토	자체	2p	
10.15-10.23	지식경제	중소기업개발 5개년 계획	자체	10p	
10.15-10.16	정무	대통령후보 정책이미지 분석	자체	6p	
10.16-10.20	정무	대통령선거 공약홍보 효과분석: 가족행복 5대 약속	자체	10p	
10.16-10.22	정무	역사인식 논란과 대책: 유신체제를 중심으로	자체	19p	
10.18-12.20	지식경제 기획재정	차기정부 민생과제 개발	외부 전문가	199p	
10.20-12.28	지식경제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외부 전문가	248p	
11.30-12.28	행정안전	효율적 정당조직 구성 및 운영방향	외부 전문가	17p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4요내용 80부.

나. 토론회 등 개최(42회 및 여론조사 727회 이상)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1.6~1.7 (2일)	통일교육원	통일, 그 빛과 그림자	독일 사례로 본 통일에 대처하는 청년의 자세	아데나워 재단 한국소장 초청
세미나	1.19	여의도연구소	청년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세지	대학생 대상 특강 및 토론	김광림 여의도연구소 소장
세미나	1.26	여의도연구소	무역 1조 클럽에 오르다	대학생 대상 특강 및 토론	나성린 의원 초청
세미나	2.16	여의도연구소	한국 문화의 힘, 한류	대학생 대상 특강 및 토론	다문화 콘텐츠협회 회장 초청
세미나	2.23	청와대	소통하는 대한민국	대학생 대상 특강 및 토론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초청
토론회	2.27	여의도연구소	20대, 청년 정책을 말하다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제안	
토론회	3.5	여의도연구소	국민생활정책	일본 국민생활정책 (내각부 관계자 초청)	
토론회	3.13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경제고용 분과 5차 회의	
토론회	5.4	프레스센터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 19대 국회의 과제	김정은 체제와 남북 관계에 대한 분석과 전망	북한연구학회 및 4당 부설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	5.11	여의도연구소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정책 전문가 토론	
세미나	5.18	여의도연구소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대학생 대상 특강 및 토론	김광림 여의도연구소 소장
토론회	5.18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복지여성환경 분과 - 이혼방지 대책	
세미나	5.25	여의도연구소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	대학생 대상 특강 및 토론	강석훈 의원 초청

토론회	5.31	여의도연구소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통과의 의미	김종걸 교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세미나	6.2	여의도연구소	북한을 통해 본 한반도 안보상황	대학생 대상 특강 및 토론	아데나워 재단 한국 소장 초청
세미나	6.8	여의도연구소	변화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역할은?	대학생 대상 특강 및 토론	대학내일 20대연구소 소장 초청
토론회	6.21	국회 소회의실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경제운용, 통화거시 금융안정, 민생안정, 부동산/가계부채	
토론회	6.25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복지여성환경 분과 - 안락사 논쟁	
토론회	7.9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정치행정 분과 - 대통령 선거 주요 정당 정책분석 및 대응전략	제3차 정례 회의
포럼	7.20	여의도연구소	대한민국 2030 천개의 목소리 I	20대 청년 정책니즈 파악 정책발표	서울/경기/ 인천
포럼	7.28	경북대학교	대한민국 2030 천개의 목소리 I	20대 청년 정책니즈 파악 정책발표	대구/경북
포럼	7.29	부산 토즈 서면점	대한민국 2030 천개의 목소리 I	20대 청년 정책니즈 파악 정책발표	부산/울산/ 경남
포럼	8. 4	충남대학교	대한민국 2030 천개의 목소리 I	20대 청년 정책니즈 파악 정책발표	대전/충청
간담회	8.5	상암DMC	당 대선 경선 후보 타운미팅	박근혜 후보와 대학생간의 대화	
포럼	8.11	김대중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2030 천개의 목소리 I	20대 청년 정책니즈 파악 정책발표	광주/호남
토론회	8.23	여의도연구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고양시 시민 자원봉사대 초청
포럼	8.25	한림대학교	대한민국 2030 천개의 목소리 I	20대 청년 정책니즈 파악 정책 발표	강원/춘천/ 원주
토론회	9.11	여의도연구소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의 방향 정책토론	

토론회	9.11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경제고용 분과 6차 회의	
토론회	9.12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외교안보통일 분과 -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세종연구소 김성철 박사 초청
토론회	9.13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정치행정 분과 - 안철수 현상 분석 야권후보 단일화 등	제4차 정례 회의
토론회	9.19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외교안보통일 분과 - 김정은 체제의 권력 구조와 대남 정책 전망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초청
토론회	9.26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외교안보통일 분과 - 한일관계 해법	국립외교원 윤덕민 교수초청
토론회	10.8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외교안보통일 분과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양대 홍용표 교수 초청
토론회	10.11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경제고용분과 7차 회의	
토론회	11.1	여의도연구소	중국 시진핑 체제의 현재와 미래	시진핑 체제의 권력 구조와 대한반도 정책 전망	내부 자문회의
포럼	11.16	국회 헌정기념관	대한민국 2030 천개의 목소리Ⅱ	20대 청년 정책니즈 파악 정책발표	서울/경기/ 인천/강원
포럼	11.17	경북대학교	대한민국 2030 천개의 목소리Ⅱ	20대 청년 정책니즈 파악 정책발표	대구/경북
포럼	11.17	조선대학교	대한민국 2030 천개의 목소리Ⅱ	20대 청년 정책니즈 파악 정책발표	광주/호남
포럼	11.18	부산 토즈 서면점	대한민국 2030 천개의 목소리Ⅱ	20대 청년 정책니즈 파악 정책발표	부산/울산/ 경남
포럼	11.18	충남대학교	대한민국 2030 천개의 목소리Ⅱ	20대 청년 정책니즈 파악 정책발표	대전/충청
토론회	11.21	국회 소회의실	기로에 선 한국경제 해법	경제위기, 일자리·성장, 경제민주화의 해법	

여론조사	1월	여의도연구소	ARS 조사	정치이념 등	3회
	2월	여의도연구소	ARS 조사	재벌개혁 등	4회
	3월	여의도연구소	ARS 조사	총선관련 이슈 등	4회
			ARS 조사	총선관련 지지율 조사 등	360회
	4월	여의도연구소	ARS 조사	총선관련 지지율 조사 등	296회
			FGI 조사	지역별 맞춤형 정책개발조사	
	6월	여의도연구소	ARS 조사	국회 개원 이슈 등	2회
	7월	여의도연구소	ARS 조사	대법관 임명 등	4회
	8월	여의도연구소	ARS 조사	국정운영평가 등	6회
		여의도연구소	ARS 조사	대선 지지율 등	1회
	9월	여의도연구소	ARS 조사	국정감사 이슈 등	6회
			ARS 조사	대선 지지율 등	5회
		외부용역	정책 조사	18대 대선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비공개
	10월	여의도연구소	ARS 조사	창조경제 등	3회
		여의도연구소	ARS 조사	대선 지지율 등	5회
	11월	여의도연구소	ARS 조사	투표율 제고 방안 등	3회
		여의도연구소	ARS 조사	대선 지지율 등	9회
	12월	여의도연구소	ARS 조사	대중교통 법안 등	1회
여의도연구소		ARS 조사	대선 지지율 등	15회	
여론동향 분석	1~7월	여의도연구소	여론동향분석	월간 여론동향분석	7회
이슈포인트 조사	1~7월	여의도연구소	이슈포인트	주간 이슈포인트	28회
데일리 포커스 조사	8~10월	여의도연구소	데일리 포커스	데일리 포커스	51회

다. 교육·연수활동(13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청년미래포럼 NON-論 4기 오리엔테이션	1.6~1.7 (2일)	여의도연구소/ 통일교육원	대학생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청년미래포럼 NON-論 4기 미디어 견학	2.3	여의도 MBC 스튜디오	방송국 견학 및 방송 미디어 정책 토론	
청년미래포럼 NON-論 4기 안보 견학	2.10	해군 제2함대 천안함 공원	안보현장 견학 및 관련 정책 토론	
청년미래포럼 NON-論 4기 기업 견학	2.10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	산업현장 견학 및 관련 정책 토론	
청년미래포럼 NON-論 4기 현장 학습	2.17	서울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 현장 봉사 활동 및 정책 토론	
청년미래포럼 NON-論 4기 정부 견학	2.23	청와대	청와대 견학 및 정부 정책홍보 시스템 교육	
청년미래포럼 The 流 10기 오리엔테이션	5.18	여의도연구소	대학생 운영진 오리엔테이션 실시	
청년미래포럼 The 流 10기 현장학습	5.22	암사재활원	장애아동복지 현장 봉사 활동 및 정책 토론	
청년미래포럼 The 流 10기 현장 학습	6.2	국회	대한민국 국회 견학	
청년미래포럼 The 流 10기 포털사 방문	6.27	네이버	인터넷미디어 업체 견학 및 관련 정책 토론	
청년미래포럼 The 流 10기 현장학습	9.1	암사재활원	장애아동복지 현장 봉사 활동 및 정책 토론	
청년미래포럼 The 流 11기 오리엔테이션	10.12	국회	대학생 운영진 오리엔테이션 실시	
청년미래포럼 The 流 11기 현장학습	12.15	암사재활원	장애아동복지 현장 봉사 활동 및 정책 토론	

라. 정책홍보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5	인터넷	e-뉴스레터	대한민국 드림토크, 청춘, 드림멘토를 만나다 외	청년미래포럼 제10호
1.5	인터넷	사이트 게재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임직원 상견례	대외홍보
1.26	인터넷	사이트 게재	[청년미래포럼 특강] 김광림 소장 ‘청년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교육/연수
2.16	인터넷	사이트 게재	신동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임명	대외홍보
3.5	인터넷	사이트 게재	‘일본 국민생활정책의 현 주소와 한국에의 시사’ 간담회	간담회
3.12	인터넷	e-뉴스레터	일본 국민생활정책 관련 간담회, 2011년 여의도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외	제130호
3.19	인터넷	e-뉴스레터	청년미래포럼 NON-論 4기 입학식 외	청년미래포럼 제11호
5.4	인터넷	e-뉴스레터	청년미래포럼 기자단 3기 발대식 외	청년미래포럼 제12호
5.10~5.12 (3일)	인터넷 및 각 언론사	언론 배포 및 사이트 게재	경제민주화 전문가 간담회 행사계획 및 결과 홍보	
5.1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정책간담회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
5.21	인터넷	e-뉴스레터	경제민주화 간담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당선수락 연설 외	제131호
6.19	인터넷	e-뉴스레터	청년미래포럼 The 流 10기 전국 발대식 외	청년미래포럼 제13호
6.21	인터넷 및 각 언론사	사이트 게재 및 언론배포	정책토론회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보도자료
7.2	인터넷	e-뉴스레터	한국경제 긴급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외	제132호
7.9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제3차 정례모임	정책자문 회의

7.10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소 신임 부소장단 선임	대외홍보
7.16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소 신임 부소장단 임직원 상견례 및 임명장 수여식	대외홍보
7.20	인터넷 및 각 언론사	사이트 게재 및 언론배포	청년미래포럼 정책타운미팅 '정책전문가와 함께하는 천개의 목소리'	교육/연수
7.20	인터넷	e-뉴스레터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제3차 정례모임, 경제토론회 결과보고서 외	제133호
8.13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자문회의
8.21	인터넷	e-뉴스레터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토론회 외	청년미래포럼 제14호
8.29	인터넷	사이트 게재	협동조합 관련 간담회	간담회
9.11	인터넷 및 각 언론사	사이트 게재 및 언론배포	정책토론회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자료
9.13	인터넷 및 각 언론사	언론 배포 및 사이트 게재	경제민주화 정책토론회 행사계획 및 결과 홍보	
10.16	인터넷	e-뉴스레터	청년미래포럼 광주/전라지부 천개의 목소리 외	청년미래포럼 제15호
11.21	인터넷 및 각 언론사	사이트 게재 및 언론배포	경제토론회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자료
11.29	인터넷	e-뉴스레터	청년미래포럼 The 流 11기 오리엔테이션 외	청년미래포럼 제16호
1~12월	인터넷	사이트 게재	대통령 및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 게재	23건 게재
1~12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연구소 정책 홍보물, 블로그 게재	12건 게재
1~12월	인터넷	사이트 게재	당·정·청 및 정책연구소, 시민단체의 정책자료 게재	737건 게재
1~12월	인터넷	사이트 게재	새누리당 및 당 소속 국회의원 정책행사 일정 안내	47건 게재
1~12월	인터넷	사이트 게재	해외 주요 싱크탱크(6곳)의 정책자료 게재	136건 게재

1~12월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연구소 관련 주요 언론 기사 게재	50건 게재
1~12월	인터넷 및 각 언론사	보도자료	여의도연구소 주최 토론회 등 주요행사 안내 및 간행물 발간 보도자료 발송	10건 게재
1~12월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연구소 주요 활동 소개 및 토론회 개최	53건 게재
1~12월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연정책소통(네티즌 질의에 대한 여의도연구소 연구진 답변), 플레이톡(네티즌 한줄 게시판), YDI photo(연구소 활동사진) 등 콘텐츠 운영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4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6.21	토론회 자료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자체	800부/토론회장 및 당내 배포	
9.11	토론회 자료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	300부/토론회장 및 당내 배포	
9.19	백서	팩트북	자체	10부	정책 일반
11.21	토론회 자료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	800부/토론회장 및 당내 배포	

바. 그 밖의 주요활동(9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2.16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책연구소 업무협의회	업무협의 및 토론	
2.21	연세대학교 대우관	한국경제학회 창립60주년 기념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3분과회의	“우리나라 국제영화제 방문객의 특성 비교연구” 토론 및 논문심사	한국문화 경제학회
4.4	국회	2012년 양대선거 정책선거화를 위한 “매니페스토 개선방향과 (가칭)선거 정책타운미팅” 제도의 제안 토론회	패널 토론	한국정치학회, 서울시 선거 관리위원회 등
4.26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원자력 대국민토론회	‘에너지 확보와 원자력,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가?’ 주제 토론	한국원자력 협회 등 공동개최
4.27	상공회의소 대회의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방향’	패널 토론	
6.15	동덕여자 대학교 국제회의실	춘계학술대회 ‘한류의 문화경제적 재조명’	‘한류 한국영화의 상승과 추락’ 주제 토론	한국문화 경제학회
8.13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2012년도 연구소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8.22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설명회’	설명청취 및 토론	
10.30	한국과학 기술회관	‘세계적 전환기 세계과학기술정책’	패널 토론	

주제 : 명예퇴직 규제 및 정년연장 추진 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1월 1일 - 2월 8일(1개월 8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명예퇴직 규제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따른 정년연장 추진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기업들의 명예퇴직 관행화로 인한 장년근로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명예퇴직을 규제함으로써 정년제를 실질적으로 보장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노동력 부족·복지재정 압박, 기업 차원의 인적자원·기술의 사장, 근로자의 근로소득 상실·자영업의 과당 경쟁과 같은 사회경제적 부작용 해소를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60세로 정년연장 의무화 추진
- 연구성과
 - 노동 관련 공약안으로 제출
 - 60세 정년연장안이 총선 공약으로 채택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총선용 교육공약 개발

- 연구기간 : 2012년 1월 10일 - 1월 31일(22일)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민들이 희망하는 교육공약을 개발하고 이를 총선에서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입법이라고 하는 정당 고유의 정책역할 수행
- 연구내용
 - 2017년 5세 전면 무상의무교육 실시
 - 2013~16년까지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표준교육비 31만원 전액 지원
 - '식자재공급 국가 책임제' 실시(국가 인증 마크제, 전자조달 시스템 등)
 -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사립대 장학금 확대
 - 등록금 원가 공개 강화 및 등록금 체계 개편(수강 강좌수에 따른 차등화)
 - ICL 이자 제로화 및 20~30년 장기 상환 도입
 - 청소년 폭력 전담부서 설치 및 가해청소년 후견인 제도 도입
 - 2015년까지 청소년 전문상담교사 1만명 단계적 채용 등
- 연구성과
 - 교육정책 공약 자료집 구성에 활용

주제 : 대기업집단(재벌) 관련 쟁점 검토

- 연구기간 : 2012년 1월 21일 - 2월 23일(1개월 3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재벌·대기업 관련 최근 쟁점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관련 대책과 정치권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
- 연구내용
 -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경제력집중 및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원인 제공, 동반성장·공생발전의 의지 미약, 도덕성 약화 및 사회적 책임 회피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재벌체제의 물리적 해체보다는 시장중심의 발전적 재벌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감세, 고환율, 출총제 폐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재벌 행태를 규제해야 하며, 납품단가 인하요구, 기술탈취, 인력탈취 등에 대응할 하도급기업의 협상력 강화 필요. 또한 기존 법제도의 준수 및 엄정한 집행 유도 등 법치 확립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경제민주화' 논의 활성화에 기여

주제 : 농어촌마을길 가꾸기 사업 추진 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2월 1일 - 2월 23일(23일)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낮은 포장율·조악한 포장질로 인한 주민불편, 교통사고 위험, 도농간·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지원을 통한 농어촌도로 정비 추진
- 연구내용
 - 기초자치단체장이 전담 도로관리청인 현행 정비체계와 기초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형편, 중앙정부의 제한적 지원이 농어촌도로 정비 추진의 문제점으로 대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농어촌마을길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한시적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국가지원 근거 마련
 -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을 위한 지방재원 의무할당제 실시 및 마을 단위 정비 사업 추진시 농어촌 마을공동체 주도 등 참여활성화를 통한 정비 촉진
- 연구성과
 - 정책 공약 수립에 활용

주제 : 농어촌 삼상전력 공급촉진 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2월 1일 - 2월 23일(23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한 한국전력의 삼상전기 시설 비용부담 체계를 개선하여 삼상전기 무공급지역 해소 및 농어가에 삼상전기 공급 촉진
- 연구내용
 - 삼상전기 신규 신청시 배전선로 공사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용가 부담
 - 이미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삼상전기 배전선로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격거리가 커 개별 수용가가 부담하기 곤란한 과중한 시설부담금 발생
 - 현행 비용부담 체계는 선후차 수용가 간 시설비 전가현상 발생, 전력수용가 간 인입거리에 따른 시설부담금 차등 부과 등 형평성 결여
 - 정부와 한전이 '농어촌 삼상전기 보급촉진의 해'를 설정하고 수용가 부담비용의 정액화 및 한도 설정, 장기분할 납부 허용, 일괄신청·공동시공, 정부보조금 지급 등 보급 활성화 추진
- 연구성과
 - 정책 수립에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주거안정 및 가계부채 대책

- 연구기간 : 2012년 2월 6일 - 2월 26일(21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가계대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나,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가계대출 중 상당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안정성은 주택가격, 금리와 연관되어 있어 거시 및 미시대책을 포함하여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도입할 필요
- 연구내용
 - 보금자리주택을 서민 장기임대주택 중심으로 대폭 개편
 - 주택마우처제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제고
 - 예방적 차원에서 전월세 변동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도입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가계부채 축소 및 금리인하 유도
 - 최고이자율을 30%로 낮추되, 대출비용의 인하를 지원
 - 휴면예금을 국가에 귀속하고, 서민 신용회복 조기지원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대학생 주거비 완화 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2월 20일- 3월 5일(15일)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현황 파악과 국토해양부의 전세임대주택 방안의 문제점 검토 및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확대 방안 제시
- 연구내용
 - 대학생의 약 47%가 주거 임대, 그 가운데 73%가 월세, 14.3%가 전세, 대학생의 85.6%가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국토해양부의 전세임대주택 방안은 월세 물량이 전세 물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전세임대주택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며 전세임대주택 지원수를 만 명으로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전세임대주택, 기숙사 공급 확대, 전세임대주택 대상자 기준 완화, 전세임대주택 대상자 확대, 특별 기금을 마련하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 연구기간 : 2012년 2월 20일 - 3월 16일(26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속되는 거래실종 등 부동산시장 침체 여건에서 거래세 정책 전환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부동산거래 세금의 실질적 증가는 '거래세 인하 및 보유세 인상'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부동산 취득·임차 비용 인상으로 가계부담 가중
 - '한시적 감면' 형태의 현행 거래세법·정책은 국민들에게 비정상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행정 편의' 우선의 정책)
 - 세수의 일시적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거래세를 선진국 형태로 전환해야 할 시점. 단기적으로는 2011년 3월 시행했다 연말에 환원한 50% 추가 감면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세(취득세 및 각종 부가세 포함)의 법정 세율 상한을 2% 이내로 한정함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유류세 공방의 핵심 쟁점 검토

- 연구기간 : 2012년 3월 2일 - 4월 4일(1개월 3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유류세 인하 및 인하불가 주장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방의 핵심 쟁점을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방안 제시
- 연구내용
 - 현행 유류세율 구조는 김대중 정부 당시 IMF 대응을 위해 5년간 한시적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나, 지금은 균형재정의 핵심 축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
 - 현행 높은 유류세율은 저소득근로자, 영세자영업 종사자, 중소기업 등 서민에 더 부담되는 불평등한 구조→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
 - 유류세수는 국가 재정운용에 필수적인 정책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서민의 기름값 부담뿐 아니라 기업들의 고유가에 따른 원가부담을 줄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유류세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
 - 현행 탄력세율(상하 30%) 범위 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조정 및 현행 3% 기본세율의 할당관세도 인하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장애인 자립수당지원 방안 분석 및 평가

- 연구기간 : 2012년 3월 7일 - 3월 16일(10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장애인 자립수당과 관련 야당에서 제시된 지원 방안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모색
- 연구내용
 -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장애인에게 자립지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정책 방안은 ‘급격한’ 국고 부담 증가, 근로 가능한 장애인의 근로 유인 제공 방안 부재, 2010년 7월부터 시행중인 장애인 연금 수령자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한 계산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됨
 - 따라서 근로가능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 강화, 장애인 창업 지원 강화 등의 방안 모색과 장애인 차별의식의 축소를 위한 대대적인 국민 홍보 및 장애연금 미수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 연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무상의료 이슈 분석

- 연구기간 : 2012년 3월 11일 - 3월 20일(10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근 야당에서 발표한 무상의료 방안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모색
- 연구내용
 - 제시된 안에 따르면 입원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무상의료는 실제론 유상이고, 보장성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내포
 -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질병은 모두 급여로 포함되어 있고 비급여 진료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건강보험 부담 발생. 또한 본인 부담률이 높은 이유의 하나는 과잉진료임
 -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 전환하게 되면 불필요한 과잉 진료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제도 등의 운영으로 의료비 과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이어도 문제, 진단과 해법

- 연구기간 : 2012년 3월 12일 - 3월 16일(5일)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이어도 문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수립
- 연구내용
 - 한국은 '중간선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확정해야하며 그러면 이어도는 우리 EEZ에 속한다는 입장이며 이 중간선 원칙은 국제법상 EEZ경계획정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원칙
 - 통다오 ---247km(약133해리)---이어도---149km(약80해리)---마라도**
 - 반면, 중국은 EEZ와 관련하여 △중국 해안선이 우리의 서해안·남해안 해안선보다 길고, △중국 해안으로부터 이어지는 해저 대륙붕의 길이를 고려할 때 기계적인 중간선 획정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
 - 이어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협상을 통해 기술적인 경계획정을 하면 해결될 외교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음 → 현실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정책적 입장 정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北 미사일 발사의 의도 및 대책

- 연구기간 : 2012년 3월 16일 - 3월 19일(4일)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3.16)함에 따라 북한의 발사 의도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검토
- 연구내용
 -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압박하려 한다는 관점은 무리가 있음
 - 발사방향이 서해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국을 자극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함
 - 아울러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와 체제 결속을 위한 목적도 동시에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연구성과
 -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고리원전(1호기) 사고원인 분석과 대책

- 연구기간 : 2012년 3월 21일 - 3월 29일(9일)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고리원전(1호기) 사고원인 분석과 대책마련
- 연구내용
 - 고리 원전 1호기의 사고는 안전 점검 부실, 조작 실수, 매뉴얼 무시, 사고 은폐(보고 부실) 등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냄
 -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 자연재해(후쿠시마)와 인재(체르노빌) 등 모든 가능한 원전 사고의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완벽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윤·평가 위주의 한수원 경영 평가 체제를 안전성 최우선의 평가 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삼겹살 할당관세 연장: 현황과 과제

- 연구기간 : 2012년 3월 30일 - 4월 15일(17일)
- 연구분야 : 농림수산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한양돈협회는 정부의 삼겹살 무관세수입 연장 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 중
 - 연장 時 4월2일부터 출하를 중단할 예정임을 천명
 - 삼겹살 할당관세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
- 연구내용
 - 서민계층을 위한 소비자 가격 안정화와 함께 수입 확대에 의한 양돈업계의 피해 최소화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
 - 그러나 출하중단은 소비자를 볼모로 함으로써 비판의 여지가 있음
 - * 구제역 과동 時 일부 업자들의 보상 관련 도덕적 해이
 - * 양돈업은 평균 1천두 이상으로 통상적인 소농은 아님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대부업 피해의 현황과 대책

- 연구기간 : 2012년 4월 1일 - 4월 24일(24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부업을 중심으로 한 서민층 금융서비스의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해법을 제시
- 연구내용
 -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은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과 같은 사금융으로부터의 고금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 또한 과다·다중채무 및 채무불이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금 이용자와 금융공급자간 대출약정에 대한 이해격차 문제도 종종 발생함
 -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할 정책적 해법으로는 대출자로 하여금 올바른 금리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토록 강제, 법정 최고금리는 세계적 저금리추세 지속, 선진국들에서 시행 중인 관련 규제 도입, 관련업계의 수익률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금리(연 39%)보다 소폭 인하 등. 또한, 사금융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제재가 강력히 이뤄져야 하며, 대부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대대출억제를 위한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무상의료 재원조달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12년 4월 2일 - 4월 30일(29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무상의료 재원조달 방안 검토 및 대안모색
- 연구내용
 -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2배로 증가
 - 상위 30%에게 국민의 추가 보험료 부담의 60%를 부과할 경우, 상위 30%의 건강보험료는 거의 4배 증가하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역시 급격히 증가
 -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종합소득으로 재편, 복지 전달체계 개혁 및 직장가입자의 세대원 수에 따른 추가 징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유류세 인하: 쟁점과 대책

- 연구기간 : 2012년 4월 9일 - 4월 29일(21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찬·반 논쟁이 점차 격화되는 추세
 - 주요 쟁점사안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책대안을 검토
- 연구내용
 - 확인 결과, 유류세 인하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은 매우 미흡
 - 장기적으로 유류 소비 억제를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경감할 필요
 -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충격의 완화, 물가 안정을 통한 경기 후퇴의 억제 등 다양한 목표를 동시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조기 시행 또한 고려할 필요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총선(4.11) 재외선거 결과 분석 및 대선 대책

- 연구기간 : 2012년 4월 27일 - 5월 16일(20일)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9대 총선 재외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대선의 재외선거 전략 수립
- 연구내용
 - 지역구 득표율: 새누리당 34.77%, 민주통합당 51.38%
 - 비례대표 득표율: 새누리당 40.07%, 민주통합당 35.06%
 - 재외선거는 여당·보수정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선거였음
 - 대선의 재외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과 구체적 대책 제시
 - 제도 개선과 관련 재외국민들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 필요
 -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선거홍보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재외국민들의 민심 및 정책 니즈 파악 및 정책 개발에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의 문제점

- 연구기간 : 2012년 5월 1일 - 5월 13일(13일)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완전국민경선제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토
- 연구내용
 - 미국의 경우 대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민주주의 방식이며, 기존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간접 민주주의 방식에서 국민의 뜻을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 '완전국민경선제'를 시행
 - 반면 한국의 경우 정당정치를 바탕으로 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완전국민경선제'로 실시할 경우 정당의 존재와 주요 역할의 의미가 대폭 감소 또는 상실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위배
- 연구성과
 - 본 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장 정립 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오픈프라이머리의 올바른 이해

- 연구기간 : 2012년 5월 1일 - 5월 11일(11일)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논쟁을 계기로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 제도 전반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객관적 설명자료의 필요성에 부응
- 연구내용
 -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절차, 전당대회 대의원단 구성, 정당대회 대의원단 선출방법 등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제도 전반에 관한 객관적 설명
 - 코커스 시스템과 예비선거제도, 유권자 자격·대의원 배분방법을 기준으로 한 미국 예비선거 유형 등 주 단위 대의원 선출방법의 다양성에 관한 이해 제고
 - 미국 예비선거 제도와 우리 당 경선제도의 비교를 통해 두 제도의 공통점과 차별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개방형 대통령 후보 경선제도 분석

- 연구기간 : 2012년 5월 1일 - 5월 17일(17일)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논쟁을 계기로 미국의 예비선거 제도 및 우리나라 주요 정당이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미국식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운영경험을 되돌아보며 예비선거 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을 분석
 - ※ 연구 성과는 원본(9p)과 보고용 축약본(6p)으로 구성
- 연구내용
 - 미국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제도의 역사 및 특징
 - 우리나라 주요 정당이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미국식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제도 전반의 내용 및 특징
 -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제16대·제17대 대통령 후보 경선제도 비교
 - 미국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 제도의 장·단점 분석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예비선거제도의 이해

- 연구기간 : 2012년 5월 17일 - 5월 29일(13일)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 제도를 종합 고찰하고 상호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예비선거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 발견
- 연구내용
 - 미국의 예비선거제도: 역사, 법적 근거, 절차, 일정, 유형, 운영상의 문제점, 주요 정당들의 개혁과정
 - 우리나라 제16대·제17대 대통령 후보 경선제도의 내용, 특징, 추진일정, 운영상의 문제점
 - 각국의 예비선거제도: 프랑스, 멕시코, 대만,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분석
 - 문답으로 풀어본 예비선거제도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개방형 국민경선 발의 법안 비교

□ 연구기간 : 2012년 6월 15일 - 7월 2일(18일)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제19대 국회까지 총4차례 발의된 개방형 국민경선 관련 법안의 내용분석과 상호비교를 통해 국민경선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 발견

○ 연구내용

- 제17대 이인영·최인기안, 제18대 나경원안, 제19대 김용태안을 비교한 결과, '개방형 국민경선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서 '공직후보 선거의 공영화'로,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식 공영선거 도입'으로 법안의 초점 이동
- 개방형 국민경선 발의법안은 다음의 2가지로 유형화 가능

구분	선거인	주관	선거인명부	역선택방지대책
준개방형	당원+비당원	정당	유권자등록제	별칙
완전개방형	일반 유권자	선관위	선거인명부제	동시선거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자본주의체제의 변천과정

- 연구기간 : 2012년 6월 20일 - 6월 30일(11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월스트리트 점령시위가 확산되는 등 자본주의체제의 장기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자본주의체제의 변천에 따른 국가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
- 연구내용
 -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역할은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적 모순이 확대되면서 표출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교정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진화해 왔음
 - * 자본의 국제 이동이 확대되면서 내재적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추세
 - 우리나라 또한 외환위기 발발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한 결과 심화된 양극화 등 시장실패 요인들을 교정하면서 진화할 필요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서민가계의 부동산발 가계부채 문제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일 - 7월 2일(2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급증하는 서민가계 가계부채 및 다중채무 문제 현황 파악
- 연구내용
 - 서민가계 다중채무 및 가계부채 급증 문제의 핵심 요인은 부동산이며,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3%에 달함
 - 가계부채증가율, 다중채무자수 현황, 주택담보대출 총액 등 파악
 - 저소득 서민의 경우, 특히 부채보유가구의 경우 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
 -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서민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0-2세 무상보육 지방재정부담 대책(여연이슈분석)

- 연구기간 : 2012년 7월 2일 - 7월 10일(9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0~2세 무상보육 실시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정책 제언
- 연구내용
 - 무상보육으로 소득 상위 30% 계층이 보육시설에 0~2세 아동을 맡길 것이라는 신규 수요 예측 실패
 - 지원을 받아온 소득하위 70%의 0~2세 아동 51만 명과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아이를 맡겨온 소득 상위 30%의 0~2세 아동 19만 명 총 70만 명만이 지원 대상이라고 계산 하면 2011년에 비하여 지원대상은 8만 명 증가, 부족한 돈은 8,000억, 지자체 부족분은 6,000~6,200억 원
 - 따라서 정부 부담률을 70~80%로 확대, 맞벌이에게는 보육료를, 홑벌이 부부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 영아전용가정어린이집 신설,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 차별 징수할 것을 제안함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0-5세 양육수당 도입에 따른 보육예산 추계

- 연구기간 : 2012년 7월 3일 - 7월 24일(22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0~5세아 전 계층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보육예산이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 검토하고 이에 따른 양육수당 도입의 타당성 분석
- 연구내용
 - 0~2세아 양육수당 도입으로 인한 보육예산 증가액: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아동 전원에게 지급한 양육수당 예산
- 보육시설에서 가정양육으로 이동하여 감소한 보육예산)
: 1조2,928억 - 1조1,643억 = 1,285억원 증가
 - 3~5세 누리과정에 양육수당 도입으로 보육예산 증가액:
: 1,557억 - 1,520억 = 37억원
 - 양육수당 도입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감소하여 보육정책의 체감도는 높아지지만 추가 보육 예산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국내외 경제전망 및 가계부채/부동산시장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5일 - 7월 30일(16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유럽발 경제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가계부채/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증대
 - 이에 따라 국내외 경제전망 및 정부의 대응정책을 진단
- 연구내용
 -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는 세계경제 심장부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보다 심각
 - 티핑 포인트, 즉 체제의 급변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시급
 - 특히, 대내적 불안정 요인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으로 잠재적 취약 요인 보완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對北식량차관 원리금 상환 관련 대책

- 연구기간 : 2012년 7월 20일 - 7월 26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연구방법 : 자 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당국은 북측에 대북 식량차관 첫번째 원리금 상환을 촉구하였으나,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정부는 2000~07년 차관형식(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으로 쌀 240만톤, 옥수수 20만톤 지원했으며, 식량차관 규모는 총 7억2,400만 달러, 이자 1억5,528만 달러 정도임- 이 중 2000년 대북 식량지원 차관 8,835만 달러에 대한 북한의 상환 의무가 2012년 6월 7일 첫 도래(상환액 583만 달러)- 그러나 북한의 경제사정과 남북관계의 미래 등을 감안할 때 북측에 상환을 직접적·적극적으로 촉구하기보다는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 큰 틀에서 '합의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합의서 7항에 의거하여 이 문제의 협의와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회담의 조속한 개최 촉구가 바람직함○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무상보육 보완 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7월 22일 - 8월 8일(18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2년 0~2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한 문제점 및 효과적 보육정책대안 마련
- 연구내용
 - 2012년 0~2세 무상보육 실시는 소득 상위 30% 계층이 보육시설에 0~2세 아동을 맡길 것이라는 신규 수요 예측에 실패했고 지방비 추가 부담을 3,423억 원 증가시킴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정책을 위해 맞벌이 부부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홀벌이 부부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0~2세 아동들을 주로 맡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황을 고려할 때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인 '0세아를 위한 전용어린이집' 지정·운영도 검토해볼 필요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 협동조합

- 연구기간 : 2012년 7월 22일 - 8월 8일(18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 방안 제시
- 연구내용
 -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 되었으나 한국 사회에는 아직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협동조합은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농·어민 등 생산자 보호, 소비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에 의한 상품 품질관리와 물가관리, 조합원에 이윤 재분배, 생산자 협동조합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 등 각종 경제문제 해결
 - 새누리당에서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교육·홍보하는 '협동조합설립 지원센터'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여, 협동조합 활성화의 아젠다를 선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경제민주화의 주요 아젠다의 하나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주택담보대출 관련 DTI 규제완화 검토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일 - 8월 20일(20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주택담보대출 관련 DTI 규제의 완화 필요성 여부를 검토
- 연구내용 (정책제안)
 - DTI는 건전성 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경기조정 수단으로 변질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경기부양 효과 또한 미미한 것으로 판단
 - 가계부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부동산거래 실종, 부동산 시장 경착륙 등 문제는 차기 정부에게도 난제로 부상 전망
 - 단기적인 개별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장기 해법이 필요
 - * 가계부채 문제 심화가 우려되는 정책은 사전배제 고려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외교안보국방 분야 포지션페이퍼: 사병월급 인상

- 연구기간 : 2012년 8월 2일 - 8월 20일(19일)
- 연구분야 : 국방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선 준비차원에서 당과 후보의 입장 정립을 위해 안보·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이슈들을 점검하고 여·야의 입장을 비교 분석○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 '2013~15년까지 사병월급 및 수당 2배 인상'- 당·정협의를 통해 공약 이행 중이며 지난 7월 2일 국방부는 사병 월급 26%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1236억 증액을 요청- 사병월급 인상은 이미 2004년 4.15총선 때 한나라당의 청년정책공약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음- 사병 처우개선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 대해 국가가 보여줘야할 최소한의 예의 → 합리적 보상 필요○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외교안보국방 분야 포지션페이퍼: 제주해군기지

- 연구기간 : 2012년 8월 2일 - 8월 20일(19일)
- 연구분야 : 국방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선 준비차원에서 당과 후보의 입장 정립을 위해 안보·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이슈들을 점검하고 여·야의 입장을 비교 분석○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3년 해군이 필요성을 제기하여 2002년 화순항, 2005년 위미항을 검토 하였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고 2007년 6월 강정마을 선정-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안보분야 중점 사업이었음 노무현 전 대통령: “무장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 <2007년 6월 22일 ‘제주평화포럼’ 참석차 제주 방문 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여부가 현재 핵심쟁점 사안- 관련한 여·야 및 관련 기관·단체들의 입장 정리○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외교안보국방 분야 포지션페이퍼: 전시작전통제권

- 연구기간 : 2012년 8월 2일 - 8월 20일(19일)
- 연구분야 : 국방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선 준비차원에서 당과 후보의 입장 정립을 위해 국방·안보 분야의 주요 정책이슈들을 점검하고 여·야의 입장을 비교 분석
- 연구내용
 -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주한미군,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 1950년 한국군의 '작전지휘권'(당시 용어)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후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았고, 2007년 2월에 전작권 전환(2012년 4월 17일)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합의
 - 2010년 6월 토론토 G20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
 - '이양을 더 연기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한미연합사 존속의 필요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한 후 평가
- 연구성과
 -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외교안보국방 분야 포지션페이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연구기간 : 2012년 8월 2일 - 8월 20일(19일)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선 준비차원에서 당과 후보의 입장 정립을 위해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정책이슈들을 점검하고 여·야의 입장을 비교 분석
- 연구내용
 -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주요 근거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같은해 8월 10일자 '러스크 서한' 등임
 -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도 많이 있음: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최고사령부(SCAPIN) 지령 제677호, 같은해 6월에 공포된 '맥아더 라인', 1952년 설정된 해상방위수역(클라크 라인) 등
 - 여·야의 관련 발언과 입장 정리 비교
 -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 사례 제시
- 연구성과
 -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대북·통일분야 현안 정리(포지션페이퍼)

- 연구기간 : 2012년 8월 3일 - 8월 27일(25일)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선을 앞두고 대북·통일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정리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효과적인 대책 및 대응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역대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의 비교 및 정리
 - 남북관계의 정치·군사·경제적 현안에 대한 입장 정리 및 야권의 예상되는 공세에 대한 대응책
 - 북한 김정은체제의 권력구조 전망
 - 북한의 경제, 사회, 군사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정리
 - 남북관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리
- 연구성과
 - 대북정책 입장 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거사재정국제경제 분야 현안정리(포지션페이퍼)

- 연구기간 : 2012년 8월 4일 - 8월 18일(15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세제개편, 한미 FTA와 ISD 등 거시·재정·국제 경제 부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
- 연구내용 (정책제안)
 - 보금자리주택의 초저가 분양은 수정이 시급한 과제
 -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 물가 연동 전월세 상한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적합
 -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할 필요, 보유세 인상은 자제
 - LTV 규제는 완화함으로서 경기변동의 충격을 흡수
 - 무분별한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의 책임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헌법개정

- 연구기간 : 2012년 8월 5일 - 8월 27일(23일)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행정 분야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헌법개정에 관한 전반적 내용과 선택대안을 종합적·압축적으로 정리
- 연구내용
 - 개헌추진연혁, 개헌론 제기 배경, 개헌론의 주요 내용, 개헌론에 대한 주요 정당·정파의 입장, 당과 후보의 선택대안을 종합 정리
 - 정치실패가 헌정제도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둔 개헌론이 17대 국회 이래 계속 제기되고, 대선 국면에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 경선출마자들이 일제히 분권형 개헌을 주창
 - 선택대안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개헌론 주도, 조건부로 개헌논의 수용, 민생문제 해결을 이유로 개헌논의에 유보적 입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제기배경과 방법, 효과 및 문제점 등을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분석
- 연구성과
 - 입장 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책임총리제

- 연구기간 : 2012년 8월 5일 - 8월 27일(23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행정 분야 주요 쟁점 중 하나로서 책임총리제에 관한 전반적 내용과 대책방안을 종합적·압축적으로 정리, 당과 후보의 입장 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 연구내용
 - 책임총리제의 개념, 논의 및 추진연혁, 정치적·법적·제도적 의미, 주요 정당·정파의 입장, 대책방안을 종합 정리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유명무실한 역할에 그쳤던 총리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권력의 분산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책임총리제가 강력하게 제기
 - 범야권이 이질적인 정치세력간의 연합과 권력분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여권은 상대적으로 역할분담을 통한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집중해야 함을 지적하고 책임총리 도입시 대통령과 총리간의 다양한 업무분담 모형 제시
- 연구성과
 -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선거제도 개편

- 연구기간 : 2012년 8월 5일 - 8월 27일(23일)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행정 분야 주요 쟁점 중 하나로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전반적 내용과 주요 쟁점별 대책방안을 종합적·압축적으로 정리, 당과 후보의 입장 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 연구내용
 - 선거제도 개편의 논의방향, 논의연혁, 주요 정당 및 정파의 과거 및 현재의 입장, 주요 쟁점별 대책방안 등을 종합 정리
 - 선거제도 개편논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거나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왔고,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있었음
 - 대책방안으로서 석패율과 같이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제기되는 선거제도 개편논의에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는 방안이 바람직함을 지적
- 연구성과
 -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 강화

- 연구기간 : 2012년 8월 5일 - 8월 27일(2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행정분야 주요 쟁점 중 하나로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관한 전반적 내용과 대책방안을 종합적·압축적으로 정리, 당과 후보의 입장 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 연구내용
 - 선거구 획정절차, 현행 선거구획정위의 문제점,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내용, 해외 사례, 향후 대책방향, 쟁점별 대책 등을 종합 정리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제도상의 미비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미흡으로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졸속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대책방안으로서 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권한 강화를 위하여 획정위원회 소관의 이전, 위원 구성의 다변화, 준의결권 부여, 획정기준의 법정화 등을 제시
- 연구성과
 -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정부조직개편

- 연구기간 : 2012년 8월 5일 - 8월 27일(23일)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행정 분야 주요 쟁점 중 하나로서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전반적 내용과 대책방안을 종합적·압축적으로 정리, 당과 후보의 입장 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 연구내용
 - 이명박 정부 조직 개편의 내용과 문제점, 정부조직 개편 관련 논의 현황, 주요 정당과 정파의 입장, 대책방향 및 주요 쟁점별 대책 등을 종합 정리
 - 대부처주의의 원칙 아래 관련 부처 통폐합에 주력한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효율성과 무관, 거대부처 등장, 흡수된 일부 부처 정책분야의 소외현상 등의 비판이 제기
 - 대책으로서 대부처주의 폐해 시정과 전문부처주의에 입각한 정부조직 개편과 거대부처의 분리, 일부 부처의 부활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
- 연구성과
 -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지방행정체제 개편

□ 연구기간 : 2012년 8월 5일 - 8월 27일(23일)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행정 분야 주요 쟁점 중 하나로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전반적 내용과 대책방향에 대해 종합적·압축적으로 정리, 당과 후보의 입장 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 연구내용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의 및 추진경과, 역대 행정구역 통합현황,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의 내용 및 주요 추진 사항·쟁점, 주요 정당 및 정파의 입장, 대책방안을 종합 정리
- '12.6.26.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가 시·군·구 통합방안,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재편, 대도시 특례에 관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발표
- 대책방안으로서 최근 개편 동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바 효과적인 개편을 위해서 기존 정책방향의 일부 재검토 및 개편 모멘텀 형성 필요성을 제기

○ 연구성과

-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공직인사

- 연구기간 : 2012년 8월 5일 - 8월 27일(23일)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행정 분야 주요 쟁점 중 하나로서 공직인사에 관한 전반적 내용과 정책대안을 종합적·압축적으로 정리, 당과 후보의 입장 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 연구내용
 - 공직인사 제도의 변천과정, 역대 정부별 공직인사의 특징, 이명박 정부 공직인사 제도 및 문제점, 인사원칙·정무직 인사·공공기관 인사 등 분야별 정책대안 종합 정리
 - 이명박 정부의 인사실패가 정권실패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획기적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
 - 대책으로서 대국민 약속의 차원에서 신정부의 인사원칙을 간결하게 정리, 제시하고 탕평인사·시스템인사·책임인사와 도덕성 우선원칙을 구체화하는 인사제도 마련 방안을 제시
- 연구성과
 -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상설특검

- 연구기간 : 2012년 8월 5일 - 8월 27일(23일)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행정 분야 주요 쟁점 중 하나로서 상설특검과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관한 전반적 내용과 정책대안을 종합적·압축적으로 정리, 당과 후보의 입장 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 연구내용
 - 상설특검과 공수처의 개념·논거·논의연혁, 찬성론과 반대론의 요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 해외 사례, 현행 한시적 특검의 실시경과 및 문제점, 주요 정당 및 정파의 입장, 대책방안, 특별감찰관제 등을 종합 정리
 -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 검찰과 별개 기관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서 공수처와 상설특검이 제기
 - 대책방향으로서 상설특검제의 제도적 내용의 구체화를 통해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점을 부각하는 등 두 제도의 차별성을 약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
- 연구성과
 -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교육 정책 포지션페이퍼

- 연구기간 : 2012년 8월 6일 - 8월 26일(21일)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존 교육 정책 논쟁 이슈들의 주요 내용과 주요 인사 및 정당의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대선 후보자의 교육 정책 관련 입장 정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연구내용

- 교원평가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원평가방식으로 전환
- 대입제도 단순화, 스마트교육 강화,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 장학금 확대, 등록금 대출이자 제로화, 공용 대학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완화
-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현재의 제도적 범위 내에서 사학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명한 회계관리 유도
-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무상급식 정부보조금 지원을 차등화
- 잘못된 학생인권조례 시행방법을 정정하고, 학생들이 직접 학부모와 교사들과 논의하고 합의하여 스스로 지켜나갈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

○ 연구성과

- 교육 정책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복지포폴리즘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2일 - 8월 22일(11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복지포폴리즘의 문제점 검토 및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 연구내용
 - 무상복지 시리즈는 현재 심각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저부담-고복지의 복지 포폴리즘 국가들이 거쳤던 경로와 정확하게 동일, 특히 증세나 보험료 인상 없이 고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 주장
 - 복지 선진국가들의 국민부담률과 공공복지지출 사이의 상관관계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한국 사회 특유의 NOOMP(Not Out Of My Pocket) 현상을 강화시키는 것
 - 우선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애별 맞춤형 복지가 시급하고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이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일자리 창출 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3일 - 10월 11일(1개월 29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무형자본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한국의 성장률/취업률 제고는 무형자본(과학기술 + 인적자본)의 고부가가치화에 달려있음
 -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 제시
 - 기존주력사업의 고부가가치화, 핵심원천기술의 확보와 IT와의 융복합을 통하여 자동차·조선·철강·반도체 등의 경쟁력 제고
 - 중소/중견기업의 고부가가치화, 중소/중견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맞춤형 R&D/금융 등 지원
 - 인적자본의 고부가가치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인적자본의 고부가가치화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문화 정책 포지션페이퍼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4일 - 8월 28일(15일)
- 연구분야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존 문화 정책 논쟁 이슈들의 주요 내용과 주요 인사 및 정당의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대선 후보자의 문화 정책 관련 입장 정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연구내용
 - 문화/방송계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형평성에 맞는 지원과 평가를 통한 합리적 예산 분배
 -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송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경쟁력까지 고려하여야 하며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교한 후속조치 동반 필요
 - 방송통신융합과 스마트 라이프 환경에 맞춰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지 않는 체계는 유지하되, 전담부처 산하에 정치적 이슈만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
 - 방송시장 개방으로 국민들의 방송선택 폭을 넓힘
- 연구성과
 - 문화 정책 공약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여성 정책 포지션페이퍼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4일 - 8월 28일(15일)
- 연구분야 : 여성가족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존 여성 정책 논쟁 이슈들의 주요 내용과 주요 인사 및 정당의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대선 후보자의 여성 정책 관련 입장 정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연구내용
 -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일자리 지원
 - 가족형태별 맞춤형 정책패키지 마련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의 보편화
 -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의 선진화
 - 편견과 차별없는 함께 하는 다문화가족
 - 여성·아동 성폭력피해지원 전문기관 확충
- 연구성과
 - 여성정책 공약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청소년 정책 포지션페이퍼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4일 - 8월 28일(15일)
- 연구분야 : 여성가족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존 청소년 정책 논쟁 이슈들의 주요 내용과 주요 인사 및 정당의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대선 후보자의 청소년 정책 관련 입장 정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연구내용

- 각종 법률 등에서 상이한 청소년 연령기준을 재조정하여 연계성을 확보하고, 연령통합-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생애전기를 포괄하는 정책 기조 수립
-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운영개선과 조정확충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개발기금으로 성격 재정립
- 현 주무부처 내 청소년정책 기능강화

○ 연구성과

- 청소년 정책 관련 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TV 토론 분석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4일 - 9월 5일(23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 대선 경선후보 TV토론 분석을 통해 후보별 정책의 장단점과 토론 능력을 비교 검토
- 연구내용
 - TV토론 시청 후 종합평가 실시
 - 각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주요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 평가
 - 각 후보 발언의 논리성, 호소력, 대중성 등에 대해 평가
 - 각 후보의 말투와 행동, 표정에 대해 평가
 - TV 토론회(경선) 분석 보고서 총 5회 제출
- 연구성과
 - 정책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전월세상한제: 법제화 대안 검토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5일 - 8월 27일(13일)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전월세 상승으로 서민층의 주거불안 심화, 소비 또한 위축
 - * 전세가는 40개월 연속 올라 1986년 이후 최장 기간 상승
 - 서민 주거안정 등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대책 수립할 필요
- 연구내용
 -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급등지역 대상 한시(최장 5년) 도입
 - 전월세 상승률 기준, 단계적 발동에 의해 급등현상 억제
 - [1단계] 지역별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2배 이상일 경우 신고 지역으로 지정, 주택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
 - [2단계] 조사 결과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이면 관리지역으로 지정, 상기 상한 초과 인상을 금지
- 연구성과
 - 총선 공약으로 활용 (2012년 9월초 법안 발의)

주제 : 오바마 뉴미디어 활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5일- 9월 10일(23일)
- 연구분야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 대선에서 오바마의 뉴미디어 활용방안을 연구, 대선에 활용
- 연구내용
 - 홈페이지에 'Are you in?', 'Share your story' 등의 코너를 개설해 네티즌과의 소통채널로 활용
 - 빅데이터의 적극 활용: 홈페이지 가입 회원들이 SNS에 남긴 개인정보 (기부내역, 자원봉사 경험, 프로필 등)를 DB화
 - 데이터를 지역, 세대, 종교, 교육, 개인의 특징·취향 별로 분류하여 이메일 전송, 기부 독려, 오프라인 캠페인 등 선별적으로 적재적소에 활용
 -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홍보 기법 활용
- 연구성과
 - 홍보 전략 수립에 활용

주제 : 비정규직 공약 비교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9일- 8월 27일(9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비정규직 현황 파악 및 여·야 비정규직 공약 비교를 통한 정책대안 제시
- 연구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40만~600만 명(임금근로자의 33~35%) 수준으로 인구증가, 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임금근로자 증가 등 노동시장의 규모가 증가한 것에 기인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의 불법 고용시 10배내 징벌적 손해배상 및 시정 명령 등은 확대해석으로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민주통합당의 파견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은 풍선효과로 인해 보다 열악한 비정규직만 양산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입법, 비정규직의 재계약,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비정규직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9일- 8월 27일(9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비정규직 4대 보험 가입 현황 파악 및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정책 제안
- 연구내용
 -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이 중요
 - 고용노동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2012. 7. 1 시행)을 통해 약 1,300,000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의 1.3배 이하의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50% 감면,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는 전액 감면해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 불평등 개선, 사업주의 고용비용 감소와 고용유발, 사회보험료 수입증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현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평가

- 연구기간 : 2012년 8월 27일- 9월 21일(25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2년 12월 대선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정책을 검토
- 연구내용
 - 2012년까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성장 동력사업의 성과는 적지 않으나 주로 대기업 지원 위주여서 중소/중견 기업의 육성과 연결되지 못하고, 신성장 동력과 연관된 전문인력/비전문인력 육성 계획이 미흡하며, 정부에서 선정한 신성장 동력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는 신성장 동력 사업과 지원 범위를 축소하여야 할 사업을 구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제공

- 연구기간 : 2012년 8월 28일- 9월 5일(8일)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제공을 통한 저출산/결혼비용 절감 대책 마련
- 연구내용
 - 젊은 남녀가 결혼을 미루는 중요한 사유이자 노인빈곤의 중요 요인 중 하나는 높은 신혼주택마련 비용이므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택마련비용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모 의존을 낮추어 자녀들의 자립심을 강화할 필요
 - 매년 신혼부부 10만 가구에 5년간 5,000만원의 전세 자금을 2%의 저리로 융자(한 달 이자는 8만 원 정도)해주는 전세임대주택 지원금 제도 마련 제시
 - 지하철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도시 근교에 신혼부부 전용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고 건설사가 건설을 추진할 경우, 2%의 금리로 국토해양부에서 융자하는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원전 논란에 대한 대응

- 연구기간 : 2012년 9월 1일- 9월 10일(10일)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야당의 원전 정책과 당의 원전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원전 안전성 제고 방안 제시
- 연구내용
 - 원전 확대를 전면 재검토 주장과 원전의 전면 폐쇄 주장의 타당성 검토
 - 전력 공급의 31%를 차지하는 원전 대체방안과 전기요금값 급상승에 대한 대책의 현실성 검토
 - 우선적으로는 원전 사고에 대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완벽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점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전력 공급원으로 대체해 나아가도록 함
 - 모든 가능한 사고 발생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원전 안전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원전 시스템의 수시 점검, 매뉴얼 숙지, 작업 시 교차 확인 제도 도입, 민관합동감시체제 도입, 보고 체계 강화 등 원전 안전성 제고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부산지역 민심동향 및 정책 니즈 파악

- 연구기간 : 2012년 9월 11일 - 9월 24일(14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역 민심동향 및 정책 수요 파악
- 연구내용
 - 부산 지역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개인별 In-depth Interview(심층 면접 조사) 실시
 - 국가적 사안과 지역적 사안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향후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정책 과제들을 파악
 - 과거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 민심흐름 분석
- 연구성과
 -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어젠다 선정
 - 민심 파악을 통한 정책 니즈의 파악을 통해 정책개발에 활용

주제 : 60-70년대 주요경제지표 검토

- 연구기간 : 2012년 9월 3일 - 10월 8일(1개월 5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0~'7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제반 정책의 공과가 현 시대에 맞게 승화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기간 동안의 주요경제 지표들의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함
- 연구내용
 - 50년대 경제, 60~70년대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및 무역·산업 구조를 대표하는 경제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더해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적 지표들을 함께 검토해 봄
 - 전후 세계 최빈국(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8달러)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간 연평균 18%의 경제성장, 38%의 수출증가율을 가져온 당해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이 배경
 - 그러한 정책의 입안·추진·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상존
 - 당시 경제발전을 위한 제반 정책의 공과를 현 시대에 맞게 승화할 필요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한미 특허권 분쟁: ISD 제기 가능성 검토

- 연구기간 : 2012년 9월 4일 - 9월 7일(4일)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삼성전자/애플 (코오롱인더스트리/듀폰 등) 특허권분쟁에 대한 판결이 편파적이라는 국내외 여론이 비등
 -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자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확산 추세
 - ISD는 국내 공적 사법절차가 편파적일 경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연구내용
 -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권 소송에 대한 ISD 제기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ISD 제기 필요조건에는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
 - * 적용대상, 국가의 조치, 소급적용 여부, 제기요건 등을 검토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의료사각지대 해소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9월 7일- 9월 13일(7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자격, 보장성, 지역격차 측면에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96.3%와 의료급여 3.7%로 전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사각지대가 존재
 - 자격측면 해소방안: 의료급여의 대상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3.7%에서 비수급 빈곤층 2.3% 가운데 일부를 포함한 5%로 확대
 - 보장성 측면 해소방안: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항목을 보장성의 영역에 포함,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국공립의료원기능 확대
 - 지역격차 측면 해소방안: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 국립 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의료급여 대상자,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 기관으로 역할 확대,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확대 운영에 필요한 보건 의료 예산 확충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중소기업 육성 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9월 8일- 9월 15일(8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중소기업육성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인력개발이 핵심적이지만, 민주통합당이나 우리 당의 공약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자금지원, 신용회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07~2010년 사이 대기업의 일자리는 8만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12만8천개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보다 효과적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대출금리 차별논란 검토: 기업규모 및 학력기준

- 연구기간 : 2012년 9월 8일 - 9월 16일(9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보수적 대출 운용으로 중소기업 대출비중 하락, 대기업-중소기업 간 대출금리 격차도 확대
 - 신한은행은 개인 신용평가모형에 학력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여 학력 별로 신용평점을 차등화함으로서 학력 요인으로 인하여 대출이 거절 되거나 더 많은 이자부담을 초래
 - 은행의 대출에 있어서 기업규모와 학력 기준 차별 여부 검토
- 연구내용
 - 2007년부터 2011년 중반까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대기업 대출 비중을 상회, 2009년 전반기에는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대기업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역전 현상까지 발생
 - 신한은행은 감사원 지적 후 학력차별 부분을 시정하였음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최저임금

- 연구기간 : 2012년 9월 10일 - 9월 17일(8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과 현실적 어려움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점 모색
- 연구내용
 -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현재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공인/한계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고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여 영세상공인과 한계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친서민/소득재분배 정책으로 미혼단신근로자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대학 재학생들에게는 매우 바람직함
 -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과 걸림돌 사이에서 영세상공인과 한계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방식으로 시간당 500원씩 지급하고 투자액과 영업이익이 높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추가된 것과 동일한 지급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퇴직인력 활용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9월 13일 - 9월 19일(7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미흡한 은퇴 준비에 대응하기 위한 퇴직인력 활용 방안 제시
- 연구내용
 -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2012-2016)은 구인·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취업 적응훈련 실시, 고용정보 센터 운영 등이 주축
 - 퇴직인력이 기존 직장에서 쌓아 왔던 숙련 경험/전문지식의 연장선 상에서 퇴직인력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
 - 능력이 있는 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고령자 세대 간 공생 발전 도모,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고령친화적으로 재편, 고령자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정책적 방향 제시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학력타파 취업시스템

- 연구기간 : 2012년 9월 16일- 9월 21일(6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높은 대학진학률과 과잉학력,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업 제도의 변화 모색
- 연구내용
 - '학력중심의 취업제도'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취업제도'로 변화하면 일류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대학진학률이 축소되며 대학 간 경쟁 강화, 사교육비 절감, 지방 대학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 채용 방식의 변화를 통한 학력과 스펙 타파, 고졸과 전문기능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학교와 기업의 교육프로그램 협력, 대학서열 타파를 위해 졸업 논문(학사·석사·박사)을 recruiting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는 정책 대안을 제시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국민행복 문화정책

- 연구기간 : 2012년 9월 24일 - 10월 25일(1개월 2일)
- 연구분야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민들이 희망하는 문화 관련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대선 공약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연구내용
 - 문화환경 변화 분석
 - 문화적 위기 극복을 통한 문화민주주의 강화 및 문화정책의 범위와 영역 확대
 - 전통문화 가치 발굴 및 재창조
 - 문화 바우처 정책 및 문화예술인 복지 확대
 - 문화복지사 도입 및 문화산업의 창업활성화/R&D 확충
 - 저작권 정책패러다임 전환 및 저작권 위탁관리 제도의 투명/활성화
 - 고부가가치 한류 지향
 - 관광분야 인프라 확대 및 규제 해소
 -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외교 강화
- 연구성과
 - 문화정책 공약 개발에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대통령 후보 이미지 비교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일 - 10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통령 후보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 후보들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연구내용
 - 기존 여론조사 중 대선 후보 이미지 조사에 중점을 둔 3개의 여론조사를 선별(2012. 9. 2 EAI 조사: 국정당면문제 이해도, 위기관리능력 등 10개 항목에 대한 대선후보 이미지 지각도 조사, 2012. 8. 30 모노리서치: 대선 후보 강약점 조사, 2012. 7. 25-27 내일신문·디오피니언: 대선후보 긍정적·부정적 이미지 조사)
 - 주요 대선후보의 이미지, 후보간 이미지 대결구도, 각 후보들의 이미지 전략, 강·약점 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도출
- 연구성과
 - 정책 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민족화합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2일 - 10월 19일(18일)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한 新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의 남북관계 경색을 풀고 민족화합을 위한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 모색 필요○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각한 분단폐해, '불안의 시대' 진입, 긴장고조·평화지향의 이중적 동북아 정세, 통일준비의 필요성 점증 등은 '북한문제'를 '한반도·한민족 문제'로 인식하는 발상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새로운 대북정책의 필요성 제기- 이를 위해 분단고통의 완전한 치유를 통한 인권공동체 실현, 역사·문화에 대한 자존의식을 함양하고 적대적 사회문화의 청산을 위한 통일소통프로그램의 실행이 필요- 아울러 한반도는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돼 있음을 감안하여 한반도 자연안보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북한동포를 '이등국민'이 되지 않게 하는 한민족의 미래세대를 겨냥한 통일복지프로젝트의 추진 필요○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유수지 내 임대주택 건축 검토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3일 - 10월 7일(5일)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유수지를 활용, 저비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하는 방안 검토
- 연구내용
 - 유수지 개발주체가 지역자치단체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앙정부정책으로는 부적합하며,
 - 개발 목적도 건축물 건축을 동반하지 않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녹지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충족 요건이 많아서 상시 거주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매우 어려움
 - 법 개정 시 유수지 내 임대주택 건축은 용이해지겠지만 유수지 소유 및 개발권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중앙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될 것으로 판단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중소기업개발 5개년 계획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5일- 10월 23일(9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2013년부터 중소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여 한국 경제 발전을 도모
- 연구내용
 - 중소기업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한국 중소기업을 새로운 경제발전의 견인차로 성장시킴
 - : 중소기업부 신설,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추진 등
 - 경제민주화 해결, 일자리 창출, 복지 등의 효과
 - 중소기업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
 - : 현재 15%인 중소기업 수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 중소기업 지원을 현재의 3배로 확대, 고위기술품목 수출비중을 현재 23%에서 40%로 확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33%에서 45%로 확대, 중소기업의 임금을 현재의 1.5배로 인상
- 연구성과
 - 정책수립 참고자료 및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대통령 후보 정책이미지 분석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5일 - 10월 16일(2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선여론조사를 토대로 주요 대통령후보들의 정책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대통령선거 캠페인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연구내용
 - 경제, 정치, 서민복지, 종합 등 주요 분야별로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이미지를 측정할 여론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 차기 정부 국정과제와 민생과제 등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여론의 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 주요 대선 후보별 정책이미지의 구체적 내용, 형성배경, 후보간 정책 이미지 대결구도 및 후보별 이미지 전략 분석을 통해 우리 당의 대응 방안 등을 모색
- 연구성과
 -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대통령선거 공약캠페인 효과 분석: 가족행복 5대 약속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6일 - 10월 20일(5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가족행복 5대 약속 공약홍보 캠페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홍보 방향 보완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연구내용
 - 가족행복 5대 약속(중증질환, 비정규직, 전세자금, 스펙타과, 양육수당)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개한 홍보 캠페인의 효과 측정을 위한 인지도·호감도 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 공약별로 지역·인구사회학적·정치심리학적 다양한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 공약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지도·호감도 2개의 차원으로 유형화
 - 저인지·고호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인지도 제고 노력, 고인지·저호감 공약 보완, 저인지·저호감 공약의 실효성 보완 등 대책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역사인식 논란과 대책: 유신체제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6일 - 10월 22일(7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유신체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
- 연구내용
 - 1970년대는 세계 경제 및 안보 체제에 근본적 구조 변화
 - 한미동맹 약화로 세력균형 붕괴 ⇒ 북한, 대남도발 급증
 - 방위산업 육성 및 중화학공업화로 부국강병의 기반 구축
 -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 역대최고 대통령
 -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대체적으로 사실과 부합
 - 2차 인혁당 사건 관련 국정원 과거사위 발표내용 부정확
 - 국민통합은 역사인식 공유에서 출발, 균형잡힌 시각 필요
- 연구성과
 -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차기 정부 민생과제 개발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8일 - 12월 20일 (2개월 3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기획재정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차기 정부에서 시행해야 할 민생 관련 정책 과제들을 개발
- 연구내용
 - 중소기업 집중지원시스템 구축, 기업성장 방해요인 제거, 중소기업 인력 확보유인체계 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구축
 -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선,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체제 구축을 통한 서민 금융시스템 개혁
 - 저작권 보호, 공정거래환경 확립을 통한 문화산업 중흥
 - 금융소비자 친화적인 감독체제로 전환, 거시감독기능 강화를 통한 금융 감독체계 개편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공정한 사법집행 등을 통한 대기업집단정책
 - 주택가격 급락 대비 안정장치 구축, 다중채무의 선제적 정리를 통한 가계부채 연착륙 등
- 연구성과
 - 정책 개발 및 입법 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20일 - 12월 28일 (2개월 9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선 공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
- 연구내용
 - IT, 자동차, 건설, 조선 등의 전통 주력산업과 의료, 문화콘텐츠 등의 서비스산업에 의한 현재 일자리 창출형 창조경제
 - 전문기업 및 인력 육성, 벤처청년창업지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ICT 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통합망 구축 등의 수요 확대를 통한 ICT 산업 육성
 - 바이오산업, 나노융합산업, 신에너지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형 먹거리 산업의 현재와 발전 가능성
- 연구성과
 - 정책 자료로 활용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효율적 정당조직 구성 및 운영 방향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30일 - 12월 28일(29일)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효율적 정당 조직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대선과 같은 선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안
- 연구내용
 - 선거 패러다임과 선거수단 우선순위의 변화
 - 캠페인 평가와 전망을 통한 조직대안 모색의 필요성
 - 새로운 조직을 통한 지역 기반 외연 확대 방안 모색
 - 대외협력/조직본부 구성 및 역할 제시
- 연구성과
 - 정당조직 선진화를 통한 정치 개혁 방안 구축에 활용

PART 3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

민주정책연구원
(민주통합당, 現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0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박사급: 5명	자체고용: 17명	
석사급: 6명		
기 타: 6명	외부파견: 2명(국회직)	
합 계: 17명	합 계: 19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3,846,944,228	15,814,728	430,989,808	4,293,748,764	3,572,136,174	721,612,590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91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12'.01.05~02.10	정무	선거연합 효과	자체	20p	별첨1
12'.01.25~01.31	정치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 분석	자체	7p	별첨2
12'01.31	보건복지	청춘연금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외부전문가 (한창근)	95P	별첨3
12'.02.06~02.10	정치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 경제연설 분석	자체	5p	별첨4
12'.02.01~03.31	정치	영국 노동당의 정책 혁신 연구	자체	37p	별첨5
12'.03.07	국방	진보진영의 대외정책구상	외부전문가 (코리이연구원)	50p	별첨6
12'.03.12~03.26	환경노동	이명박식 일자리와 비정규직	자체	3p	별첨7
12'.03.19~04.30	정치행정	김부겸의 아름다운 도전	자체	5p	별첨8
12'03.26	종합	민주통합당의 기존 이념과 정책: 시사점과 정책방향	공동	295p	별첨9
12'.03.31	보건복지	진보적 생활정치의 실천을 위한 좋은 정책사례	미래발전 연구원	118p	별첨10
12'.04.03	정치사회	제19대총선 비례대표후보자TV토론자료: 정치·사회분야 정책Q&A	공동	41p	별첨11
12'.04.09	경제복지	제19대총선 비례대표후보자TV토론자료: 경제·복지분야 정책Q&A	공동	45p	별첨12
12'.04.15~05.03	정무	4.11 총선 평가와 과제	자체	35p	별첨13
2012.05.01.~06.30	상임위전 체	「희망한국」을 위한 정책 비전- 네트워크 국가 · 네트워크 경제로의 길	외부전문가	123P	별첨14
12'.05.03	환경노동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외부전문가 (한국노동사 회연구소)	46p	별첨15
12'05.09~07.31	정무,기 재,지경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	외부전문가	293P	별첨16
12'5.09~07.31	국토해양 기재	사용자 중심의 토지와 주택을 위한 정책과제	외부전문가	260P	별첨17
12'5.09~07.31	국토해양 기재	공공건설사업 제도개선 연구	외부전문가	276P	별첨18

12'.05.20	기획재정	한국사회의 경제체제 대안 구상	외부전문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50p	별첨19
12'.05.25~ 06.10	정무	민주당 정책역량강화방안	자체	20p	별첨20
12'.06.01~ 06.25	기획재정	민주통합당의 성장담론 평가와 과제	자체	10p	별첨21
12'.06.01~ 07.31	정무,기 재,지경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 시사점	외부전문가	105P	별첨22
12'.06.04~ 09.15	지경, 환노	민주통합당 에너지기후 버전2030연구 -원칙, 프레임과 정책방향 중심으로 -	외부전문가	178P	별첨23
12'.06.04~ 09.30	여가위	차기정부 성평등정책 추진기구에 관한 연구	외부전문가	170P	별첨24
12'.06.04~ 10.31	행안위	2012대선시기, 시민참여의 사례 및 플랫폼 개발 연구	외부전문가	183P	별첨25
12'.06.04~ 09.30	행안위 여가위 환노위	민주당 청년정책 혁신 제안 및 청년시민의회 '아테네'	외부전문가	93P	별첨26
12'.06.04~ 09.30	외통위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의제 2013-차기정부 대북평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외부전문가	210, p	별첨27
12'.06.04~ 09.30	행안위 교과위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외부전문가	135P	별첨28
12'.06.07~ 08.31	기재위 환노위 복지위 정무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 민주진보진영의 사회경제 정책노선	외부전문가	63P	별첨29
12'.06.23	정치	균형국가와 민주·분권국가 실천과제	자체	21p	별첨30
12'.06.27~ 10.31	국토위	4대강 사업 부실공사 증명을 위한 수심측량	외부전문가	273P	별첨31
12'.06.25~ 07.12	정치	2012년 프랑스 대선 평가	자체	8p	별첨32
12'.06.30	정치	사회비전과 정책과제: 사람투자국가	자체	55p	별첨33

12'.07.01~ 07.10	외교 통상	한일정보보호협정 검토	자체	6p	별첨34
12'.07.01~ 09.30	정치행정/ 경제/복지 /노동/ 통일외교 안보	국민공감 힐링공약	자체	45p	별첨35
12'.07.01~ 09.30	지식경제 환경노동	'국민공감 힐링정책' -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자체	4p	별첨36
12'.07.10	종합	2013년 체제는 균형국가(Balance-State)다	공동	107p	별첨37
12'.07.11~ 07.25	환경노동	최저임금제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체	6p	별첨38
12'.07.12~ 07.30	정무	MB정부 실정과 민주통합당 공약 비교	자체	5P	별첨39
12'.07.12~ 07.30	외교통상	개성공단 현황 및 공약	자체	4P	별첨40
12'.07.16	정치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정책카피	자체	4p	별첨41
12'.07.18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체	5p	별첨42
12'.07.18~ 08.01	국토해양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황공포	자체	4p	별첨43
12'.07.30~ 08.24	정치	'안철수 현상' 분석	자체	11p	별첨44
12'.07.31~ 08.02	정무	민주통합당 직장조직 구축방안	자체	8p	별첨45
12'.08.01~ 08.17	금융	세계금융위기의 정치적 함의	자체	4p	별첨46
12'.08.03~ 08.23	재정경제	경제민주화 헌법조항 검토	자체	4P	별첨47
12'.08.06	복지	한국정치에 있어서 복지논쟁: 쟁점과 전망	자체	8p	별첨48
12'.08.10~ 09.04	기획재정/ 정무	금융의 공공성 확보방안	자체	5p	별첨49
12'.08.10~ 09.30	통일외교/ 국방	국민공감 힐링공약: 통일외교안보 분야	자체	46p	별첨50

12'.08.20~ 08.27	정치행정	국민공감 힐링정책: 정치행정 분야	자체	7p	별첨51
12'.08.24~ 08.28	정무	권력구조 개편 검토	자체	7p	별첨52
12'.08.25~ 09.02	정무	당현대화 방안	자체	11p	별첨53
12'.09.10~ 09.18	정치	미국 민주당 대선 전략 연구	자체	5p	별첨54
12'.09.25~ 10.05	통일외교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자체	5p	별첨55
12'.10.01~ 11.29	정무	전략적 투표와 단일화 전략	자체	19p	별첨56
12'.10.04~ 10.30	행정	정부조직개편 연구	자체	9p	별첨57
12'.10.15~ 10.19	정치	5대문 매니페스토: 새로운 정치	자체	15p	별첨58
12'.10.15~ 11.15	정치/경제 /복지/노동/ 통일외교 교안보	매니페스토자료집-5大門	자체	66p	별첨59
12'.10.15~ 11.15	지식경제	5大門매니페스토 - 일자리 혁명	자체	16p	별첨60
12'.10.15~ 11.15	기획재정	경제민주화(『5대문 매니페스토』)	자체	4p	별첨61
12'.10.15~ 11.15	통일외교	매니페스토 자료집 5대문: 통일외교분야	자체	10p	별첨62
12'.10.24~ 10.29	정치	문재인과 안철수의 정치개혁안 비교	자체	9p	별첨63
12'.10.29	정치	제18대 대선 TV토론 전략 및 기초	공동	7p	별첨64
12'.11.01	종합	제18대 대선 문재인후보 정책Q&A 기초자료집	공동	367p	별첨65
12'.11.03	정무	제18대 대선 후보분석 자료집: 문재인 후보	공동	20p	별첨66
12'.11.03	정무	제18대 대선 후보분석 자료집: 박근혜 후보	공동	43p	별첨67
12'.11.14	종합	제18대 대선 문재인후보 TV토론 학습자료	공동	212p	별첨68
12'.11.12~ 11.16	행정	정부위원회 정상화 방안	자체	5p	별첨69
12'.11.15~ 12.05	경제/복지 /노동/교육	매니페스토자료집 - 서민가계살리기10대약속	자체	40p	별첨70

12'.11.15~ 12.05	지식경제	서민가계 살리기 10대 약속 - 청년에게 꿈의 일자리를	자체	6p	별첨71
12'.11.15~ 12.05	환경노동	서민가계 살리기 10대 약속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해소	자체	5p	별첨72
12'.11.15~ 12.05	금융	빛걱정없는 편안한 사회(『서민가계 살리기 10대약속』)	자체	4p	별첨73
12'.11.15~ 12.05	기획재정	살맛나는 중소기업(『서민가계 살리기 10대약속』)	자체	3p	별첨74
12'.11.15~ 12.05	국토해양	전국민 주거복지 실현(『서민가계 살리기 10대약속』)	자체	5p	별첨75
12'.11.17	정무	제18대 대선 후보분석 자료집: 안철수 후보	공동	17p	별첨76
12'.11.17	정치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단일화 TV토론 정치·정무분야 학습자료	공동	17p	별첨77
12'.11.19~ 11.27	행정	정부혁신 비전과 책임총리제 연구	자체	17p	별첨78
12'.11.21	종합	제18대 대선 후보단일화 토론자료	공동	118p	별첨79
12'.11.28	종합	제18대 대선 TV토론 정책예화 및 사례	공동	10p	별첨80
12'.11.30	정치외교	제18대 대선 제1차 법정토론회자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공동	37p	별첨81
12'.12.01~ 12.15	경제/복지 /노동/교육/통일외 교안보	매니페스토자료집 - 사람경제	자체	30p	별첨82
12'.12.01~ 12.15	통일외교 안보	매니페스토자료집 사람경제: 통일외교	자체	8p	별첨83
12'.12.01~ 12.15	정보통신	매니페스토자료집 '사람 경제' -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자체	4p	별첨84
12'.12.01~ 12.15	과학기술	매니페스토자료집 '사람 경제' - 과학기술 강국	자체	3p	별첨85
12'.12.01~ 12.15	지식경제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국민의 미래를 살리는 '사람경제』)	자체	4p	별첨86
12'.12.01~ 12.15	지식경제	중소·중견기업 강국 건설(『국민의 미래를 살리는 '사람경제』)	자체	5p	별첨87
12'.12.01~ 12.15	행정안전 국토해양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국민의 미래를 살리는 '사람경제』)	자체	2p	별첨88
12'.12.01~ 12.14	행정	정부조직혁신안	공동연구	66p	별첨89
12'.12.09	경제복지	제18대 대선 제2차 법정토론 전략 및 핵심메시지: 경제복지분야	공동	10p	별첨90
12'.12.16	교육과학 기술	제18대 대선 제3차 법정토론 전략 및 핵심메시지: 교육과학기술분야	공동	27p	별첨91

나. 토론회 등 개최(61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국제세미나	2012. 01.31	국회도서관 소강당	복지국가의 가치와 정당의 역할	사회민주주의 가치와 의미, 21세기 한국의 복지국가 비전, 민주당의 가양할길	에버트재단 공동
간담회	2012. 02.13	민주정책연구원	한반도 정세변화와 평화·통일 정책의 재구성(제1차 간담회)	북한 핵 문제와 한국 외교안보 전략(송민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평가, 전망, 과제(김근식)	
간담회	2012. 02.27	민주정책연구원	한반도 정세변화와 평화·통일 정책의 재구성(제2차 간담회)	2012년 남북관계 정세(홍익표), 금강산 관광 문제, NLL과 서해지역 분쟁 문제, 포용정책2.0 등	
국제세미나	2012. 03.12	중소기업중앙회 제2 대연회실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동북아의 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간담회	2012. 03.15	민주정책연구원	19대 총선 SNS와 IT를 활용한 득표 전략 강연	온라인 홍보전략, TNGF 선거전략연구소장 발표	
간담회	2012. 03.16	민주정책연구원	승리2012 민주통합당 전략 간담회	문화와 정치, 문화예술의 정책방향, 감상수 감독 발표	
토론회	2012. 03.26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이명박정부 4년 평가·과제	정치외교안보분야 평가 및 과제	
토론회	2012. 03.27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이명박정부 4년 평가·과제	경제산업분야 평가 및 과제	
토론회	2012. 03.28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이명박정부 4년 평가·과제	복지노동교육분야 평가 및 과제	
간담회	2012. 04.06	연구원 대회의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민주통합당의 전략과 정책	-대만 및 한국 선거의 특징 -한국의 정당정치 : 당 재편과 선거정치에의 영향 -민주통합당의 2012 총선 (1) : 선거전략 -민주통합당의 2012 총선 (2) : 핵심정책과 선거의 영향 -선거전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와의 상관성	
정책포럼	2012. 04.18	민주정책연구원	재벌개혁 및 입법과제	기업지배구조, 기업집단법, 기업집단규제 등	
포럼 [사회경제 정책포럼]	2012. 04.18~ 09.05	연구원 대회의실	사회경제정책 쟁점 및 대안 모색	경제, 복지, 노동, 민생 및 재원 조달 등 쟁점과 대안 제시	사회경제 정책포럼 민주정책 연구원

간담회	2012.04.20	국회귀빈식당	일본 내각 관방부장관 사이트 쓰요시 초청강연,	일본군위안부 문제, 동북아 평화문제 해법모색	한 일 평화 의 원 회의 공동
정책포럼	2012.04.25	민주정책연구원	자영업·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방안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 종제도, 계열분리명령제도 등	
정책포럼	2012.04.30	민주정책연구원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 보호	종합토론	
정책포럼	2012.05.09	민주정책연구원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등록금 상한제, 재정교부금법 등	
토론회	2012.05.09	국회도서관 대강당	민영화, 민자사업 이대로 좋은가	KTX 민영화,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사업 문제점 분석, 해법모색	진보정책연구원 공동
토론회	2012.05.11	서울시 본청	시민복지기준선	서울 시민복지기준선의 원칙 및 설정방법에 관한 대안 모색	
간담회	12.05.11	연구원 대회의실	개헌(안)의 필요성과 쟁점,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선택	-'1987년헌법'의 한계와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 -'새로운 헌법'의 쟁점 -개헌의 실현 가능성 -민주통합당의 전략적 선택	
정책포럼	2012.05.16	민주정책연구원	가계부채와 서민금융시장	DTI규제, 약탈적대출금지, 파산법, 대부업법 등 개정	
세미나	2012.05.20	국회도서관 소강당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연구용역보고서 발표 및 토론(순환출자금지, 중소기업 적학업종제도도입, 금산분리 등)	경제민주화추진의원 모임 공동
정책포럼	2012.05.24	민주정책연구원	반값등록금과 가계부채	종합토론	
정책포럼	2012.05.30	민주정책연구원	비정규직, 최저임금, 생활임금	비정규직 권리보장방안, 최저임금 보장 및 생활임금 도입방안	
정책포럼	2012.06.08	민주정책연구원	일자리 창출방안	노동시간 단축, 청년고용방안	
토론회	2012.06.12	김대중 도서관	6.15공동선언 12주년 기념 토론회: 2013년 체제와 민간통일운동	MB이후 민간통일운동의 진로모색	시민평화포럼 등과 공동
정책포럼	2012.06.13	민주정책연구원	비정규직 해소 및 일자리 창출방안	종합토론	
정책포럼	2012.06.20	민주정책연구원	노인빈곤해소와 연금제도 개혁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종합검토	

정책포럼	2012.06.27	민주정책연구원	조세개혁 및 복지재정확충	소득세·법인세 개편, 복지증세 방안	
정책포럼	2012.07.04	민주정책연구원	노인빈곤해소와 조세개혁	종합토론	
정책포럼	2012.07.11	민주정책연구원	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 및 재정방안	보편적복지와 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	
정책포럼	2012.07.18	민주정책연구원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 도시재생방안	주택정책의 쟁점과 주거복지 과제, 공공부분의 역할 재정립	
정책포럼	2012.08.16	민주정책연구원	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 및 주거복지 과제	종합토론	
정책포럼	2012.08.22	민주정책연구원	금융공공성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포럼	2012.08.29	민주정책연구원	비정규직 입법과제	기간제법, 파견법, 사내하도급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 방안	
간담회	2012.08.29	민주정책연구원	민주통합당 대선정책 워크숍	국민이 대선에 바라는 정책과제, 미래비전과 현실인식 등(김성재)	
토론회	2012.09.18	연구원 대회의실	2020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부패방지, 청렴정책 등	
토론회	2012.10.04	국회입법조사처 화실	2012년 대선 사회경제정책 10대 아젠다 모색	경제, 노동, 복지 분야별 사회경제정책 10대아젠다 모색	사회경제정책 포럼
간담회	2012.10.12	민주정책연구원	지방분권 정책 방향과 과제	정치/재정/행정분권 과제 검토	
간담회	2012.10.16	민주정책연구원	공공기관 개혁 추진방향과 과제	공공기관체제전환,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 개정,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등	
토론회	2012.10.25	연구원 원장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연구	정부조직개편 방향, 모델 등	
간담회	2012.11.09	민주정책연구원	정부조직개편 평가 및 과제	역대정부 정부조직개편 평가 및 시사점 도출	
간담회	2012.11.10	전국노사합회 화실	지방자치3.0시대-연방제분권국가 실현방안	중앙지방정부의 혁신적인 기능 및 역할 재조정	
간담회	2012.11.13	민주정책연구원	지방자치3.0시대-연방제분권국가 실현방안	중앙지방정부의 혁신적인 기능 및 역할 재조정	
토론회	2012.11.13 ~ 12.14	연구원 대회의실	정부조직개편방안 토론	책임총리제, 부처개편 등	

간담회	2012. 11.17	서울역 회의실	정부혁신, 정부조직개편 전략/과제	국가혁신 및 정부조직개편 과제	
간담회	2012. 11.18	민주정책연구원	공공기관 개혁 추진방향과 과제	공공기관 관리체계, 공공기관 지배구조개선	
간담회	2012. 11.20	민주정책연구원	정부조직개편 방향 및 과제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분야	
국제 세미나	2012. 11.20	민주정책연구원	로버트캐네디센터 인권강연	한국의 인권과 국제인권동향	
간담회	2012. 11.24	민주정책연구원	정부조직개편 방향 및 과제	국토/해양/수산분야	
간담회	2012. 11.24	민주정책연구원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지식경제부, 교육부 분야	
간담회	2012. 11.25	민주정책연구원	공공기관 개혁 추진방향과 과제	공공기관 구조조정, 부채개선방안	
간담회	2012. 11.27	민주정책연구원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	금융위원회, 금감원, 기재부 등	
간담회	2012. 11.27	민주정책연구원	정부조직개편 방향 및 과제	중소기업/산업분야	
간담회	2012. 11.29	민주정책연구원	재정분권과 지방재정혁신 방안	지방세확충(소득·소비세원 이양), 재정분권과 헌법개정 등	
간담회	2012. 12.01	서울역 회의실	정부혁신 및 조직개편 과제	보고서 주요과제 검토	
간담회	2012. 12.02	민주정책연구원	공공기관 개혁 추진방향과 과제	지방공기업개선, 공공기관 이전과 일자리창출 방안	
간담회	2012. 12.05	민주정책연구원	정부조직 기능별 배분과제	책임총리제, 반부패기구, 검찰 등 사정기관 분야	
간담회	2012. 12.06	민주정책연구원	정부조직 기능별 배분과제	경제금융/사회분야/지방자치/문화관광/산업에너지 분야	
간담회	2012. 12.07	민주정책연구원	정부조직개편 방향 및 과제	교육분야	
간담회	2012. 12.10	민주정책연구원	ICT추진체계 개편방안	정보통신분야 개편 과제	
간담회	2012. 12.13	민주정책연구원	분권국가와 균형발전 사회 건설을 위한 청사진	분권국가 구상, 지역산업발전구상, 지역공동체 구상 등	

다. 교육·연수활동(1회)

교육·연수명	일시(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당직자 연수 및 워크샵	2012.07.04-05	대명비발디파크 (강원 홍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 및 당직자 워크샵	

라. 정책홍보(12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2'.02~06	민주당 "정책연구"	"IDP정책연구"발간 및 홈페이지 개재	"IDP정책연구"편집 및 출간·배포 담당	
12'.02.07	홈페이지	홈페이지 게재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 분석	
12'.02.17	홈페이지	홈페이지 게재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 경제연설 분석	
12'.04.30 ~5.30	사람과 정책 (계간지)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및 전·현직 의원, 당원, 전문가 그룹 단행본 및 이메일 송부	대구지역 총선 후보 정책 및 선거지형	사람과 정책 Vol.5 봄호
12'.07.25 ~08.25	이슈브리핑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및 전·현직 의원, 당원 및 전문가 그룹 이메일 송부	최저임금제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브리핑 3호
12'.08.08	이슈브리핑	e-mail발송(전현직 국회의원,당원,전문가)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황공포	
12'.08.17	이슈브리핑	"	세계금융위기의 정치적 함의	
12'.09.04	on-line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금융의 공공성 확보방안	
12'.09.18	홈페이지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송부	미국 민주당 대선전략 연구	
12'.10 ~12.19	방송 일간지	매니페스토 정책집 발간	대선 분야별 공약 정리 및 언론의 질의응답에 대한 대응	
12'.10.05	이슈 브리핑	온라인으로 배포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국회배포
2012.11.08~ 11.29	신문 라디오 온라인	-TV광고: KBS, MBC, SBS, YTN, OBS (총30회) -라디오:KBS-FM, MBC-FM, CBS-FM (총30회) -신문: 주요일간지 및 지 방지 등 (총63회) -온라인:Naver, daum, nate 등 주요포털 및 언 론사 사이트, 모바일앱을 통한 배너 및 온라인 동 영상 광고 집행	-후보자 및 당 책(지역별/연 령별 주요 정책)홍보를 위한 광고기획, 제작, 미디어집행 -대선운동 기간 前 당 정강 정책 홍보용 신문, 라디오, 온라인 광고 제작 및 홍보 (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등 민주통합당 지 역별 정책 광고외 다수)	김재용 (18대 대선 선대위 광고팀 장수행)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35건)

발간 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주및향	비 고
2012. 01.16	연구논문	정당정치 위기극복을 위한 민주통합당 혁신방안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전략연구2012-01:
2012. 01.31	국제세미나 자료	복지국가의 가치와 정당의 역할	자체발간	현장배포,	
2012. 03.12	국제세미나 자료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동북아의 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자체발간	현장배포	
2012. 03.22	연구논문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정치연구 : 유형과 정책의제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2012-01호
2012. 03.26	연구논문	4.11총선 필승을 위한 민주통합당 전략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전략연구 2012-02호
2012. 03.26	토론회 자료	이명박정부 4년 평가·과제	싱크탱크네트워킹과 공동	현장배포	
2012. 03.30	연구논문	민주진보진영의 대외정책 구상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정책연구 2012-01호 : :
2012. 04.23	연구논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중단기적 대북정책 업그레이드 방안 연구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2012-02호:
2012. 05.01	계간지	사람과 정책, 2012 봄호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2012. 05.03	연구논문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요약>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정책연구 2012-02호
2012. 05.09	토론회 자료	민영화, 민자사업 이대로 좋은가?	진보정책연구원과 공동	현장배포	
2012. 05.11	연구논문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본 민주통합당 4.11총선 패배연구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전략연구 2012-03호
2012. 05.11	연구논문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2012-03호
2012. 05.11	간담회자료	개헌(안)의 필요성과 쟁점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선택	공동	30부 / 토론회 배포 및 원장단 보고	

2012. 05.20	세미나 자료	재벌개혁과 입법과제	외부옹역	현장배포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공동
2012. 05.23	연구논문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대안 구상(2012년 진보가치와 경제개혁 과제)<요약>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정책연구 2012-03호
2012. 06.01	연구논문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대안 구상(2012년 진보가치와 경제개혁 과제)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2012-04호
2012. 06.12	토론회 자료	6.15공동선언 12주년 기념 토론회: 2013년 체제와 민간통일운동	시민평화포럼, 한겨레평화연구소 공동	현장배포	
2012. 09.01	연구논문	희망한국을 위한 정책비전(네트워크국가·네트워크 경제로의 길)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2012-05호
2012. 09.01	연구논문	희망한국을 위한 정책비전(네트워크국가·네트워크 경제로의 길) <요약본>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2012-05호
2012. 09.01	연구논문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재벌개혁에의 시사점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IDP네트워크 정책연구 2012-06호
2012. 09.14	계간지	사람과 정책, 2012 여름호	자체발간	국회의원, 당원	
2012. 09.14	연원재발간지	2012년 프랑스 대선평가	자체발간	1천 5백부 발간	
2012. 10.15	번역도서	사민주의 총서 I : 사민주의의 기초	애비티재단과 공동	한울출판 발행	
2012. 10.15	번역도서	사민주의 총서 II : 경제와 사회민주주의	애비티재단과 공동	한울출판 발행	
2012. 10.15	번역도서	사민주의 총서 III :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애비티재단과 공동	한울출판 발행	
2012. 10.26	당원교육용 정책 자료집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힐링코리아 정책 자료집	자체발간	시당당 각 10부 총 2,000부 배포	

2012. 11.19	당원교육용 온라인홍보책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힐링코리아 정책 9월달로그	자체발간	민주당의원및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업로드	
2012. 11.25	당원교육용 만화책	경제위기에서 살아남기	자체발간	시/도당 각 100부 총2500부 배포	
2012. 11.27	당원교육용 정책자료집 추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힐링코리아 정책 자료집	자체발간	시/도당 20,000부 배포	
2012. 11.27	연구논문	민주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구상	외부용역	대선공약에 참조	
2012. 11.29	메니페스토 정책자료집	서민경제 대통령 매니페스토10: 살림	자체발간	2000부	
2012. 12.08	메니페스토 정책자료집	미래경제 대통령 매니페스토7 : 일자리경제	자체발간	5000부	
2012. 12.15	메니페스토 정책자료집	사람경제	자체발간	5000부 전국배포	
2012. 12.19	연구논문	시민의 정부, 바람직한 국정 개혁 과제	자체발간	10부,당내배포	

바. 그 밖의 주요활동(45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2'.01.05- 01.08	대전, 충남시당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대회 지원 파견	지도부 선출대회 지원	
12'.01.13- 01.14	대전시당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대회 지원 파견	투표소 설치 관리, 투표결과(기록지 등) 운송	
12'.01.31- 02.06	대전지역	4.11총선예비후보 지역실사 파견	지역주민 심층면접, 선거구 지형 및 정서 파악 등	
12'.01.17 ~02.01	한국노총 본부	전문가 간담회	제19대 총선 노동분야 공약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12'.01.31 ~02.06	부산광역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부산지역 총선출마 후보 지역실사	

12'.02	전남	제19대 총선 예비후보 실사	전남지역 예비후보 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	
12'.02.01 ~02.22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관리	연구용역계약 체결 등 관리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사회연 구소
12'.02.01 ~04.20	영등포 당사	대표비서실 메시지팀	대표 메시지	
12'.02.09 ~12'.02.16	서울특별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지역 총선출마 후보 지역실사	
12'.02.15- 03.15	중앙당	4.11총선 정책공약 작성 파견	총선정책과제 작성	
12'.02,17 ~02,20	영등포당사	지도부 언론 인터뷰	지도부 언론 인터뷰 지원)이미경 총선거획단장, 이인영 최고위원 '손바닥TV' 인터뷰 말씀자료 작성)	
12'.03.01 ~08.13	영등포 당사 및 중앙대	국민연금기금 활용방안을 위한 외부자와 공동연구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전략과 지배구조"보고서 작성	외부연구자와 공동연구 "국민연금기금 의 투자전략과 지배구조" 출간(인간과 복지)
12'.03.05- 03.09	중앙당	4.11총선 야권연합정책협약 실무지원 파견	정책협약안 검토 및 실무지원	
12'.03.19 ~04.11	대구광역시당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구시당 총선지원을 위한 감독관 파견	
12'.03.21 ~04.11	영등포 당사	제19대 총선 TV토론회	제19대 총선 TV토론회 질의응답서 작성 및 실무지원	
12'.03.24 ~04.11		제19대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	당 비례대표 후보 TV토론 및 방송연설 기획 및 총괄	팀장
12'.03.26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싱크탱크 네트워크 토론회	'이명박정부 4년평가' 토론회	노동분야 토론패널

12'.04.05-04.07	중앙당	4.11 총선 지원 파견	선거유세, 방송토론, 당원간담회, 투표독려 등 선거운동	
12'.04.10~08.30	영등포 당사 및 중앙대	기초연금 국제비교	"기초연금의 경로 변화에 관한 국가 간 비교" 보고서 작성	외부연구자와 공동연구
12'.04.18~09.05	민주정책연구원	사회경제정책포럼	사회·경제정책 의제개발을 위한 포럼 실무지원	기획위원 및 실무지원
12'.05.07~06.09		당대표선출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 기획 및 총괄	팀장
12'.05.10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선포론회	복지기준선포론회 토론자	
12'.05.10~06.10	영등포 당사	전당대회준비위 당무평가팀	당무평가	
12'.05.21~06.05	영등포 당사 및 부산	당대표 선출을 위한 TV토론회	당대표 선출을 위한 TV토론회 일정 및 토론자료 작성	
12'.06.08~06.25	국회	대선공약 TF팀 파견	제18대 대선공약 발굴을 위한 회의 참가	
'12.06.18~06.30	영등포 당사	대선후보경선 준비기획단 기획팀	대선후보 선출방안	
'12.07.04~07.05	강원도 홍천	정당 사무처 간부 연수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준법선거 기반조성 및 정당발전 방안 모색	중앙선관위
'12.07.18~09.17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후보경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대선후보 국민경선 방송토론: 정책토론회 및 초청토론회 기획 및 총괄	팀장
'12.08.15~11.30	영등포 당사 및 고려대	사회보장위원회 구성방안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외부연구자와 공동연구
12'.08.25-08.26	제주시	최고위원회의 정책 프레젠테이션(PT) 지원 파견	국민공감 정책캠페인 전략 '힐링코리아' 프레젠테이션(PT)	
12'.08.30-09.14	중앙당	18대 대선공약 개발단 공약기획TF 파견	대선택심의제 설계 및 전략의제 세팅	
12'.08.30-09.30	중앙당	전략홍보본부회의	-대선전략, 오픈프라이머리 진행 관련사항, SNS전략, C리뉴얼 등 회의참석 및 안건제안을 통한 협업 (주 3회, 총 10회 참석)	
12'.9.03-09.30		대선승리를 위한 캠페인 컬러제안	당 컬러의 혼용사용문제 해결 및 새누리당 '레드' 대응 캠페인 컬러 선정 필요성 및 가이드라인 제시	
12'.09.06-09.16	전주, 광주, 부산, 서울	지역순회경선(오픈프라이머리)지원	-식전행사 '융감한 의원들' 기획 및 공연 진행 총4회(전주, 광주, 부산, 서울) -오픈프라이머리 백드롭 디자인	

12'.09.30-10.27		민주당 C리뉴얼 전략 제안 및 활용 매뉴얼 개발	-업체선정을 위한 경쟁 프리젠테이션 -시안선정, 수정/보완작업 진행 -컬러 활용가이드를 포함한 최종 매뉴얼 작성	
'12.9.24~11.23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관리	연구용역계약 체결 등 관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및 정년연장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우석대학교 김근태민주주의 연구소
12'.10~12.19	영등포 당사 및 여의도 당사	제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매니페스토 작성 및 언론사, 학회 등 답변 자료 작성	
12'.10.05~12.19		제18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민주캠프)	단일화 토론 및 본선 법정토론 기획 및 진행 총괄	팀장
12'.10.10~12.18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매니페스토본부 정책팀장	매니페스토 공약개발 매니페스토 자료집 발간	
12'.10.10-12.19	중앙당 대선 선대위	국가혁신특별위원회	국가혁신과제 보고서 작성	
12'.10.22~12.20	영등포 및 여의도 당사	제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매니페스토 생산 및 언론사, 학회 등 질의서 답변	매니페스토본부
12'.10.22~12.21	영등포 및 여의도당사	제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매니페스토 정책 생산 및 언론사·시민단체·학회 등 요구자료 답변 생산	매니페스토본부
12'.10.22~12.20	민주정책연구원	대선캠프 국가혁신특별위원회 정부혁신분과	정부조직개편방안	
12'.11~12	민주캠프	매니페스토 답변서 작성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및 각 언론사 등에서 요청한 대선공약 관련 질의서의 답변서 작성	
12'.12.26~		민주통합당 중앙위원회	제1차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별 첨1】

주제 : 연합정치 효과

- 연구기간 : 2012년 1월 5일 - 2월 10일(1개월 5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연합정치의 효과 분석
- 연구내용
 - 야권연대의 효과 분석과 권역별 특징
- 연구성과
 - 학진등재 외부학술지 『한국정치연구』에 발표

【별 첨2】

주제 :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 분석

- 연구기간 : 2012년 1월 25일 - 1월 31일(7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오바마 정부의 2012년 국정방향과 대선 전략 탐색○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분석○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 홈페이지 수록

【별 첨3】

주제 : 청년연금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년 12월 5일 - 2012년 1월 31일(2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한창근, 성균관대 교수)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년연금제도의 이해를 위해, 청년이 처한 현실, 자산의 중요성, 사회투자이론,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 제도적 저축이론,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그리고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청년연금'을 소개하고, 그 제도의 예산 및 도입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제시

○ 연구내용

- 사회투자정책
-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의의
- 저소득층의 저축을 설명하기 위해서 Michael Sherraden은 제도적 저축이론(Institutional Saving Theory)을 제시
- 자산형성과 저소득층의 탈빈곤 효과 분석
-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연구

○ 연구성과

- 보고서 발간

【별 첨4】

주제 :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 경제연설 분석

- 연구기간 : 2012년 2월 6일 - 2월 10일(5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및 메시지 벤치마킹○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캔사스주 오사와토미(Osawatomie) 연설 분석 및 평가○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 홈페이지 수록

【별 첨5】

주제 : 영국 노동당의 정책 혁신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2월 1일 - 3월 31일(2개월)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노동당의 정책 혁신 벤치마킹○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잉글랜드 지방선거 평가와 영국 노동당의 정책 혁신 분석○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연구실 토론

주제 : 민주진보진영의 대외정책 구상

- 연구기간 : 2011년 12월 8일 - 2012년 2월 29일(2개월 21일)
- 연구분야 : 외교통상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코리아연구원)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적 대외전략을 제시하여 향후 민주진보진영의 대외전략 논의를 활성화하고 심화하는데 기여
- 연구내용
 - 첫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서는 ▲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평화체제 동시 추구 ▲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 확립 및 남북연합제 추진 ▲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6.15 공동선과 10.4 선언 계승 발전 ▲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의 동시 추구 ▲ 남한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와 남북경제의 균형발전 병행 추진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동북아 경제문화권 건설 등의 정책이 가능하다.
 - 둘째, 선린우호 및 다자협력 외교 부분에서는 ▲ 실용주의적 주변국 외교정책 수립 ▲ ASEAN 및 인도와의 관계증진 ▲ 역내 다자안보협력기구 수립을 향한 대화와 협력 ▲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협력 확대 ▲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의 활성화 ▲ 균형적, 호혜적, 방어적, 선린우호 방향으로 한미동맹 전환 ▲ '평화적 해결' 원칙과 실효적 지배를 통한 영토·영해문제 해결 ▲ 국제평화, 평화적 생존권, 국민의 감시 하의 파병정책 등을 추진
 - 통상/ FTA정책에서는 ▲ FTA 만능론 경계, 다자경제협력 추구 ▲ 호혜적 경제논리에 입각한 FTA ▲ 동북아 국가간 '상생적' FTA라는 기준 하에서 추진
- 연구성과
 - 연구 결과물은 IDP정책연구로 발간되어 당원 및 의원실, 기자실 등에 배포되었음

【별 첨 7】

주제 : 이명박식 일자리와 비정규직

- 연구기간 : 2012년 3월 12일 - 3월 26일(14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현 정부 4년간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기 위함
- 일자리 창출 방향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 연구내용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현황 비교 분석
- 비정규직 관련 고용지표 비교 분석
- 종합평가 및 입법과제 제시

○ 연구성과

- 이명박 정부 4년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였음
- 일자리 질 제고와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음

주제 : 김부겸의 아름다운 도전

- 연구기간 : 2012년 3월 19일 - 4월 30일(1개월 13일)
- 연구분야 : 정치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의 취약지역인 대구지역의 정치지형 분석
- 김부겸 후보의 유권자 접촉면 확대 및 유세방법을 통한 지역주의 극복 방안

○ 연구내용

- 대구 및 후보 지역구(수성구갑)의 정치지형 분석
- 지역 후보의 인물과 정책의 경쟁력
- 지역주의 극복과 남겨진 과제

○ 연구성과

- 지역주의를 자극 또는 편승하는 여당후보를 야당후보로서 인물과 정책면에서 경쟁력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대구지역의 지역주의 극복 대안을 제시했음
- 당내 총선평가 과정에서도 취약지역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어 자부심과 의욕을 고취시켰고 지역내 여당 및 언론들도 야당과 야당후보들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지역주의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음

주제 : 민주통합당의 기존 이념과 정책 - 시사점과 정책방향

연구기간 : 2012년 3월 26(발간일)

연구분야 : 종합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민주정부 10년과 그 이후 민주개혁세력으로서 민주통합당이 추구해왔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정책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로부터 시사점과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민주통합당과 강령의 변화과정 및 특성
2. 민주통합당의 기존 가치와 정책지향성
3. 정책분야별 정책쟁점 : 6대 분야 31개 정책쟁점
4. 시사점과 교훈

○ 연구성과

본 연구성과물은 당의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일부 해당 전문가그룹에 배포되어 당의 진로와 연구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됨

주제 : 진보적 생활정치의 실천을 위한 좋은 정책 사례

- 연구기간 : 2011년 11월 15일 - 2012년 2월 15일(3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한국미래발전연구원)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생활정치는 모든 개개인의 생활이 개선되고, 그 들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정치를 지향함
 - 지방자치단체의 진보적 생활정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민주당 소속의 많은 자치단체장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2012년 총선에 있어 국민들에게 제시할 좋은 정책의 개발을 위해 생활정치의 모델 구축
- 연구내용
 - 생활정치의 이론적 배경
 - 진보적 생활정치의 성공사례 분석
 - 성공적인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시사점과 과제
- 연구성과
 - 생활정치에 성공한 지자체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 추진을 확인했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발표

주제 : 제19대 총선 비례대표후보자 TV토론자료 - 정치·사회분야

- 연구기간 : 2012년 4월 3일
- 연구분야 : 정치 및 사회일반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9대 총선승리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후보자 TV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토론전략과 기초, 그리고 정치 및 사회분야 정책Q&A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ol style="list-style-type: none">1. 총선승리를 위한 TV토론 전략 및 기초2. 정책Q&A<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및 정당혁신- 한미FTA- 언론자유와 공공성 강화 등○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을 대신하여 출연한 비례대표후보자 TV토론의 학습 및 참고자료로 활용됨

주제 : 제19대 총선 비례대표후보자 TV토론자료 - 경제·복지분야

□ 연구기간 : 2012년 4월 9일

□ 연구분야 : 경제 및 복지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9대 총선승리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후보자 TV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토론전략과 기초, 그리고 경제 및 복지분야 정책Q&A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총선승리를 위한 TV토론 전략 및 기초
2. 정책Q&A
 - 경제민주화방안
 -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 저출산·공령화대책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을 대신하여 출연한 비례대표후보자 TV토론의 학습 및 참고자료로 활용됨

주제 : 4.11 총선 평가 및 과제

- 연구기간 : 2012년 4월 15일 - 5월 3일(0개월 18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4.11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도출○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4.11 총선에서 민주당의 패배 원인과 이후 개혁과제○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대표 보고 및 비공개토론회 발표

주제 : 희망한국을 위한 정책비전-네트워크국가 · 네트워크경제로의 길

- 연구기간 : 2012년 05월 01일 - 06월 30일(2개월)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 · 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비전 및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절박한 필요성. '희망한국'은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지향하는 국가비전 및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추구- 야권이 극복해야 할 문제는 개혁진보세력의 타성적인 세계관과 정책 프레임, 그에 따른 구태의 연합과 무능의 이미지임. 이에 따라 현 집권세력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국가비전과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한국'은 네트워크를 조직원리로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공동체, 즉 네트워크경제, 네트워크국가를 지향. '희망한국'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정책 패러다임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기초로 하여 국가비전으로서의 새로운 5대 가치를 제시함.- HOPES의 머리글자를 따 '공존(Harmony)', '기회(Opportunity)', '혁신(Progress)', '분권(Equilibrium)', '안전(Security)'을 「희망한국」을 여는 5대 가치로 도출.- 헌법 119조 제1항서 '기회'(Opportunity)와 '혁신'(Progress)의 가치를 헌법 119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 구성원간의 '공존'(Harmony)과 '분권'(Equilibrium)의 가치 도출- 또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급증하는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경제적 차원에서의 '안전'(Security)의 가치를 도출○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당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한반도평화 정책 등에 반영- 18대 대선 공약에 반영(사회적 약자 통합과 보호, 조화와 공존의 대외정책, 교육, 일자리, 청년, 지방분권, 한반도평화, 서민주거 및 금융안정, 시민참여 등)

주제 :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1년 11월 15일 - 2012년 2월 15일(3개월)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과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청년실업대책을 제시하고 청년층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주거, 의료영역에서 청년층의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청년층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인 지원책을 마련

○ 연구내용

- 첫째, 공공기관과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제와 관련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고용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바뀌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 둘째, 청년층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 문화, 교육, 보육/돌봄 영역의 사회서비스 공공화와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주40시간 근무제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고,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교대제 개선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내용

- 넷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인해 구직과 생활에 위협을 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 여섯째, 학력 특성에 따른 교육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일곱째, 국가건강검진체계에서 19세 이상 40세 미만 피부양자 및 세대원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여덟째,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모두 1인 가구를 배제하고 있는데, 대출의 자격을 만 19세 이상, 1인 가구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 연구성과

- 연구 결과물은 IDP정책연구로 발간되어 당원 및 의원실, 기자실 등에 배포되었음

주제 :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 연구기간 : 2012년 05월 09일 - 07월 31일(3개월)
- 연구분야 : 정무위, 기재위, 지경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p>○ 연구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 심화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위기 봉착- 경제력의 과도한 재벌집중이 낳은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과제 제시를 목표로 함 <p>○ 연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벌이란 기업집단의 실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재벌 내부의 지배구조를 이용한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등 재벌의 지배구조 자체를 합리화 하는 규율을 마련(기업집단법의 제정)- 재벌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확장 등 재벌의 사업행태 규율(중소기업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법상 기업분할,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공정한 하도급관계가 정립되도록 법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재벌 소속 대기업들의 잦은 담합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재벌의 투자에 대한 규제 및 조세개혁(순환출자 금지, 최저한세율도입 등) <p>○ 연구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당 재벌개혁 정책과제 및 입법안 제안- 18대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완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기반 구축 등)

주제 : 사용자 중심의 토지와 주택을 위한 정책과제

- 연구기간 : 2012년 05월 09일 - 07월 31일 (3개월)
- 연구분야 : 국토해양위, 기재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p>○ 연구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와 주택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줄이고, 토지와 주택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을 없애는 것임.- 토지와 주택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총체적인 접근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함. 모든 토지와 주택에 적용되는 제대로 된 세제정책과 토지소유를 점차적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제시
<p>○ 연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 중심의 과제 연구를 위해 부동산 세제정책,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소유 및 주택 공급정책, 재개발·재건축 정책, 해외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검토 등 총체적 접근- 신규주택을 사용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정책과 국지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할 정책 제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주택토지정책 평가, 해외 선진국의 토지주택에 대한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시장 참여자들에게 토지와 주택으로 돈 버는 것이 점차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사항을 토지와 주택을 사용자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이를 이용한 경기부양으로 성장과 고용을 증대한다는 환상을 불식하고, 빈부격차와 사회갈등 해소의 방향 제시
<p>○ 연구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당의 종합적 토지주택 정책과제에 대한 방향 제시- 18대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확대 등)

주제 : 공공건설사업 제도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5월 09일 - 07월 31일 (3개월)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분야 : 국토해양위, 기재위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999년 3월 국민의 정부는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평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공공건설공사에 5-60조가 투입되지만 건설산업의 가격거품, 다단계 하도급비리,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최하층 일용 건설종사자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대책 필요
- 특히 최근 4대강사업 턴키공사 담합입찰로 인한 혈세낭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의 요금인상과 맥쿼리 특혜 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함

○ 연구내용

- 도로, 철도, 항만 등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건설사업, 민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다단계 하도급 등)와 비용구조 측면(예산낭비 등)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우선순위 및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및 민자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의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제시
- 건설산업의 특징 및 공공건설사업의 문제점, 재정사업의 사업단계별 원인분석, 민자사업의 사업단계별 원인분석, 미국의 NCG, 영국의 레이삼보고서, 일본의 『공공공사 비용절감 행동지침』과 같은 공공건설산업에 대한 Master Plan 조속 수립 권고
- 공공건설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상시적 정보공개, 표준품셈 폐지 및 시장단가제 전환, 직접시공의무화, 전문적산사 자격제도 도입, 턴키입찰제 폐지, 민자사업 MRG 폐지, 민간사업자 수용권 폐지, 불공정하도급 특약 금지, 중앙감리제 도입 등 제시

○ 연구성과

- 민주당의 4대강 사업 등 공공건설 및 국책사업 정책방향 및 과제 제시
- 18대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4대강 사업 국민검증 등)

주제 :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대안 구상: 2012년 진보의 가치와 경제개혁 과제

- 연구기간 : 2011년 11월 1일 - 2012년 1월 31일(3개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진보의 경제, 사회정책 대안은 ‘시장에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개혁’과 ‘사회적 복지를 통한 재분배 강화’라는 두 개의 축으로 각각의 세부적 규제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안 ○ 연구내용- ‘소득주도 성장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에서는 생산성 증가가 재벌개혁과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정책에 따라 노동시장의 실질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복지지출 확대는 세후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이윤 및 매출 증가의 기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로는 먼저, 신뢰와 협동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자면, 가장 먼저 경제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재벌체제’를 개혁하고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내용

기초적인 경제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둘째로 금융거래세를 신설하여 자본유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셋째, 아래로부터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대안으로 협동조합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넷째, 공기업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재(再)공공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마지막으로 2012년 선거는 보편복지담론에 기초하면서도 의제 영역이 확장되면서 경제 민주화 담론이 주 논쟁 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금융규제와 재벌개혁, 자산 거품 억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의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더 나아가 경제 민주화의 내용을 노동 민주화를 확장시키는 것만이 근본적인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의 방안

○ 연구성과

- 연구 결과물은 IDP정책연구로 발간되어 당원 및 의원실, 기자실 등에 배포되었음

【별 첨20】

주제 : 민주당 정책역량강화 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5월 25일 - 6월 10일(0개월 15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민주당 정책역량 강화 방안 도출
- 연구내용
 - 민주당 정책 역량의 집중화와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혁
- 연구성과
 - 당대표 보고 및 당 개혁 방안에 참고됨

주제 : 민주통합당의 성장담론 평가와 과제

- 연구기간 : 2012년 6월 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선공약에 새누리당/민주당 양당 모두 성장 관련 공약이 실종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 현재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함○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로존 재정위기와 한국경제- 2) 총선 이후 민주 대선주자들의 정책 변화- 3) 박근혜 - 새누리당의 성장담론- 4) 민주통합당의 성장담론- 5)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 정책연구실 “내부토론회” 발제문- 성장담론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주제 :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 연구기간 : 2012년 05월 09일 - 07월 31일 (3개월)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분야 : 정무위, 기재위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97년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 핵심과제로 제시되었으나 체계적인 방식보다는 단편적이고 선정적인 구호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회사법 체계에 근거를 둔 재벌개혁은 분산된 소유구조하의 개별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약했음
- 복잡한 다단계 출자구조의 기업집단 형태를 가진 한국의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 자체를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설정하는 새로운 법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내용

- 재벌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계열사가 공통의 지배하에 통할 경영되는 기업집단이라는 기본 사실을 인식하고, 유럽의 기업집단법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경제력집중 억제 및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재벌개혁목표 및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
-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독일 등 주요 EU회원국의 기업집단법 제정 시도와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기업집단관련 입법원칙,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통합도산법 개정 사항 등 경쟁 법체계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함
- 유럽의 경험을 종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업집단법을 도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 할 실제적·절차적 핵심 사항들을 범주화하고, 그 각각에 대해 유럽 각국이 채택한 정책적 대안들을 정리
- 본 보고서에서는 총 21개의 입법 과제를 제안하는데, 이 과제들의 일부를 선별·조합하여 일관성과 집행 가능성을 갖춘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큰 과제임.

○ 연구성과

-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제시
- 18대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공정거래법 개정 등)

주제 : 민주통합당의 에너지·기후 비전 2030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04일 - 09월 15일 (3개월)
- 연구분야 : 정무위, 기재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참여정부는 2006년에 '비전 2030'을 뒷받침할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된바 있고, 일부 내용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됨. 과거의 비전을 성찰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가치와 의제를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사회에 도전적 과제가 될 수 있는 기후 변화 위기와 에너지 위기 해결에 필요한 탈핵·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생태전환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우리사회 에너지, 기후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현재의 위기 대응 체계 및 이전 정부들의 정책을 평가하며, 대안적인 정책 제안을 검토하여, 새로운 에너지기후 비전 2030을 위한 원칙과 프레임, 분야별 정책방안 제시
-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연대 경제와 녹색 일자리를 강조하는 녹색 경제 실현과의 연계, 동북아 국제 에너지 연대 가능성과 같은 정치외교적 접근의 가능성, 에너지 시민 거버넌스의 구성을 통한 지역 재생에너지 체제 수립 등 속의 민주주의의 문제도 다루는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적 접근을 시도함.
- Part I에서는 현재의 에너지, 기후변화 위기 상황, 기존의 이들 위기 대응 체계 현황 및 연관 정책들, '에너지기후비전 2030'에 대한 원칙과 프레임 구성을, Part II에서는 에너지기후 비전 2030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방안 및 추진 계획을 제시함.

○ 연구성과

- 민주당의 지속가능한 환경과 에너지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제시
- 18대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탈원전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 등)

주제 : 차기정부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04일 - 09월 30일 (4개월)
- 연구분야 : 여성가족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정책과 추진체계가 지나온 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평등의 가치와 철학이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이며, 이를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기 위한 정책기구의 형태를 모색하고자 함.
- 특히 모든 사회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성주류화 전략이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책을 추진기구 개편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함.

○ 연구내용

- 현재 국가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가 실효성 있게 설정되어 있는 지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2013년 차기 정부가 만들어갈 여성정책의 방향과 정책내용을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추진기구 개편방안 제시
- 본 연구에서는 성주류화를 성평등정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성주류화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도출하는 것까지의 스펙트럼으로 추진기구의 대안을 모색함.
- 1안에서 4안에 이르는 대안 가운데 본 논의의 한계와 우리의 정치적 현실의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절한 성평등정책추진기구 대안으로 통합적 성주류화 추진체계로서의 (가칭)성평등위원회 + 여성가족부(4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수정과 보완 그리고 더 나은 방향성에 대한 총합으로 2013년 성평등정책추진기구의 새로운 탄생을 기대함

○ 연구성과

- 민주당의 성평등 사회 실현 추진 방향과 전략 제시
- 18대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성평등사회 실현, 여성일자리, 일·가족·생활의 균형 실현 등)

주제 : 2012대선, 시민참여의 사례 및 플랫폼 개발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04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행안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당정치가 공공정책에의 개입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입지를 가질 때, 시민사회운동도 더욱 활성화 됨. 이번 연구는 대선시기 시민사회운동의 활동범주를 살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시민사회운동의 공간을 확장하는 데 있음
- ‘선기시기 시민의 정치 참여 공간 연구’의 사례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나 야권후보 단일화 운동, 생명평화대행진과 경제민주화시민실천 운동의제임. 특히 ‘500인 원탁토론 : 시민, 대선을 논(論)하다’ 는 특별히 이번 연구를 위한 기획임.

○ 연구내용

- 이번 연구에서는 정당정치와 시민사회의 참여정치(시민정치)라는 쌍두마차가 한국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구조를 상정함.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정치의 시민포섭이 강해졌음.
- 정당이 발전하면서 시민사회와의 조응도 깊어 감. 시민사회의 의제를 정치권으로 들고 가면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경향도 점차 정착되고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노력은 SNS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 네트워크, 소통, 공감, 참여 등 SNS의 긍정적 지표가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는 것임.
- ‘500인 원탁토론’ 의 경우, 시민참여의 플랫폼적 기능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임. 투표하는 행위와 연관되는 시민참여의 적절한 수준을, 후보의 정책에 대한 선호도 평가라는 점에 접근하여 주권의 현재성을 구현하지는 것임.
- 원탁토론의 이러한 형식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구현되고 있고, ‘시민에 의한 정책 생산’도 점차 가능한 컨셉이 될 수 있으며, 이미 플랫폼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시민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소통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좋은 역할을 기대함.

○ 연구성과

- 18대 대선 선대위 시민캠프의 구성 및 역할 제언

주제 : 민주당 청년정책 혁신 제안 및 청년시민의회 아테네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04일 - 09월 30일 (4개월)
- 연구분야 : 행안위, 여성가족위, 환노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우리사회의 변화와 정치의 혁신이 청년세대로부터 시작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한국 사회에 적합한 청년들의 정치참여 모델을 개발함. 청년의 정치 참여가 의미하는 것은 정당 혹은 정부의 정책 수립 매커니즘이 전문가 용역에서 시민참여로 확장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함.
- 한국 사회에 적합한 모델의 한 유형으로 청년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용함으로써 실험적인 민주주의의 경험과 사례를 축적하고, 이 틀을 2030의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활용함

○ 연구내용

-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일본, 국내 청춘콘서트 등 국·내외 청년 정치참여 사례 연구에서 드러난 몇 가지 공통점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당의 사회침투력약화 △정당에 대한 애착심 소멸 △투표 무관심 △정당에 대한 불만 등 청년 유권자들의 특정정당에 대한 지이탈과 탈정치화는 보편적이라는 것임
- 지속가능한 민주당을 위한 청년정책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회)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청년비례 후보 진출을 보장, 당내 기구로서 민주당 유스클럽(youth club) 조직, 민주당 유스캠프(Youth camp ; 여름방학은 경우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겨울 캠프의 경우 대학생 대상의 프로그램) 운영 제안
- 시민의 정치참여, 특히 청년의 정치참여모델의 실제적 방안을 제시함. '청년시민의회 (가칭) 아테네'라 이름 붙인 이 모델은 청년시민이 1년 동안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검토, 법안 심의를 거쳐 의결한 1개의 법안을 청년국회의원이 실제로 국회에 입법 발의하는 형식임

○ 연구성과

- 민주당 청년위원회에 청년정치참여 모델 및 청년정책 제안

주제 :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의제2013 -차기정부 대북평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04일 - 09월 30일 (4개월)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북정책 및 관련된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독자적인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치권의 정책논의에 반영하고자 함
-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북정책과 담론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① 이명박정부 이후 새 정부에서 다루어야 할 대북정책 핵심문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독자적 입장 대안, ② 대북정책과 외교안보분야에서의 민주주의 증진방안, 즉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법제도로 확대하는 방안, ③ 갈등하는 평화의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이 보고서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와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정책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함. 이 평가와 성찰의 결과로서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으로의 재전환이 불가피하며, '새로운 포용정책'으로의 진화와 혁신이 필요함
- 새로운 포용정책은 다음의 다섯 가지 지점에서 과거의 포용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어야 함. ①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의 수립 ② 통일과정의 불가역적 제도화로서의 남북연합의 목적의식적 추진 ③ 평화중견국가로서의 평화인권외교 독트린의 천명 ④ 시민참여 통일과정의 제도화와 외교안보 분야의 시민감시 강화 방안 마련 ⑤ 남남갈등 완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
- 또한 중단되거나 혹은 미 실현상태에 있는 남북공동 프로젝트의 재추진 역시 차기정부의 중요 과제라 판단하고, 남·북·러가스관 사업과 노무현정부의 미완의 프로젝트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2013년판으로 재추진할 수 있는 조건과 개선방안을 검토함

○ 연구성과

- 18대 대선 공약에 반영(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한반도 평화구상 실행, 남북러가스관 연결 등 북방경제 시대 개막)

주제 :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04일 - 09월 30일 (4개월)
- 연구분야 : 행안위, 교과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새로운 시민운동 모델과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를 제안함.
- 2004년 발표된 ‘한국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서 제시된 과제 중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법제화, 시민단체의 재정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제도 개선,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 및 시민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하는 시민참여센터 설립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제 과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한국 시민운동은 자율적 시민들의 에너지를 사회 변화와 혁신의 동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플랫폼 운동의 구상이 필요함.
- 새로운 시민운동 모델과 사례를 검토함. 새로운 시민운동 모델인 플랫폼으로서의 운동은 단순하고 핵심적인 규칙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자발적이고 유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온/오프 공간 및 계기를 형성함.
- 지역시민센터의 현황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시민참여센터의 모델을 제시함. 시민참여센터는 기존 지역시민센터의 기능을 포함하되, 특별히 온라인과 열린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시민운동 모델인 플랫폼으로서의 운동이 자생하고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함
- 민주시민교육활성화가 시민사회발전과 나아가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밝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제도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연구성과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민주당 입법발의

주제 :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 민주진보진영의 사회경제정책노선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07일 - 08월 31일 (3개월)
- 연구분야 : 기재위, 환노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경제정책 노선에 대한 민주진보진영의 대안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음. 한국적 현실에서 적실성이 있으며 경제체제와 복지체제의 상호보완성을 확보한 통합적 사회경제정책의 구상이 필요함.

○ 연구내용

- 첫째, 경제민주화 담론과 복지국가 담론에서 제기된 양자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함. 둘째,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이 복지체제에 관해 가지는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어떻게 맞물려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따져봄. 셋째,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확대 간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추진전략을 논의함.
- 보수적 자유주의는 잔여적 복지 혹은 사회투자국가론과 결합 가능함. 진보적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적 경제민주화 담론은 보편적 복지와 결합할 수 있음. 최선의 대안은 진보적 자유주의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결합임
- 재벌독식 구조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양극화를 추동하고 복지국가 발달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임.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등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며 동시에 분배친화적 성장정책을 실시하여야 함
-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는 구체적인 개별 정책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함. 제1원칙은 양극화 극복 우선의 원칙, 제2원칙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원칙. 제3원칙은 정치적 지지 확대의 원칙임. 예를 들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제1단계로서 부가증세를 추진하고, 양극화 극복에서 일정한 성과를 낸 이후 제2단계로 보편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

○ 연구성과

-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추진 방향과 전략 제시
- 18대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정책 등)

주제 : 균형국가와 민주·분권국가 실천과제

연구기간 : 2012년 6월 23

연구분야 : 정치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균형국가(Balance State)’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치분야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연구내용

1. 왜 균형국가인가?
2. 시대정신과 기본틀, 그리고 지향성
3. 정치비전과 정책과제: 민주·분권국가

○ 연구성과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자의 지향해야할 국가상과 정치분야 비전과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선거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활용하였음

주제 : 4대강사업 부실공사 증명을 위한 수심측량

- 연구기간 : 2012년 06월 27일 - 10월 31일(4개월)
- 연구분야 : 국토해양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4대강 공사 낙동강 구간에 대한 수심측량을 수행하여 준설단면과 하천기본계획단면의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될 경우 4대강 부실공사의 문제 제기
- 이번조사를 통하여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음

○ 연구내용

- 현재 4대강사업 각 공구에서 어느 정도의 준설량 변화가 있었는지 2009년에 수립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당시 수립된 준설계획을 참고로 비교 검토함.
- 이를 위해 낙동강 하구~상주보 상류까지 전체 구간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함안보부터 상주보까지 8개 보를 중심으로 구간을 설정하여 기존 마스터플랜에서 수립한 준설량과 비교하였음
- 낙동강 준설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마스터플랜 계획 시보다 상당한 양의 준설량이 감소함. 이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인 용수확보, 홍수예방 등과 상반되는 결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획하였던 목적 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체류시간 증대로 인한 올해 여름의 대규모 녹조현상, 수질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었음. 특히 4대강 사업이 준공이 된 시점에도 지속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이번 연구에서는 모든 비교 자료가 확보된 3개 공구에 대해서 설계변경 및 재퇴적량을 산정하였지만, 전체 낙동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설계도면과 다르게 미준설로 인해 재퇴적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과다 공사비 및 공사관리부실로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 18대 대선 공약에 반영(4대강사업 국민검증단 구성, 하천정비 전면 재검토 등)
- 4대강사업 국정조사 및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

【별 첨32】

주제 : 2012년 프랑스 대선 평가

- 연구기간 : 2012년 6월 25일 - 7월 12일(18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프랑스 사회당의 승리 전략 벤치마킹
- 연구내용
 - 2012년 프랑스 대선 평가
- 연구성과
 - 연구원 저널 '사람과 정책' 수록

주제 : 사회비전과 정책과제 - 사람투자국가

- 연구기간 : 2012년 6월 30일
- 연구분야 : 사회일반(교육, 보육, 노동, 복지 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균형국가(Balance State)’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교육, 노동, 복지 등 제 사회분야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연구내용

1. 한국사회의 현주소
2. 사람투자국가의 원칙과 기본틀
3. 사회분야별 정책과제: 노동, 일자리, 보건의료, 복지, 보육, 교육 등

○ 연구성과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자의 지향해야할 국가상을 실현할 사회분야 비전과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선거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활용하였음

주제 : 한일정보보호협정 검토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일 - 7월 10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외교통상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도출
- 연구내용
 -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역사적 의미와 외교안보적 문제점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하여 각 의원실과 보좌진에 배포됨.

주제 : 국민공감 힐링공약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일 - 9월 30일(3개월)
- 연구분야 : 정치행정/경제/복지/노동/교육/통일외교안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끊긴 국민의 마음과 민주통합당을 이을 수 있는 공감의 다리를 찾아내는 것이 대선승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핵심임
 - 따라서 제 18대 대선에 대비하여 연구원 차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MB정권 하에서 상처받은 국민들을 힐링할 수 있는 정책공약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 정치행정/경제/복지/노동/교육/통일외교안보 각 분야별 국민공감 힐링공약을 개발
 - 1) 불안한 국민 일자리 치유
 - 2) 병들고 무너진 사회경제의 치유
 - 3) 막막한 내 생활의 치유
 - 4) 불안한 사회의 치유
 - 5) 국민 정치 불만의 치유
- 연구성과
 - 국민공감 힐링공약은 민주통합당 대선공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주제 : '국민공감 힐링정책' -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 연구기간 : 2012년 7월 01일 - 9월 30일(3개월)
- 연구분야 : 지식경제,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제18대 대선을 위한 '국민공감 힐링정책'을 통해 민생경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함
- 정책정당으로서 주요 민생정책 해법 제시를 통한 국민공감대 확산 및 지지층 확대

○ 연구내용

- 청년일자리 문제점과 대안
- 근로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
- 최저임금 현실화

○ 연구성과

- 제18대 대선을 위한 '국민공감 힐링정책'을 통해 정책정당의 위상 제고와 정책선거의 주도권 선점을 통해 여당과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공감정책', '힐링정책'을 제시했음

주제 : 2013년체제는 균형국가(Balance State)다 - 비전과 정책

- 연구기간 : 2012년 6월 23일
- 연구분야 : 종합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균형파괴사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미래 국가상을 제시하고 정책분야별 비전과 실천과제를 안하고자 함○ 연구내용<ol style="list-style-type: none">1. 왜 ‘균형국가’(Balance state)인가?2. 정치비전과 정책과제: 민주·분권국가3. 경제비전과 정책과제: 혁신·통합형 공정국가4. 사회비전과 정책과제: 사람투자국가5. 통일·외교비전과 정책과제: 평화촉진국가○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의 제18대대선 후보자의 국가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선거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주제 : 최저임금제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1일 - 7월 25일(14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저임금계층 일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 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최저임금 현황과 노사단체 입장
- 최저임금의 국제수준 평가
-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과정의 문제점

○ 연구성과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국제수준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저임금 해소와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여 의원 입법활동에 기초자료로 제시함

주제 : MB정부 실정과 민주당 공약비교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2일 - 7월 30일(0개월 18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MB정부의 실정에 대응하는 공약 존재여부 검토
- 연구내용
 - MB정부의 대표적 실정에 대응하는 당 공약 존재 검토 및 과제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보고 및 대선 공약 작성에 활용

주제 : 개성공단 현황 및 공약과제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5일 - 7월 30일(0개월 15일)
- 연구분야 : 외교통상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단 현황 및 개선 과제 도출○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단 발전의 지체 원인과 대응 정책 공약○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장 보고 및 대선공약 작성에 활용

주제 :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정책 카피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6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2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이 지향해야할 비전과 담론에 대한 카피, 그리고 정책과제에 대한 카피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1. 민주통합당의 비전 카피
2. 민주통합당의 핵심담론 카피
3. 정책 카피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당의 정책연구원 차원에서 비전과 담론, 그리고 정책에 대한 카피를 제안함으로써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제고하는데 기여코자 하였음

주제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일 - 2012년 7월 18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00년 직장과 지역 간의 조직통합을 거쳐 2003년 7월부터는 재정통합을 이뤘으나 아직까지 보험료 부과체계는 2원화
 - 2원화체계하의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점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 건강보험료의 '소득'범위의 재확인
 -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폭 축소 제언
 - 법규정 상의 노사절반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 재인식
 - 사업주 부담의 상한액 철폐방법
- 연구성과
 - 이슈페이퍼 2012-2호로 홈페이지 발표

주제 :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황공포

□ 연구기간 : 2012년 7월 18일 - 8월 1일(15일)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MB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의 원인과 대응방안 연구

- 연구내용
 - 공급자주도형 주택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구조로의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
 - 가계부채의 핵심은 신용과 금융의 위기에서 양산된 ‘하우스푸어’

- 연구성과
 -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바우처제도, 한계연체자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의 세액공제 확대, 주택매각이 가능한 계층에 대한 역모기지론 확대 및 임대주택전환 등을 통한 중산서민의 주거안정 도모가 시급한 정책적 대응방안

【별 첨44】

주제 : '안철수 현상 분석'

- 연구기간 : 2012년 7월 30일 - 8월 24일(26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철수 현상'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대응○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철수 현상 평가○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장 보고 및 연구원 토론

【별 첨45】

주제 : 민주당 직장조직 구축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7월 21일 - 8월 2일(0개월 13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민주당 현대화를 위한 조직 개혁 방안
- 연구내용
 - 각 국 당원조직 현황 및 법/제도적 검토
- 연구성과
 - 당대표/사무총장 보고 및 당 개혁 방안 구상에 활용

주제 : 세계금융위기의 정치적 함의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일 - 8월 17일(17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래권력의 태동기에 전개되고 있는 논쟁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 연구내용
 - 세계금융위기의 진단
 - 경제불황의 정치적 함의
 - 대안존쟁의 특징
 -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연구성과
 - 미국의 주택소유자 대부공사(HOLC)와 같은 조직 구성 필요
 - 기업집단법 제정의 필요성
 - 남북한 평화체제의 조속한 구축 필요

【별 첨47】

주제 : 경제민주화 헌법조항 검토

- 연구기간 : 2012년 8월 3일 - 8월 23일(0개월 20일)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근거 검토○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 조항의 변천 및 의미○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장 보고 및 대선공약 작성에 활용

주제 : 한국정치에 있어서 복지논쟁 - 쟁점과 전망

- 연구기간 : 2012년 8월 6일
- 연구분야 : 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정치권의 복지논쟁의 허와 실, 특히 쟁점을 점검하고 제18대 대선과정에서의 복지논쟁과 함께 정책선거를 전망해보고자 함

○ 연구내용

1. 한국사회의 시대정신 변화와 복지발전사
2. 한국사회에 있어서 복지담론의 확산배경
3. 한국사회의 스펙트럼과 복지논쟁
4.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보편적 복지: 쟁점과 방향
5. 유권자 투표행태 변화와 진보·개혁진영의 대응

○ 연구성과

본 연구는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로서 활용하였음

주제 : 금융의 공공성 확보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0일 - 9월 4일(24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MB정부는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세계적 조류에 역행하여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메가뱅크를 육성하고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적이고 위험한 금융활동을 조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선진 각국에서는 금융기관의 활동이 공공적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혹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합목적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혹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대안이 검토되어야 함
- 연구내용
 - 1)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 2) 국내 금융산업의 현주소
 - 3) MB정부의 금융정책 및 평가
 - 4) 금융공공성 관련 외국사례
 - 5) 금융공공성 확립을 위한 정책대안
- 연구성과
 - “금융의 공공성 확보방안”은 아슈브리핑 제6호로 발간되어 온라인으로 발송됨

주제: 국민공감 힐링공약 - 통일외교안보 분야 -

- 연구기간 : 2012년 8월 10일 - 9월 30일 (1개월20일)
- 연구분야 : 통일외교 및 국방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4.11총선 이전부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4.11 총선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대선 승리를 위한 통일외교안보 정책 개발
 -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맞는 대선 공약 개발을 위한 연구
- 연구내용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핵심정책 및 실천방안 제시
 -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및 북방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 및 실천방안 제시
 - 모병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정책 및 실천방안 제시
- 연구성과
 -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할 공약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소구력 있는 공약을 개발하는 데 기여

주제 : 국민공감 힐링정책. 정치·행정 분야

- 연구기간 : 2012년 8월 20일 - 8월 27일(8일)
- 연구분야 : 정치·행정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통합당 대선 매니페스토 정치·행정 공약 수립○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선 정치·행정 분야 공약○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니페스토 본부 제출

【별 첨52】

주제 : 권력구조 개편 검토

- 연구기간 : 2012년 8월 24일 - 8월 28일(0개월 5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권력구조 개편 공약 가능성 검토
- 연구내용
 - 한국 권력구조의 특성 및 개편 방향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보고 및 대선공약 작성에 활용

주제 : 당 현대화 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8월 25일 - 9월 2일(0개월 8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 현대화를 위한 개혁과제 도출
- 연구내용
 - 당 현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 및 법/제도 사항 검토
- 연구성과
 - 당대표 보고 및 당 개혁 방안 구상에 활용

【별 첨54】

주제 : 미국 민주당 대선 전략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9월 10일 - 9월 18일(10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민주당의 대선 전략 벤치마킹 ○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미국 민주당의 대선 전략 ○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슈브리핑 발간

주제 :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 연구기간 : 2012년 9월 25일 - 10월 5일(10일)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5.24 조치 등으로 남북경협이 축소·중단된 반면에 북중 경협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우리 대북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함
- 연구내용
 - 최근 급증하는 북중 경협의 현황 분석
 - 김정은 체제의 대외경제정책 및 북중 경협의 특징 분석
 - 북중 경협의 확대가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고찰
 - 위 연구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연구성과
 -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 및 정책과제를 도출

주제 : 전략적 투표와 단일화 전략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일 - 11월 29일(0개월 8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권단일화의 효과 분석 ○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적 투표 성향과 야권 단일화 효과에 대한 추가 심화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 ○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확보 및 기본 방향 수립

주제 : 정부조직개편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4일 - 10월 30일(26일)
- 연구분야 : 행정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수립○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평가, 개편안 검토○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재인 후보 캠프 국가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주제 : 5대문 매니페스토. 새로운 정치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5일 - 10월 19일(5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통합당 대선 매니페스토 정치 분야 공약 수립○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선 매니페스토 정치 분야 공약○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니페스토 본부 제출

주제 : 매니페스토자료집: 5大門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5일 - 11월 15일(1개월)
- 연구분야 : 정치/경제/복지/노동/통일외교안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시한 “5大門”에 대한 논리적 기초를 제공
 - “5大門”에 대한 정책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신뢰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형식으로 제공
- 연구내용
 - 정치/경제/복지/노동/통일외교안보 각 분야별 정책 내용을 매니페스토化
 - 1) 일자리 혁명
 - 2) 복지국가
 - 3) 경제민주화
 - 4) 새로운 정치
 - 5) 평화와 공존
- 연구성과
 - “5大門” 매니페스토는 일자리 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 분야의 정책공약을 매니페스토化 하였으나, 자료집으로 출간되지는 못하였음

주제 : 5大門 매니페스토 - 일자리 혁명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5일 - 11월 15일(1개월)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후보의 대선공약 5대문을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자료집 제작을 위한 연구 필요
- 매니페스토 공약을 통해 일자리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제고

○ 연구내용

- 현 정부의 일자리 공약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후보의 일자리 공약(약속) 제시
- 일자리 창출 실천방안과 정책 Q&A

○ 연구성과

- 현 정부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후보의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매니페스토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함
- 전 산업의 고른 일자리 창출 정책과 특히 공공부문과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타 후보와의 정책 차별성을 보였다는 언론의 평가가 있었음

주제 : 경제민주화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5일 - 11월 15일(1개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탐욕의 개혁방안 연구
- 연구내용
 - 재벌총수 일가의 탐욕 실상
 - 1%부자와 99% 서민 간의 양극화 심화 및 사회갈등 확대양상
 - 개혁대상으로서의 재벌독식
- 연구성과
 - 재벌개혁을 통한 시장경제 바로세우기
 - 골목상권 살리기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가계부채의 해결방안

주제: 매니페스토 자료집 5대문-통일외교분야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15일 - 11월 15일(1개월)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5대문에 해당하는 통일외교 분야의 주요 정책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 통일외교 분야 주요 현황을 분석하고 공약 및 실천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대선 공약의 기본틀을 마련

○ 연구내용

- 한반도 평화구상에 관한 현황 및 주요 공약
-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방안 및 Q&A 정리
- 남북경제연합에 관한 현황 및 주요 공약
- 남북경제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 및 Q&A 정리

○ 연구성과

- 정책위원회 및 미래캠프에서 분야별 대선 공약을 개발하는데 기본자료로서 활용되는데 기여

주제 : 문재인과 안철수의 정치개혁안 비교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24일 - 10월 29일(6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개혁에 대한 종합적 이해○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재인과 안철수의 정치개혁안 비교 및 검토의견○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장 보고

주제 : 제18대 대선 TV토론 전략 및 기조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29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에서의 민주통합당 후보의 승리를 견인하기 위하여 단일화는 물론 본선에서의 TV토론 전략과 기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1. 단일화 토론 : 전략과 기조
2. 단일화 토론 : 4대 쟁점 및 상호공방 포인트
3. 본선 토론 : 전략 및 기조
4. 본선 토론 : 5대 쟁점 상호공방 포인트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및 TV토론 관련 실무진들에게 보고하여 후보의 토론준비 및 실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주제 : 제18대 대선 문재인후보 정책Q&A 기초자료집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일

연구분야 : 종합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방송토론을 위한 정책분야별 정책Q&A 기초 학습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1. 정치 2. 통일·외교·안보 3. 경제·민생 4. 노동·일자리
5. 보육 6. 교육 7. 사회복지 8. 지역균형발전 9. 환경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단일화 및 법정토론회의 기초 학습자료 및 큐시트 맞춤형 토론자료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주제 : 제18대 대선 후보분석자료(비공개) - 문재인 후보

연구기간 : 2012년 11월 3일

연구분야 : 정무·정치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TV토론을 위한 준비자료로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무 및 정치분야에 대한 답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기본전략 및 전술
2. 주요 이슈 : 신상 및 정무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대선 TV토론의 답변을 위한 문재인 후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주제 : 제18대 대선 후보분석자료(비공개) - 박근혜 후보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3일
- 연구분야 : 정무·정치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TV토론을 위하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무 및 정치분야에 대한 기본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기본전략
2. 주요 이슈 : 신상 및 정무
3. 기타 이슈

※별첨자료 : 시기별 주요 행보 및 어록집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대선 TV토론의 답변을 위한 문재인 후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주제 : 제18대대선 문재인 후보 TV토론 학습자료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4일
- 연구분야 : 종합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의 TV토론을 위한 학습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정치분야	2. 외교·통일·안보분야
3. 경제·민생분야	4. 일자리·노동분야
5. 교육·보육분야	6. 사회복지분야
7. 농업·환경 등 기타분야	
○ 연구성과	
본 연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TV토론을 위한 학습자료로 활용하였음	

주제 : 정부위원회 정상화 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2일 - 11월 16일(6일)
- 연구분야 : 행정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기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상화 방안○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정부의 정부위원회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재인 후보 캠프 국가혁신특별위원회 보고

주제 : 매니페스토자료집: 서민가계살리기10대약속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5일 - 12월 5일(20일)

□ 연구분야 : 경제/복지/노동/교육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서민경제”를 살리기 정책공약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형식으로 제공○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복지/노동/교육 각 분야별 정책 내용을 매니페스토화- 1) 빚 걱정 없는 편안한 사회2) 청년에게 꿈의 일자리를!3) 살맛나는 중소기업4) 비정규직 1/2로 감축5) 전국민 주거복지 실현6) 무상보육으로 강한복지 실현7) 연간 의료비부담 1백만원 제한8) 반값 등록금으로 학비걱정 해소9) 정년연장으로 활기찬 중장년10)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호도○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경제 살리기 10대 약속”은 “서민경제대통령 매니페스토 10: 살림”(범학사) 이란 매니페스토 정책자료집으로 출간되었음

【별 첨 71】

주제 : 서민기계 살리기 10대 약속 - 청년에게 꿈의 일자리를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5일 - 12월 05일(20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8대 대선 후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매니페스토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매니페스토 자료집 제작과 홍보를 통해 유권자 공감 확산과 지지층 확대 제고

○ 연구내용

- 청년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 IT 및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세대융합형 일자리 창출 방안

○ 연구성과

- 후보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과 세대융합형 일자리 및 청년취업준비금 지급등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함께 고려한 정책으로 세대간 상부상조 일자리 창출이라는 여론과 언론 평가를 받았음
- 타 후보의 공약에 비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서 뛰어나다는 여론의 평가를 받음
- 입법과제 제시를 통해 적극적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했음

주제 : 서민기계 살리기 10대 약속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해소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5일 - 12월 05일(20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18대 대선 후보의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해소를 위한 매니페스토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매니페스토 자료집 제작과 홍보를 통해 유권자 공감 확산과 지지층 확대 제고

○ 연구내용

- 비정규직 규모 단계적 축소 방안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
-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방안
-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창출 방안

○ 연구성과

- 후보의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해소 정책은 타 후보의 공약에 비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서 뛰어나다는 여론과 언론의 평가를 받음
- 입법과제 제시를 통해 적극적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해소 방안을 마련했음

주제 : 빚 걱정 없는 편안한 사회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5일 - 12월 5일(20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안을 사전적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모색
- 연구내용
 -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의 조기 정상화 방안
 -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제·개정 방안
 -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개선방안
- 연구성과
 - 개인 채무회생 기간의 단축
 -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최소주거권 보장 입법화 방안
 - 변제능력 상실 취약계층의 악성채무고리 단절방안
 - 채무힐링제도, 이자율 상한제 도입 등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방안 등

주제 : 살맛나는 중소기업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5일 - 12월 5일(20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경제전반에 걸쳐 활력이 사라지고 소비가 급감하면서 자영업 위기가 가계부채 폭발 등 우리사회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자영업 활성화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소상공인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는 정부부처 신설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차단으로 중소기업자 활로 개척
 - 창업자부터 전문경영까지 단계별 지원방안 강구
 - 수익성이 낮은 업종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연구성과
 - 중소기업부 설치방안, 대형마트의 매출영향평가 의무화 및 진입 허가제도 도입, 금융세계상의 지원방안,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강화

주제 : 전국민 주거복지 실현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5일 - 12월 5일(20일)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월세 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방안 모색○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및 자가주택 간의 역할균형을 이룰 수 있는 주택시장의 정상화 방안- 획기적인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도시재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안 해소 및 공공성 중심,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청년주거, 실버주거, 여성주거, 응급주거 등 사각지대의 주거수요 지원○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임대주택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및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주택바우처 제도도입, 연간 2조원의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 주거복지사업을 사회보장수급권으로 명료화

주제 : 제18대 대선 후보분석자료(비공개) - 안철수 후보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7일

연구분야 : 정무·정치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야권후보 단일화 TV토론을 위하여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정무 및 정치분야에 대한 기본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기본전략 및 전술
2. 주요 이슈 : 신상 및 정무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대선 TV토론의 답변을 위한 문재인 후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주제 : 제18대대선 문재인후보 단일화 TV토론 - 정치·정무분야 학습자료(비공개)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7일
- 연구분야 : 정치·정무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에 대비하여 문재인·안철수 후보간 공방이 있을 수 있는 정무 및 정치분야 Q&A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정치쇄신
2. 성과와 한계 : 참여정부
3. 말바꾸기
4. 후보단일화
5. 기타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일화 토론을 위한 사전 학습자료로 활용함

주제 : 정부혁신 비전과 책임총리제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9일 - 11월 27일(9일)
- 연구분야 : 행정
- 연구방법 : 자체 문헌분석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기 정부의 정부개편안 수립○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혁신의 비전과 책임총리제 제도화 방안○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재인 후보 캠프 국가혁신특별위원회 보고

주제 : 제18대 대선 후보단일화 토론자료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21일
- 연구분야 : 종합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야권후보 단일화 토론을 위한 큐시트 맞춤형 토론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토론환경 : 토론개요 및 코론진행방식
2. 토론전략 및 기조 : 토론목표 및 기본전략, 토론운영전략
3. 후보단일화토론 :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정책Q&A 질의 답변안

○ 연구성과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야권후보 단일화 TV토론시 문재인 후보의 토론자료로 활용하였음

주제 : 제18대 대선 TV토론 정책예화 및 사례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28일
- 연구분야 : 종합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TV토론을 위한 정치 및 정책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그 예화와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정치 및 정무분야 예화 및 사례
- 통일·외교분야 예화 및 사례
- 경제분야 예화 및 사례
- 사회복지분야 예화 및 사례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TV토론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주제 : 제18대대선 제1차 법정토론자료 -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연구기간 : 2012년 11월 30일

연구분야 : 정치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법정토론을 위한 큐시트 맞춤형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토론개요
2. 토론기조
3. 후보별 전략
4. 토론쟁점
5. 큐시트 맞춤형 Q&A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토론자료로 학습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주제 : 매니페스토자료집: 국민의 미래를 살리는 '사람경제'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경제/복지/노동/교육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니페스토 자료집 2탄으로 국민들이 향후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정책공약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형식으로 제공○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복지/노동/교육/통일외교안보 각 분야별 정책 내용을 매니페스토화- 1) 총론: '사람경제'의 비전과 전략2) 3차 산업혁명과 탈원전·생태성장 에너지산업3) 사람중심의 농어업, 국민농어업시대 구현4)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5)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협력적 창조경제 구현6) 중소·중견기업 강국 건설7) '남북경제연합'과 '북방경제'시대 개막으로 제2의 경제도약 실현8)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미래를 살리는 사람경제”는 “미래 경제대통령 매니페스토 7: 일자리 경제”(범학사) 이란 매니페스토 정책자료집으로 출간되었음

주제 : 사람경제 - 남북경제연합과 북방경제시대 개막-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생활공약 제시
- 남북경제연합 등 국가경제 관련 당의 공약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우리당 공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

○ 연구내용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경협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공약 제시
- 남북경제연합과 북방경제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주요 공약을 소책자화하여 배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개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긍정적 효과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기여

주 제 : 매니페스토 자료집 '사람 경제 -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0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정보통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18대 대선 후보의 IT, 콘텐츠 산업 등 혁신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매니페스토 자료집 제작과 홍보를 통해 유권자 공감 확산과 지지층 확대 제고

○ 연구내용

- 혁신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 인터넷산업, 콘텐츠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방안
- 인터넷 환경 조성 and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구축

○ 연구성과

- 제2의 IT혁명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경제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는 여론과 언론의 평가가 있었음
- 전담부처 신설(가칭 정보통신미디어부)과 입법과제 제시를 통해 혁신경제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마련했음

주제 : 매니페스토 자료집 '사람 경제' - 과학기술 강국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0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과학기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8대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협력적 창조경제 구현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매니페스토 자료집 제작과 홍보를 통해 유권자 공감 확산과 지지층 확대 제고

○ 연구내용

- 과학기술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과학기술부' 부활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방안
-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자긍심 고취 방안

○ 연구성과

-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기획·조정기능의 부활과 R&D 예산 확대, 연구의 자율성 확대 등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방안을 제시했다는 여론과 언론의 평가가 있었음
- 전담부처 부활과 입법과제 제시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협력적 창조경제 구현 방안을 마련했음

주제 :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창조산업의 생태계 개선방안 및 자생적 창조산업 생태계 형성방안 모색
- 연구내용
 - 혁신경제를 통한 질적 성장기반 조성
 -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콘텐츠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 구축
- 연구성과
 -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망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방지 및 콘텐츠 개발자의 국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소프트웨어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 인터넷 융합기술 등 창조산업 일자리 창출, 상생광 융합의 ICT생태계 구축 등

주제 : 중소기업 강국 건설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일자리창출의 주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방안 모색
- 연구내용
 - 안정적 창업, 혁신적 성장, 글로벌 도약의 3단계 중소기업 지원전략 추진
 - 공동 R&D 개발기금을 2017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
 - 국가소유의 R&D성과를 중소기업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
 - 정부와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제품 구입 조달체계 보완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서 납품단가를 제대로 지급받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 연구성과
 - 중견기업 4천개 육성, 중소기업 신설로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 지역거점별 산학연 창조단지 구축 등

주제 :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행정안전·국토해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불균형이 복지와 삶의 질 불균형을 낳고, 이것이 다시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불균형의 악순환' 차단 방안 모색○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실상부한 분권국가 추진방안- 지역경제권별 교육-연구-생산-일자리 결합형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전국적인 '행복지역 공동체'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의 정상적 추진○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및 국회특위 설치, 지역소재 공공기관의 해당지역 졸업생 300%이상 채용 의무화,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사업본부 설치 등

주제 : 정부조직혁신안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일 - 12월 14일(1개월 14일)
- 연구분야 : 행정
- 연구방법 : 공동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차기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수립
- 연구내용
 - 정부조직개편 원칙, 평가, 개편안 종합
- 연구성과
 - 문재인 후보 캠프 국가혁신특별위원회 보고

주제 : 제18대대선 제2차 법정토론회 전략 및 핵심메시지 : 경제·복지분야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9일

□ 연구분야 : 경제 및 복지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법정토론을 위한 큐시트 맞춤형 참고자료로서, 토론과정에서의 전략과 핵심메시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토론전략 : 총론
2. 후보별 전략
3. 토론 이미지 및 주의사항
4. 토론진행방식
5. 핵심 메시지 및 워딩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토론자료로 학습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주제 : 제18대대선 제3차 법정토론회 전략 및 핵심메시지 : 교육·과학기술분야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16일
- 연구분야 : 교육 및 과학기술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법정토론을 위한 큐시트 맞춤형 참고자료로서, 토론과정에서의 전략과 핵심메시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1. 제2차 법정토론 평가
2. 전략 및 기조 : 총론
3. 후보별 토론전략 및 기조
4. 토론 이미지 및 주의사항
5. 토론진행방식
6. 핵심 메시지 및 워딩

○ 연구성과

본 연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토론자료로 학습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PART 4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

진보정의연구소
(진보정의당, 現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2			○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박사급: 1	자체고용: 1	
석사급: 3		
기 타: 2	외부파견:	
합 계: 6	합 계: 1	

「주」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149,613,060	22,950,683	0	172,563,743	93,555,784	79,007,959	

「주」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00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해당사항없음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0부.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붙임’ 별지에 작성합니다.

나. 토론회 등 개최(01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2012.12.21	강화도 마니곶통돼지	대선평가 및 2013년 사업계획	- 대선 패배 요인 - 2013년 사업계획 수립 - 2단계 창당 논의	

「주」 1. “개최명”에는 토론회, 심포지엄, 학술회의, 포럼, 세미나·공청회·진상조사·여론조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2. 국제적인 토론회, 컨퍼런스 등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 교육·연수활동(00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해당사항없음				

「주」 연구소 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 합니다.

라. 정책홍보(00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해당사항없음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00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해당사항없음					

「주」 1. “종류”는 연구논문, 토론회자료, 백서 등으로 기재합니다.

2. “발간방법”은 외부용역, 자체발간,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바. 그 밖의 주요활동(00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해당사항없음				

PART 5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

진 보 정 책 연 구 원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6 슬프빌딩10층			✓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박사급: 4	자체고용: 12	
석사급: 4		
기 타: 4	외부파견:	
합 계: 12	합 계: 12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768,988,000	60,362	163,514,401	932,562,763	712,912,549	219,650,214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1.1-3.31, 9.1-10.31	정무	정치제도 공약개발	자체	10P	
1.1-3.31, 9.1-10.31	정무	국회개혁 공약개발	자체	5P	
1.1-3.31, 9.1-10.31	정무	지방자치 공약개발	자체	10P	
10.25 - 11.10	통일국방	총선공약적정성 연구	자체	10P	
11.11 - 12.19	통일국방	민족통일기구 결성에 관한 연구	자체	30P	
1.2 - 1.4	외교	이란의 전쟁위기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자체	원고지10매	
1.14 - 1.17	외교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바라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	자체	원고지10매	
2.2 - 2.7	외교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설과 미국의 위선	자체	원고지9매	
3.23 - 3.27	외교	권력교체기에 개혁의 기로에 서 있는 중국	자체	원고지10매	
4.14 - 4.17	외교	BRICS는 달러지배와 미국패권을 종식시킬 것인가	자체	원고지10매	
4.28 - 5.1	외교	프랑스 대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함의	자체	원고지9매	
5.19 - 5.22	외교	미국의 MD 및 핵전략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	자체	원고지10매	
6.2 - 6.5	외교	미국의 아태지역 전력 증강 속에서의 미중관계와 한반도	자체	원고지10매	
6.23 - 6.26	외교	중동지역을 통해 본 우려되는 세계질서 재편과정	자체	원고지9매	
8.4 - 8.7	외교	좌파정권의 만개(滿開)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자체	원고지10매	
8.18 - 8.21	외교	동중국해의 파고(波高)와 우리의 독도	자체	원고지11매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8.25 - 8.28	외교	남아공 광산에서의 대참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체	원고지12매	
9.1 - 9.4	외교	이란에서 개최된 제16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자체	원고지9매	
12.15 - 12.20	외교	격랑을 예고하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새로운 체제 출범	자체	원고지10매	
1.1-3.31, 9.1-10.31	외교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구축 연구	자체	원고지15매	
1.1-3.31, 9.1-10.31	외교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중과의 관계연구	자체	원고지37매	
1.1-3.31, 9.1-10.31	외교	한러관계 및 한일관계 개선 및 정립 방안 연구	자체	원고지18매	
1.1-3.31, 9.1-10.31	외교	강대국 중심 세계질서 극복과 진보적 국제연대 실천을 위한 연구	자체	원고지32매	
1.1-3.31, 9.1-10.31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자체	원고지25매	
1.1-3.31, 9.1-10.31	공공부문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자체	원고지25매	
1.1-3.31, 9.1-10.31	공공부문	민간서비스 국공립화	자체	원고지25매	
1.1-3.31, 9.1-10.31	공공부문	기간산업 재공공화	자체	원고지25매	
1.1-3.31, 9.1-10.31	중소기업	원하청 초과이윤 공유제	자체	원고지35매	
1.1-3.31, 9.1-10.31	재벌개혁	계열분리 명령제	자체	원고지25매	
1.1-3.31, 9.1-10.31	재벌개혁	지주회사 요건강화	자체	원고지25매	
1.1-3.31, 9.1-10.31	재벌개혁	노동자 경영참가	자체	원고지35매	
1.1-3.31, 9.1-10.31	노동	특수고용 노동자 인정	자체	원고지20매	
1.1-3.31, 9.1-10.31	노동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자체	원고지25매	
1.1-3.31, 9.1-10.31	중소상인	재벌규제	자체	원고지25매	
1.1-3.31, 9.1-10.31	중소상인	상인보호	자체	원고지25매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1-3.31, 9.1-10.31	부동산	주거복지정책필요성	자체	원고지30매	
1.1-3.31, 9.1-10.31	부동산	정당별 주택정책비교	자체	원고지25매	
1.1-3.31, 9.1-10.31	부동산	공공임대주택확대방안	자체	원고지35매	
1.1-3.31, 9.1-10.31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제도개선방안	자체	원고지25매	
1.1-3.31, 9.1-10.31	부동산	홈리스	자체	원고지20매	
1.1-3.31, 9.1-10.31	부동산	주거기본권	자체	원고지25매	
1.1-3.31, 9.1-10.31	부동산	도시재생	자체	원고지25매	
1.1-3.31, 9.1-10.31	부동산	토지주택 공공성	자체	원고지25매	
1.1-3.31, 9.1-10.31	기획재정	부자증세 정책 연구	자체	10P	
1.1-3.31, 9.1-10.31	기획재정	조세형평성 강화방안 연구	자체	5P	
1.1-3.31, 9.1-10.31	기획재정	탈세근절방안 연구	자체	10P	
1.1-3.31, 9.1-10.31	기획재정	국가재정개혁방안 연구	자체	15P	
1.1-3.31, 9.1-10.31	환경노동	일-생활 양립	자체	원고지45매	
1.1-3.31, 9.1-10.31	환경노동	여성의 노동권 강화와 일자리 확대	자체	원고지45매	
1.1-3.31, 9.1-10.31	행정안전	여성의 대표성 증진 방안	자체	원고지25매	
1.1-3.31, 9.1-10.31	보건복지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제도 방안	자체	원고지50매	
1.1-3.31, 9.1-10.31	보건복지	장애인 등급제	자체	원고지50매	
1.1-3.31, 9.1-10.31	법제사법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자체	원고지40매	
1.1-3.31, 9.1-10.31	보건복지	진료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제도	자체	원고지45매	
1.1-3.31, 9.1-10.31	보건복지	공공 의료 제도	자체	원고지45매	
1.1-3.31, 9.1-10.31	보건복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제도	자체	원고지50매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1-3.31, 9.1-10.31	보건복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제도	자체	원고지25매	
1.1-3.31, 9.1-10.31	보건복지	총선공약적정성 연구	자체	10P	
1.1-3.31, 9.1-10.31	보건복지	보건복지 부문별 공약에 관한 연구	자체	30P	
1.1-3.31, 9.1-10.31	문화	문화예술 기본 권익 연구	자체	7P	
1.1-3.31, 9.1-10.31	문화	지역계층간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 연구	자체	7P	
1.1-3.31, 9.1-10.31	문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권리 보호 연구	자체	5P	
1.1-3.31, 9.1-10.31	문화	민족문화예술 발전 연구	자체	7P	
1.1-3.31, 9.1-10.31	언론·미디어·방송통신	표현의 자유 실현 연구	자체	5P	
1.1-3.31, 9.1-10.31	언론·미디어·방송통신	언론 미디어 공공성 강화 연구	자체	7P	
1.1-3.31, 9.1-10.31	언론·미디어·방송통신	언론 공공성 파괴 진상규명과 악법개정 연구	자체	7P	
1.1-3.31, 9.1-10.31	언론·미디어·방송통신	정보통신의 공공성 강화 연구	자체	5P	

나. 토론회 등 개최(49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토론회	01.16	의원회관	새로운 미래설계	'99%를 위한 꿈, 새로운 미래설계'를 위한 통합진보당 정책위 1차 토론회	
토론회	01.19	여성플라자	통합진보당의 핵심 정책과제	'주권이 바로 선 나라,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진보정책의 현장	
토론회	02.22	의원회관	19대 총선 정책토론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통합진보당의 분야별 공통 개혁과제	
토론회	05.09	국회도서관	철도 민영화	민영화, 민자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06.25	국회 본청	정당활동 보장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정당활동의 보장	
토론회	07.10	국회 본청	한일군사협정의문 제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10.15	도봉 숲속마을	18대 대선 핵심 정책의제	대선 정책의제 및 서민살리기 대책	
간담회	02.13	연구원	연구실무연수	연구원 통합에 따른 실무연수	
간담회	05.31	연구원	통합진보당 정책역량강화	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간담회	09.20	연구원	대선정책 기조와 방향	대선 정책기조와 방향, 의제 선정	
간담회	09.27	연구원	대선분야별기조	연구원 담당 분야별 공약 검토	
간담회	10.11	연구원	대선정책공약	대선 정책 공약 틀 및 부문 공약	
간담회	11.03	연구원	대선정책공약	대선 주요공약 및 분야별 공약 대안	
정책포럼	05.11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종횡무진 한국 경제의 현실 1	
정책포럼	05.18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종횡무진 한국 경제의 현실 2	
정책포럼	06.01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한국 경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	
정책포럼	06.08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한국 경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	
정책포럼	06.15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세계경제지표의 비밀 1	
정책포럼	06.29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세계경제지표의 비밀 2	
정책포럼	07.06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세계경제지표의 비밀 3	
정책포럼	07.02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국민연금 개혁방안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정책포럼	07.13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의미	
정책포럼	07.20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산업연관표	
정책포럼	08.10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계량경제학의 기초 1	
정책포럼	08.17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계량경제학의 기초 2	
정책포럼	08.23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STATA	
정책포럼	08.31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빈곤 통계의 이해	
정책포럼	09.07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에너지 산업현황	
정책포럼	09.14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대중국 무역구조의 변화	
정책포럼	09.21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외환거래세(토빈세)	
정책포럼	10.12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자동차 철강 조선 산업 정책	
정책포럼	10.25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반도체 통신기기 산업 정책	
정책포럼	11.02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기간산업 재국유화의 의미와 과제	
정책포럼	12.21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공공부문 현황과 과제	
정책포럼	12.28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2013년 세계 경제 전망	
정책포럼	08.16	연구원	진보서울연구회	통합진보당 사태의 평가와 교훈	
정책포럼	09.26	연구원	진보서울연구회	서울 진보운동의 현황과 과제	
정책포럼	10.31	연구원	진보서울연구회	진보진영 간부교육 현황과 과제	
정책포럼	12.27	연구원	진보서울연구회	대선투쟁 평가와 진보적 대안	
여론조사	03.18	외주	단일화여론조사	야권연대 단일화 경선 관리위원회	
여론조사	11.07	외주	ARS여론조사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최병승 법안0	
여론조사	11.19	외주	전화면접여론조사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환경	
여론조사	11.20	외주	FGI 조사	대선 타켓그룹 심층 조사	
여론조사	11.24	외주	ARS여론조사	문-안 단일화이후 선거환경 변화	
여론조사	12.01	외주	ARS여론조사	- 경남도지사 지지율 추이 분석 - 후보 단일화 여부 전략 마련	
여론조사	12.02	외주	전화면접여론조사	- 대선 후보 등록 후 선거환경 분석 - TV 토론회 준비 포지션 확립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여론조사	12.05	외주	ARS여론조사	1차 TV토론회 평가 여론조사	
여론조사	12.06	외주	패널 조사	- 대선 1차 토론회 전후 패널 조사 - 지지율 및 지지형태 변화 분석	
여론조사	12.11	외주	전화면접여론조사	- 대선 최종 관세 분석 - 후보 사퇴 전략 마련	

다. 교육·연수활동(27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월례강좌	01.22	연구원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성장비결	
월례강좌	02.25	연구원	재벌 대기업의 기술수준과 경쟁력	
월례강좌	03.24	연구원	각 정당 총선 공약 분석	
월례강좌	04.14	연구원	재벌 대기업 외국인 주주 성격	
월례강좌	05.19	연구원	부동산과 가계부채	
월례강좌	06.23	연구원	공적연금 현황과 전망	
월례강좌	07.21	연구원	조세개혁 전망	
월례강좌	09.22	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분석	
월례강좌	10.20	연구원	금융산업 현황과 전망	
월례강좌	12.22	연구원	산업정책 분석(조선산업)	
중앙당직자교육	05.02	연구원	통합진보당의 강령 해설	
울산지역당원교육	06.03	울산	통합진보당의 강령 해설	
경남지역당원교육	07.05	경남	통합진보당의 강령 해설	
당직자직무교육	10.10	연구원	정국현안 분석 및 필승전략	
지방당직자교육	02.10	경남도당	총선예비후보자학교 정책교육	
지방당직자교육	02.11	부산시당	총선예비후보자학교 정책교육	
지방당직자교육	02.18	대구시당	총선예비후보자학교 정책교육	
지방당직자교육	02.19	울산시당	총선예비후보자학교 정책교육	
지방당직자교육	02.25	광주시당	총선예비후보자학교 정책교육	
지방당직자교육	02.26	전남도당	총선예비후보자학교 정책교육	
지방당직자교육	03.04	전북도당	총선예비후보자학교 정책교육	
지방당직자교육	03.04	대전시당	총선예비후보자학교 정책교육	
지방당직자교육	03.10	충남도당	총선예비후보자학교 정책교육	
지방당직자교육	03.11	강원도당	총선예비후보자학교 정책교육	
지방당직자교육	03.18	연구원	수도권 총선예비후보자학교	
연구원 워크숍	06.07	국회연수원	통합진보당의 정책역량 강화방안	
선관위 주최 핵심당원교육	10.26~27	강원홍천	- 선거법 해설 - 정세와 당의 대선전략	

라. 정책홍보(98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2.1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	
02.1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금융 공공성 강화 6대 약속	
02.2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탈핵 에너지 3대 핵심 공약	
02.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MB정부 4년 평가, 4+1 정치	
02.2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조세재정 4대 핵심 공약	
02.2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믿음 가는 복지	
03.0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평화로운 한반도	
03.0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통합진보당 분야별 공약 해설집	
03.04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힘내라 청년	
03.0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일하는 여성의 시대	
03.0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03.0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	
03.1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	
03.1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보다 정의로운 사회 실현	
03.1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공교육만으로 대학가는 시스템	
03.1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한미 FTA 폐기	
03.1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생명력 넘치는 바다, 살기좋은 어촌	
03.1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03.2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집 걱정없는 주거복지 시대	
03.2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통합진보당 공약 요약 해설집	
03.22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03.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재벌 해체	
03.2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3.20)	
03.2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3.27)	
03.2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총선 정당 매니페스토 비교분석	
03.2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민생복지 12대 공약 질의 답변	
03.3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경실련 질의 답변	
03.3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남북관계, 색깔론 관련 상황인식과 대응논리	
03.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정당별 공약 비교	
03.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비정규연대 질의 답변	
03.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정책이슈>대한민국을 만든 불법사찰의 역사	
04.0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정책이슈>박정희 뽑치는 불법사찰	
04.0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민생 6대 공약	
04.02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4.0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정책이슈>불법사찰 못 덮는다	
04.0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정책이슈> MB의 말바꾸기 백태	
04.04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04.0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예비군제도 다단계 폐지	
04.0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어록 모음	
04.0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공약응용논리>공약점검, 이것이 민생이다	
04.1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04.1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세상을 밝히는 종교	
04.1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06.1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한미연합체제 변화가능성, 분석과 과제	
06.1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06.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정당활동 보장	
06.2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06.2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한일 군사협정, 비판과 대응	
06.2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2012년 프랑스 대선 총선 분석	
07.0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07.0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 기본계획의 문제점	
07.0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한일군사협정 체결시도를 통해본 문제점과 한 국외교전략 대응방안	
07.1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07.1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독일좌파당 분석	
07.1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07.24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07.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결과 발표 에 부처	
07.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군 가산점제 도입시도, 왜 멈추지 않는가	
08.1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통합진보당 강령해설집	
08.2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08.2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09.04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09.1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09.1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09.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10.0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10.1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10.1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1호 발간	
10.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0.3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10.3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2호 발간	
11.0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유럽재정위기와 해법에서 배운다	
11.0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서울형 어린이집 무엇이 문제인가	
11.0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전세대책 입법노력을 해야한다	
11.0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수능대신 자격고사로 대학가자	
11.0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2기 오마바정부는 한반도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11.0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양육수당의 전면화 무엇이 문제인가	
11.0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시진핑체제의 출범과 한국 외교	
11.1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전면적 정당명부제 도입없으면 정치개혁 없다	
11.12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한미FTA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11.14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냉전논리 답습하는 안 후보의 국방안보정책	
11.1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11.1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박근혜, 경제민주화 역진하다	
11.1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거짓말로 가득찬 박근혜 후보의 국정 비전	
11.2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 및 결의문에 대한 주요 입장	
11.2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11.22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통합진보당 대선 공약 해설집	
11.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재앙이 시작되었다	
11.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통합진보당 정책공약 100문 100답 자료	
11.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후보별 정책공약 비교표	
11.2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11.2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박근혜후보 공약비판 시리즈(1~11)	
12.0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투기성자본 규제를 인정한 IMF	
12.1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12.1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대선 통합진보당 과학기술정책	
12.1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일본 총선결과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과 지향	
12.2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12.2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 경제동향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7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3.03	자료집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분야별 공약 해설집	자체발간	100부/당내배포	
03.21	자료집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공약 요약 해설집	자체발간	1,000부/당내배포	
07.17	연구분석	독일 좌파당 분석	자체발간	인터넷 발간	
08.10	자료집	통합진보당 강령 해설 자료집	자체발간	1,000부/당내배포	
11.22	자료집	통합진보당 18대 대선 정책공약 해설집	자체발간	100부/당내배포	
11.23	자료집	통합진보당 정책공약 100문 100답 자료집	자체발간	인터넷 발간	
12.04	자료집	박근혜후보 공약비판	자체발간	50부/당내배포	

바. 그 밖의 주요활동(49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01.30	KBS	19대 총선 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참여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정책	선관위
02.24	MBC	19대 총선 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참여	각 당의 핵심 복지 정책과 그 실현방안	선관위
03.05	KBS	19대 총선 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참여	19대 국회의원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관위
04.03	MBC	19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1차 후보자토론회 참여	-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 - 한미FTA 쟁점과 해법 -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강화 방안	선관위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04.04	MBC	19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참여	-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 - 한미FTA 쟁점과 해법 - 경제 민주화 방안 -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선관위
04.09	KBS	19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 참여	- 경제 민주화 방안 -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선관위
07.18	MBC	정당정책토론회	제19대 국회, 각 정당의 경제 정책 방향	선관위
09.24	KBS	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참여	서민생활 안정 대책	선관위
10.31	MBC	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참여	재벌개혁, 경기침체, 비정규해 소	선관위
11.16	KBS	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참여	정치쇄신, 대북정책방향	선관위
12.04	MBC	제18대 대통령선거 1차 후보자토론회 참여	권력비리, 대북정책, 한반도외 교	선관위
12.10	KBS	제18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참여	경기침체,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선관위
03.16	프레스센터	19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토론회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교육 정 책	공선협-K CTA주관
10.29	참여연대	비례대표제 포럼 초청 토론회 참여	정당정치 쇄신 방안	초청토론
11.02	창원KBS	포커스 경남 초청 토론회 참여	경남 정책을 말하다	초청토론
11.16	외신기자클 럽	외신기자클럽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 참여	외교안보정책 전반	초청토론
12.02	OBS	OBS 초대석 참여	대선 전략과 정책	초청토론
12.03	OBS	OBS '이준한의 12시 세상조명' 참여	대선 전략과 정책	초청토론
11.19	정동극장	교육연대 초청 토론회 참여	대선 교육 공약	초청토론
11.21	국회	금융피해자공동행동 초청 토론회 참여	가계부채와 금융소외자	초청토론
12.05	민주노총	교수노조-학단협 초청 토론회 참여	비정규직 정리해고 대안	초청토론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2.06	민변	민변 노동위 초청 토론회 참여	대선, 노동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가	초청토론
12.06	국제통상연 구소	국제통상연구소 초청 토론회 참여	경제민주화와 통상 정책	초청토론
12.07	국회	한국자활복지학회 초청 토론회 참여	자활정책과 대안	초청토론
03.05	민주정책 연구원	야권연대 정책협의	범야권 공동정책합의문 초안 논 의	정책협약
03.10	국회본청	야권연대 정책협의	범야권 공동정책합의문 발표	정책협약
02.22~ 23	의원회관	시민사회연대회의-통합진보당	19대 총선 공동 정책 검토	정책협약
02.27	고대의료원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	보건의료 정책협약	정책협약
02.22	국회	전국여성농민회와 정책협약	여성농민 정책협약	정책협약
02.27	국회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정책협약	비정규직 정책협약	정책협약
02.28	마포 홈플러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와 정책협약	중소상인 정책협약	정책협약
02.29	국회	99%장애인중선거연대와 정책협약	장애인 정책협약	정책협약
03.05	국회	빈민 3단체와 정책협약	빈민 정책협약	정책협약
03.06	국회	민주노총과 정책협약	노동정책 총괄 협약	정책협약
03.07	이화여대	한대련, 한국청년연대와의 정책협약	청년학생 정책협약	정책협약
03.07	국회	전국여성연대와 정책협약	여성 정책협약	정책협약
03.12	국회	전농, 전여농과 정책협약	농업, 농민 정책협약	정책협약
03.13	국회	전국건설산업노조와 정책협약	건설일용노동 정책협약	정책협약
03.14	국회	민주택시연맹과 정책협약	택시 정책협약	정책협약
03.14	국회	양대노총 공공노조 공대위와 정책협약	공공성 강화 정책협약	정책협약
03.15	국회	서비스연맹과 정책협약	공공사회서비스 정책협약	정책협약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03.17	국회	공공운수노조와 정책협약	철도, 화물, 항공의 공공성 강화 정책협약	정책협약
03.21	국회	4대강 범대위와 정책협약	녹색 생태환경 정책협약	정책협약
03.22	국회	전국공무원노조와 정책협약	노조인정, 해고자복직 정책협약	정책협약
03.27	국회	전국언론노조와 정책협약	언론민주화, 공공성 정책협약	정책협약
03.28	국회	민주연합노조와 정책협약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협약	정책협약
03.30	국회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정책협약	무상의료 정책협약	정책협약
04.02	국회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정책협약	사회복지 정책협약	정책협약
04.05	국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와 정책협약	반값등록금 법제화 정책협약	정책협약

주제 : 정치제도 공약개발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정당과 투표 및 선거제도 등을 민주주의 발전에 좀 더 부합하도록 개선함.- 정당민주주의와 득표률에 따른 국회구성 방안 연구- 2012년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의 방안을 연구함.- 진성당원민주주의에 연동한 국고보조금 지원방안을 연구함.- 독일식 정당명부제도와 결선투표 도입방안을 연구함.○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국회개혁 공약개발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날치기와 몸싸움 근절방안을 연구함.
 - 형식화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개선방안을 연구함.
 - 예결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연구함.
- 연구내용
 - 직권상정을 폐지하고 법률안 조정제도를 도입함.
 -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와 감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함.
 - 예산안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예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하도록 함.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지방자치 공약 개발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
 - 풀뿌리민주주의를 진작시키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를 마련함.
- 연구내용
 -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유지하되 통폐합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함.
 -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의 요건을 완화하여 활성화하도록 함.
 -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대의기구적 성격을 강화함.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총선공약 적정성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10월 25일 - 11월 10일

□ 연구분야 : 통일국방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2년 4월 총선 때 제출되었던 통일국방관련 공약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함.

○ 연구내용

- 총선 공약의 대선 공약으로의 합당성 검토
- 대선 공약시 계승해야 할 총선 공약 선정
- 대선 공약에서 누락시켜야 할 총선 공약 선정

주제 : 민족통일기구 결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1일 - 12월 19일,
- 연구분야 : 통일국방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합제 방식과 낮은단계 연방제 방식의 공통성'에 기반하고 10.4 선언에 명시된 민족 공동 협력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민족통일기구'로서의 '6.15위원회'의 결성 필요성과 6.15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수립하고 이를 대선공약화함.
- 연구내용
 - 6.15위원회의 창설
 - 개성통일도시의 건립
 - 민족경제협력의 안정화 방안 제시
 - 6.15위원회 창설과 연동하여 사회문화 교류의 과제를 제시

주제 :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구축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외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의 발전과 번영, 한반도 평화구축, 세계 속 한국의 위상정립을 이루기 위한 평화담론, 책임과 기여담론, 소통과 통합의 담론 구축 연구
- 강대국 간 패권경합과 오랜 역사를 지녔고 냉전기 대립질서가 여전히 역사적 유산으로 남겨져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를 상생과 번영의 질서로 전환 연구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 연구내용

- 현존하는 6자회담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동북아비핵지대 실현 제시
-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신뢰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협력의 다자적 제도화 법제 구축방안 연구
- 동북아 체제구조 측면에서 평화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방안제시를 위한 연구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중과의 관계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외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동북아에서 대립과 협력의 불안정한 이중구조를 지속할 미중관계 속에서 고립과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MB식의 대미편중 외교정책 청산
- 한미관계 개선 및 북미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로서 중국과의 균형잡힌 다양한 협력기제 마련.

○ 연구내용

-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강조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실천방안 연구
- 미중 간 경쟁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담보하는 경제·정치·안보 관계의 발전을 위해 경제적 호혜, 정치적 선린, 안보적 협력의 3차원의 관계가 융합된 균형잡힌 대미정책과 대중정책 실현을 위한 연구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한러관계 및 한일관계 개선 및 정립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외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러관계 개선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의 연계뿐만 아니라 단절된 동북아 공간 복원 및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정치적 발전 및 경제적 이익도모 -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수립을 위한 전단계로 일본의 과거사책임에 대한 자발적인 책임표명과 사죄를 통해 교과서문제, 독도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모색 및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 비전 제시 ○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기구·사무국·전문가그룹으로 이루어진 ‘(가칭)남·북·러 철도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러간의 TKR-TSR 연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방안 제시 - 근시안적 대러외교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전략협력동반자관계로서의 대러관계 발전 방안 연구 - 일본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공식사과와 피해배상 요구방안 제시연구 - 일국가 차원을 넘어서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까지 포괄하는 연대를 통해 과거사 해결과 평화를 지향하는 동북아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 연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강대국 중심 세계질서 극복과 진보적 국제연대 실천을 위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외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강대국과 약소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공존하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질서의 구축을 위하여 협력적 국제관계를 촉매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연구내용

- 강대국 중심의 패권적·위계적 세계질서 극복
- 다양화되어 가는 아랍 국가들과 쌍무적, 동반자적 관계 수립
- 세계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미국 등 부국중심의 신자유주의 도그마에서 벗어나게 하고 개도국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도록 하기위한 연대방안 연구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보편적 공공서비스 보장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공공부문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편적 공공서비스 기능 확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과 공기업 민영화 폐해 지적하고 대안 모색○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공공부문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모색-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형으로 공공기관운영회법 개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권한 축소, 운영위원회 독립성 강화- 정부,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이 함께 공공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공공이사회 도입-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민간서비스 국공립화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공공부문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시설(위탁)들의 상당부분 공립화
- 연구내용
 -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민간시설이나 위탁 형태를 정부, 지자체가 매입하거나 직접 운영하도록 개선
 -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노동자, 간병요양노동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
- 연구성과
 -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안 발의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통신, 금융, 정유사 등 기간산업 재공공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공공부문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민영화된 공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없애고 공공서비스를 전 국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있도록 정부 역할을 강화
-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킨 기간산업은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

○ 연구내용

- KT 공기업화 특별법 재공공화를 통하여 독과점 통신가격, 과도한 외국인 배당금으로 인한 국부유출 등의 폐해 극복
-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킨 은행과 대기업을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기업 또는 국가투자회사(싱가폴 사례)로 운영하여 재정을 안정화하고 공공성을 강화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원하청 초과이윤 공유제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중소기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의 창출한 가치의 상당부분이 대기업에게 이전되어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을 극복-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함○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업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실시- 대기업의 목표이익 초과한 부분에 대해 원하청이 정한 배분규칙에 따라 납품업체 몫을 지급, 중소기업에 분배된 초과이익 중 50%를 인건비, 교육비 등으로 종업원들의 임금·후생복지에 사용하도록 함○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계열분리명령제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벌의 과도한 독점을 막는 사후조치가 필요- 금산분리, 문어발식 확장을 공정거래위를 통하여 억제함○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계열사, 과도한 독점으로 인한 계열사 확장 등에 대하여 계열분리를 명령할 수 있음○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금지법 입법발의-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지주회사 요건 강화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재벌 개혁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벌이 지주회사를 통하여 경제력 집중을 유지하는 것을 차단○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보유를 금지하여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제함(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재 40%이상에서 80%이상으로 상향조정(상장기업은 2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하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함○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노동자 경영참가와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한 이해당사자의 결정참가 제도가 필요함-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종업원지주제(우리사주조합 포함)의 적용 확대 및 민주적 운영- 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유럽식 노사공동결정법의 제정(노조추천인의 이사회 및 감사회 참가)○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사업주에 종속되어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보완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정-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자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노동시간단축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창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실현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 연구내용
 - 특별법으로 노사정 동수로 노동시간단축위원회와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사회적 노동시간단축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집행
 - 5인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주5일제 적용하고 모든 예외조항 삭제
 - 주 52시간, 월 200시간, 년 18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노동시간 상한지 도입
 - 하루 최소한 연속 11시간 휴식, 일주일에 최소 연속 35시간 휴식권 도입
 - 소득보전 기금 설치 등을 통하여 임금하락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 추진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대기업 골목상권진출 규제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중소기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로 인한 중소기업 생존권 위기진단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재벌기업규제방안을 모색함.
- 연구내용
 - 골목상권에 대기업지출 현황 및 이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 재벌규제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성과 그 대안 모색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사전조정협의제도 강화, 대형마트 입점허가제 도입 등의 분야에서 대안을 마련함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중소기업 보호 육성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중소기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행위 개선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영세상인 대상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지원, 임차상인에게 불리한 상가임대차제도 개선, 지역신용보증재단확대방안, 지역공동물류체계확립방안 등 상인생존권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대형점포 입점상인의 판매수수료인하 및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방안 제시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주거복지로 정책페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부동산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서민주거실태 및 주거복지로의 정책전환의 필요성
 - 주거복지정책 개요
- 연구내용
 - 정부의 주택정책 평가 및 열악한 서민주거실태 분석
 - 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과 해외 주택정책사례
 - 제도화가 필요한 주거복지정책영역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정당별 주택정책비교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부동산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각 정당의 주택정책내용을 분석하여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활용함
- 연구내용
 - 새누리당, 민주당의 대선, 총선정책을 비교 분석함.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서 활용

주제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예산마련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부동산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공공임대주택확대의 필요성과 적정규모
 - 예산마련방안
- 연구내용
 - 지역별, 가구규모별,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마련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방안
 -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로드맵제시
 - 국민주택기금, 국민연금 등 공정자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재원마련 방안연구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민간임대주택의 전월세제도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부동산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월세가격 폭등으로 인한 서민주거불안 해소- 민간임대주택 제도연구○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월세 가격 폭등 실태와 원인분석- 해외 민간임대주택제도 사례연구를 통해 적용가능한 전월세 제도개선안 마련- 전월세인상율상한제 등 제도개선안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쟁점분석 및 설득논리개발○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홈리스 주거지원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부동산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홈리스 실태분석 및 지원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서울역 홈리스 철거사태 등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홀대에 대한 문제제기
 - 기존 홈리스 주거지원제도의 한계
 - 주거-일자리-건강권 등 총체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확인, 주거지원제도 개선안 마련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주거기본권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부동산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주거기본권 확립의 필요성
 - 주거기본권 확립을 통한 주거복지정책전면화
- 연구내용
 - 주거기본권을 둘러싼 국제기구의 결정사항 분석 및 우리나라에서 이행정도
 - 주거기본권의 개념과 국내법제에서 반영된 정도 분석
 - 주거기본법,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 주거기본권 확립을 위한 제도법제화, 법률적 타당성 검토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문제와 해결방안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정된 법률의 한계를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 진보적 도시재생방안모색

○ 연구내용

- 개정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한계를 검토하고 일몰제 전면도입, 매몰비용해결방안, 주택및 상가 세입자 보상제도개선방안 마련
-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지역공동체유지,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이 보장되는 진보적 도시재생방안원칙을 마련하고 관련법률의 재정비방안을 모색함.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토지주택의 투기적 소유를 제한하고 토지주택공공성확립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부동산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토지주택의 소유 양극화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토지주택공공성이 관철되도록 정책대안을 모색함.

○ 연구내용

- 부동산 토지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제도로써 개발권공유제 도입가능성을 모색함.
-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소유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함.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부자증세 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강력한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재정 확보방안 연구
 -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 정책의 폐단 극복방안 연구
 - 2012년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 연구내용
 - 소득세(3억이상 50%세율 인상) 및 법인세(1000억 이상 200개 대기업 30% 세율 인상) 세율 인상을 통한 부자 증세 방안 제시
 -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부자 증세 방안 제시(금융과세, 상장주식과 생상품과세 등)
 -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보 방안 제시(소득세 인상으로 0.9조, 법인세 인상으로 14.76조, 종부세 정상과세로 1.57조, 금융과세 2.76조, 상장주식과생상품과세 10조 등)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조세형평성 강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불요불급하고 전환가능한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조세 형평성 확대방안 연구
-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의 과세강화를 통한 조세 형평성 강화방안 연구
- 부의 이전에 관한 상속 및 증여에 따른 과세강화를 통한 조세형평성 강화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조항은 원칙적으로 종료, 조세지출 항목이 의도하는 정책적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실현가능한 다른 재정사업이 있다면 재정사업으로 전환 등 비과세 감면 조치 마련
-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도 형평과세
-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합산과세
-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 적용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탈세근절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탈세근절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연구
 - 간이과세정비 방안 등을 통한 세원 투명화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차명거래 방지를 통한 지하경제 근절 방안 제시
 - 간이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 고액채납자 주변 특수관계인 자산 형성과정 추적을 통한 고액채납 근절
 - 국세청의 계좌열람권 도입 및 조세행정 투명성 확보를 통한 납세자 보호 확립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국가 재정 개혁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조세부담률 확대방안 및 국가재정 개혁 방안의 구체성 연구
- 연구내용
 - 부자증세에 기초하여 조세부담률 2017년까지 23.7% 달성으로 복지재정 2017년 185조 확보 방안 제시
 - 난개발 SOC사업 정비를 통해 정책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
 - 공기업 채무를 국가채무로 관리하고, 국가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 방안 마련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일-생활 양립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여성가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성평등한 일-생활 양립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연구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 연구내용
 - 일-생활에서 탈젠더화를 위한 남성근로자의 보육 참여 제도 : 파파육아휴직제 쿼터제, 영아휴가제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일자리 확대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여성의 노동권 강화 방안 연구
- 여성의 경제적 자립 증진 방안 연구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 연구내용

- 노동권 강화를 위해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참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증대 필요성 제시
- 사회서비스 일자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 관리 제도 도입 : 돌봄서비스법 제정 필요성 제시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여성의 대표성 증진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부문에서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연구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 연구내용

-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방안 제시
- 남녀동수제 도입 방향 제시
- 비례대표제를 50%로 확대 방안 제시
- 지역구 국회, 지방의회의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 30% 이상 공천 의무화와 공천기준 미비시 전 후보 등록 무효화 방안

○ 연구성과

-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안 발의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생활을 시설화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 연구-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자립 생활 보장을 위한 방안 제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연금과 수당 현실화 방안 제시-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장애인 등급제 폐지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과 현황 연구- 장애인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 체제 확충 방안 연구-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제시○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성소수자에 대한 완전한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제도 연구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 연구내용
 - 성소수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 정비 제시 : 군관련 법 정비
 - 모든 차별을 포괄하는 제도 제시 : 차별금지법 제정
 - 동성간 파트너십 인정 필요성 제시
- 연구성과
 - 차별금지법 입법발의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진료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진료비 걱정 없는 모두 건강한 사회 만들기 위한 방안 연구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 연구내용

- 보장성 90% 달성, 본인 부담상한제 100만원 제시
- 상병수당제도 도입 제시
-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수가제 개선 제도 제시 :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공공 의료제도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의 민영화를 공공화로 전환하는 방안 연구-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위한 법제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만들기와 국민주치의 제도 제시○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스템 연구-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필요성과 법제화 제시- 양육수당 폐지의 필요성과 아동수당 도입 제시- 사적 부담 제로인 어린이집 이용 제도 제시○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생애 주기별 사회서비스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보육 외 생애주기별 취약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연구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 연구내용

- 노인 모두에게 노후보장 부조제도 도입 제시
- 민간산후조리원을 대체할 시군구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제시
- 장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제시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실업자,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제시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총선공약 적정성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12일 - 11월 23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2년 4월 총선 때 제출되었던 보건복지관련 공약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함.
- 연구내용
 - 총선 공약의 대선 공약으로의 합당성 검토
 - 대선 공약시 계승해야 할 총선 공약 선정
 - 대선 공약에서 누락시켜야 할 총선 공약 선정
 - 대선 공약에서 첨가시켜야 할 공약 선정

주제 : 보건복지 부문별(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공약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11월 26일 - 12월 19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보건·복지 분야의 부문별 과제 중 대선 공약에 첨가 시켜야할 공약 연구·개발.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노후보장부조제도안과 장애인 복지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기, 보건의료 영역에서 공공의료 재원 개혁(국고지원 40% 확대 방안)안을 수립하여 이를 대선공약화함.

○ 연구내용

- 노인: 노후보장부조제도
-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기
- 보건의료: 공공의료 재원 개혁(국고지원 40% 확대 방안)

주제 : 문화예술 기본 권익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문화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기본 권익을 위해 공교육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동호회 방안 연구
 - 2012년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 연구내용
 - 공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교양 교육, 사교육비 절감, 문화예술을 통한 1인 1기.
 - 남녀노소 누구든지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술영역에 참여하고 생활체육에 참여.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지역·계층간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문화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농촌지역,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방안 연구
 - 지역마다 작은 문화예술 공간 만들기 방안 연구
 - 지역의 고유한 문화 찾기 위한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문화예술 보편권 차원에서 지역 계층간 문화예술 격차와 차별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노인층의 무료 문화예술 관람, 지자체 단위의 아마추어 예술 단체 설립
 - 주거 지역 내에 작은 도서관 설립, 작은 예술극장, 작은 미술관, 야외무대 등 마을 단위 동 단위의 작은 문화예술 시설 확대
 - 지역의 고유한 유형 무형의 문화재, 역사, 환경, 인물, 명칭 등의 자원을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되살리기 위해 각 지역에 역사 문화의 집을 구축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권리보호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문화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을 위한 제도 방안 연구
 - 전국에 예술가들의 창작 지원 공간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문화예술인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해결하여 창작 직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조건 구축을 위해 문화예산의 1%를 매년 문화예술인 복지에 투입
 - 문화예술인복지기금 설치
 - 계약직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마련
 - 기존의 시설들을 재활용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스튜디오 마련, 전국의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수립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민족문화예술 발전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문화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문화뉴딜로 민족문화예술 발전 방안 연구
 - 외국 소재 문화유산 환수 방안 연구
 - 남북 민족문화예술 교류의 확대·심화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민족적인 내용을 담은 예술작품 생산, 창작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예술작품 생산, 지역 수준의 아마츄어 극단, 오케스트라 창단 등 지원
 - 약탈된 문화재의 원상 회복, 무조건 반환을 원칙으로 삼은 문화재 환수 협상, 문화재 반환 기구 설치
 - 안정적인 남북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 교류 전담 기구 설치, 남북 문화재 공동 발굴 및 보존, 남북 문화예술 및 문화재 DB 구축, 외국 소재 문화재 환수 공동 추진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표현의 자유 실현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언론·미디어·방송통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 2012년 대통령 선거 정책 개발○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물을 위축시키는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법제도의 폐지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방안-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확대 방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인증과 정보 수집 최소화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방안- 방송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정치적, 개인적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언론 미디어 공공성 강화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언론·미디어·방송통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 다양성을 위해 위축되고 있는 신문 산업 지원 방안- 지역 방송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미디어 활성화 방안-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삼아 공영 방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제작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상파 방송 제작 자율성 확대 방안○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언론 공공성 파괴 진상규명과 악법개정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언론·미디어·방송통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언론 공공성 파괴 진상 규명과 언론 악법 개정 연구 ○ 연구내용-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 구현을 위한 법, 제도 장치 확보 방안- 잘못된 과거사 바로잡기와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방안- 방송 산업 전체를 과당 경쟁으로 몰고 갈 종편사업권의 전면적인 재검토- 방송사와 미디어렐사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미디어렐법 개정 방안 ○ 연구성과-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주제 : 정보통신의 공공성 강화 연구

- 연구기간 : 2012년 01월 01일 - 03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 연구분야 : 언론·미디어·방송통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보통신의 공공성 강화 연구
- 연구내용
 - 정보통신의 독과점 완화 및 보편적 접근 강화 방안
 - 통신사의 이익을 줄여 통신비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통신비 반값 인하 방안
 - 방통위 권력사유화를 차단하여 권력유착과 통신업계를 대변하는 조직에서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는 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
- 연구성과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반영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2013년 10월 일 인쇄

2013년 10월 일 발행

관 권
소 유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경기도 과천시 홍천말로 44

(02) 523-6482~3

인쇄처 : 성문기획(02)2272-1977

《비 매 품》